



기본 | 19-16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A Research on Encourag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Job Creation

임상연, 이진희, 권규상, 최정윤, 손경주, 송준환

기본 19-16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A Research on Encourag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Job Creation

임상연, 이진희, 권규상, 최정윤, 손경주, 송준환

■ 연구진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규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정윤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외부연구진

손경주 창신승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상임이사
송준환 야마구치국립대 교수

■ 연구심의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재윤 공주대학교 교수
김륜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태웅 국토교통부 사무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성과를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 및 지속성,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 2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는 사업유형, 지역특성, 창출 분야가 모두 상이
 - 공공 분야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전문 인력이 다수 창출되고 있으나 일자리의 양이 많지 않고,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 요구
 - 사회적경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취업·창업과정 이수 및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운영 확장
 - 지역산업 분야는 청년, 여성 등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나, 민간기업 고용창출은 중장기적으로 시간 소요 예상
- 3 사업단계별 일자리 창출 구조(흐름) 파악을 토대로 일자리 DB 구축 방법론 마련, 일자리 분야별 지원정책 차별화, 일자리 지표 구축 방안 도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 (일자리 구조 모니터링) 계획수립단계부터 창출 가능한 일자리 계획 마련 후, 운영관리단계 까지 정기적으로 일자리 구조 및 양과 질적 속성에 대한 정량·정성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 2 (일자리 유형별 정책 지원) 공공, 사회적경제, 민간산업 분야의 일자리 유형에 따른 정책지원 차별화를 통해 공공 분야의 일자리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계협력 사업 확대, 민간산업 분야의 민간활력 제고 및 외부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 3 (도시재생 일자리 지표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자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을 도시재생사업 성과평가 체계에 반영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당초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지역의 회복과 지역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공공·청년·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 심화
-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과 관리·운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 구축에도 기여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성과 및 지속성,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연구범위 및 방법

- 도시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속성 분석을 위해 도시재생 선도·일반·뉴딜 사업 지역 중 사례지 선정 후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공간적 범위: 전국 도시재생 선도, 일반, 뉴딜사업지역 213곳 및 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지역
 - 심층조사: 2013년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설문조사: 도시계획·재생 분야 전문가 50인,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취업자 235인 1:1면접 조사 및 전화 설문조사 병행
- 분석 자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보고서, 지자체 사업추진 현황자료 등 분석

2.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 일자리 특성

-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사업단계, 직·간접 일자리의 여부, 창출 분야 등에 따라 구분 가능
 - (사업단계별) 건설단계에서는 한시적 건설 관련 일자리, 직업훈련 시행 일자리가 있고, 사업추진·운영관리 단계에는 창업고용센터, 도시재생회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가, 마을안내자, 서포터즈 고용,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등
 - (일자리 속성별) 직접적 일자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일자리 등이며, 간접적 일자리는 시설의 개선에 따른 창업, 관광객 증가, 접근시간 단축, 물동량 증대 등이 유발하는 새로운 일자리
 - (창출 분야별) 공공, 사회적경제, 지역산업·민간 분야로 분류하여, 공공 분야는 도시재생 활동가 및 전문가 양성, 지역산업·민간 분야는 도시재생 관련 지역기업 창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는 마을기업, 지역재생회사 등

□ 도시재생과 양질의 일자리

-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사업단계, 직·간접 일자리의 여부, 창출 분야 등에 따라 구분 가능
 -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기업유치, 창업, 공동작업장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
-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는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필요한 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받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양질의 일자리”
 - OECD(2003)의 개념 정의와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도시재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와 가장 유사한 개념
 - 도시재생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건설단계의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 뿐 아니라 사업의 추진 및 운영·관리되는 단계에서 지역기반을 가진 주민들의 지속적 고용이 중요

3.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정책 현황

□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관련 정책 (2013년~2017년)

- 도시재생 선도·일반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대개 재정투입을 토대로 공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 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과정에서 재정 활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설 부문 일자리 이외에 민간 비즈니스, 특히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추진

□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정책 (2017년~현재)

-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선정 시 일자리 창출은 주요 목표 중 하나였으나 뉴딜 등장 이후 일자리 창출이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부각될 정도로 강조
-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기존의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사회적경제 조직을 강조하지만 청년과 창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매우 강조
-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이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담긴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과 기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책·제도화

□ 도시재생 일자리 성과관리 현황

-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지역이 계획단계 및 사업추진 초기단계로, 사업 초기단계의 일자리 창출 현황 파악만 가능한 상황
 - 일반지역·뉴딜사업지역의 경우 계획 수립 중이거나 사업 착수단계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현재까지의 공식자료로는 향후 예상되는 고용효과 등만 파악 가능한 한계가 존재
-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단기 일자리 및 계약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일자리의 특성에 주목하여 일자리의 양보다는 특성(지역주민 고용, 구도심지역의 재취업기회 확대, 취약계층 고용, 지역기반 경제조직 창업) 고려 필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절한 성과 평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피드백이 중앙정부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
-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은 정량적인 지표가 대부분으로 정성적인 지표가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한 일자리 성과 측정 필요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성이 있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직접적 일자리와 간접적 일자리 분석이 필요
- 일자리의 양적 증가현황 이외에, 청년 및 사회적경제 등 특정 분야의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연구 진행 중이나, 도시재생과 연계된 일자리 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적인 고용효과 분석 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는 분석을 위한 전제 필요
- 일자리의 질적 효과 분석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 역시 대부분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 밀착형 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개발이 필요
- 국제기구와 국내외 고용영향평가 지표들을 참고하여 국내 도시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여 사례조사에 활용 필요

□ 정책적 시사점

- 기존 도시재생에서의 일자리 정책은 쇠퇴지역의 경제적 활성화가 핵심목표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에 치중하는 특성
- 근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 일반근린형) 사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양적 일자리의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임
- 도시재생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의 정책목표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형별 성과관리 기준 차별화가 필요
- 도시재생 과정에서 대부분 재정의 직접 활용 혹은 보조를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낮음

- 도시재생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반시설 개보수나 공간조성을 위한 건설 분야의 한시적 일자리나 재정으로 직접고용하는 중간지원조직 등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유지불가능한 일자리 강조
- 재정 의존적인 일자리는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크고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자율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의 질 저하
-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부문 중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조직체계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고용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
- 도시재생 자체의 공공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적인 민간 조직형태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도시재생 뉴딜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요 대상으로 청년, 창출 방식으로 창업을 강조하면서 청년 이외의 중장년층이나 창업, 타 산업에 대한 관심은 부족
- 첨단산업 이외에 다양한 산업분야의 생태계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방안, 제조 혁신 중심의 창업 등 다양한 방식 일자리 창출 방안 고려 필요

표 1 |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황과 과제

현황		과제
양적 일자리에 치중하다보니 일자리 창출의 주요 사업유형이 경제기반형에 집중	⇒	주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의 일자리 양과 질의 검토기준을 달리하여, 사업 전유형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 필요
공공부문 및 재정의존적 일자리 강조	⇒	공공지원이 필요한 일자리와 지역자립형 일자리정책의 균형 필요
민간부문 조직형태의 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 부족	⇒	부처연계 및 지자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방안 필요
공간제공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	⇒	공간제공 이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연계 부족
주요 창출 분야(청년 등) 중심 일자리 강조	⇒	주요 분야 소외집단을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 처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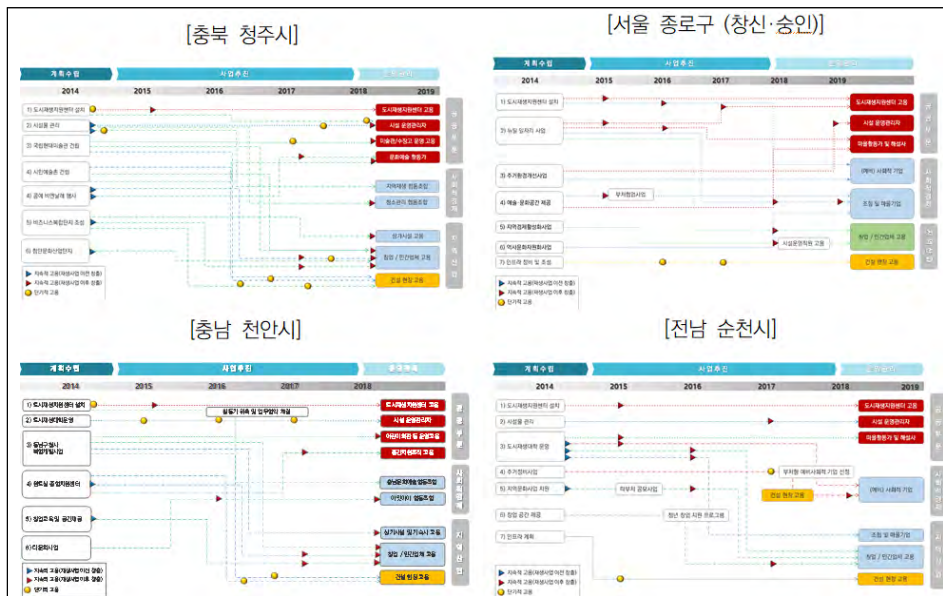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도시재생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 심층 사례조사

-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지역별 특성을 잘 활용하여 테마로 선정하여 일자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는 4개 지자체(충북 청주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를 사례조사 지역으로 최종 선정
- 4개 사례지역별로 일자리 창출 구조를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단계로 구분하여 공공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지역산업·민간분야를 대상으로 도식화

그림 1 | 사례지역별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구조



자료: 저자 작성.

- 4개 사례지의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일자리 창출 성과, 과제 및 한계 등을 파악

표 2 | 사례분석 결과 종합

사례지	일자리 창출 성과	과제 및 한계
충북 청주시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가시화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광역 차원에서의 산업정책과의 연계 등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서울 (창신·송인)	공공시설 관리, 시설 운영 등 위탁 운영을 통해 지속적 고용 창출 특성	- 사업 이후까지 지속되는 일자리의 양적 한계 -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인한 직접 고용의 한계 - 지속성 이외의 측면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 필요
충남 천안시	- 마중물사업으로 공간 제공, 부처협업으로 문화콘텐츠 등을 공급하여 직접일자리 580여개 창출 - 원도심 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연관 중간지원조직과의 접근성 확보	- 청년 창업의 경우 정부재정 투입에 따른 사업추진의 경직성으로 인해 창업의 성공가능성이 낮음 - 지속적인 컨설팅 및 관리요구가 있으나 이를 수행할 만한 중간지원조직의 여건이나 역량 부족
전남 순천시	지자체 위탁 및 공모사업 추진, 지자체 사업의 위탁 계약을 한 것이 큰 계기	재생사업이나 지자체 공모의 경우 지역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필요

자료: 저자 작성.

□ 취업자·전문가 설문조사

-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재생 일자리 속성 및 정책과제 파악
-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 과제를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의 비율이 37.4%로 가장 높으며,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 23.4%, ‘도시재생 관련 직업교육 훈련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16.2% 순임
-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 유형별 일자리 지원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유형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 과제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 도시재생 일자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취업자 모두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 의견임

□ 시사점

-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의 질은 일반적인 고용의 질 평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라는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는 일정 부분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일자리들이 창출되어 발전하고 있다고 파악

-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크게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두 유형간 일자리 창출 특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남
 - 근린재생형의 경우 정주환경의 개선과 지역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라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자리의 범위와 수준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 경제기반형은 가시적인 일자리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마중물 예산 지원 종료 이후 어느 정도 기간 필요

5. 해외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 미국 프라미스 존 사업

- 프라미스 존은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주체인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거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고유한 특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앙 정부의 예산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역 내 여러 기관과의 협업이 아직은 미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양한 단체와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프라미스 존 사업은 10년이라는 사업기간을 확정하고 시작하여 예산을 확보·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의 수는 적을 수 있으나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추진과 기업과 지역 주민의 연결, 지역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프라미스 존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 또는 향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다양한 직군에 걸쳐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또는 인턴 등 여러 형태
 - 미국 사례와 같이 단기 고용 이후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여 효과적인 재교육·재고용 시스템의 고민 필요

- 프라미스 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일부 매우 변화하고 활성화된 지역도 해당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재활성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지역으로 선정
- 활성화되었던 지역이 재쇠퇴하거나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보유한 지역의 경우 등 재생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 안배나 선정 기준 등을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

□ 일본 IT 기업을 활용한 지역재생

- 일본 사례는 인구 소멸 문제를 직면한 지방도시에서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IT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을 재생한 사례
-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역량 강화와 민간 전문가 위촉 및 권한 위임이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
 - 일본 니치난시 사례와 같이 행정이나 마케팅 등 사업 추진 과정을 담당할 전문가가 일회성이 아닌 지역에 상시 거주하면서 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중요
- 지역 내 비영리단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지역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신뢰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협력을 통하여 단편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역의 경제 구조 고도화가 가능
- 산업 기반이 미흡한 지방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IT 전문 기업 유치에 성공
 - 기업의 이주로 인하여 상권이 활성화되고 음식점과 휴게시설 등이 증가하면서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음
- 일자리의 유형에 따라서도 일자리 정책을 구분하여야 함
 - 공공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분야의 일자리 현황과 성과, 과제가 모두 상이하므로 각 분야의 일자리 성격에 맞는 일자리 정책 지원 필요
 -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기술에의 집중 투자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방안 고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중 기술에의 투자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필요

- IT기업의 유치에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와 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주자 및 신규 창업자와 기존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 필요

6.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방안

□ 기본 방향

- 중앙정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근린재생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집중
-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단계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적 속성이 모두 상이하어, 사업단계별로 개별 일자리들의 창출 구조와 흐름의 파악을 통하여 과제 도출

□ 일자리 유형별 지원방안

- (공공분야)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 다양한 도시재생 인재양성 사업 이후, 창출된 전문인력들이 어떤 분야에 투입되고 이직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일자리 매칭, 리쿠르팅에 활용
 - 공공부문 일자리의 고용 여건 개선, 재생교육을 통한 인재 이력 관리제도의 구체화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사업화 모델 발굴: CRC 모델 시범사업을 통하여 초기 조직화와 중후기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효과적인 프로그램 발굴
- (민간 분야) 지역산업 및 민간기업 유입방안 마련
 -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향후 유입될 인재들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문화, 교육, 처우 등 정주환경 조성 및 매력도 제고

-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관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 방안 마련

□ 도시재생 성과관리 방안

- 도시재생 일자리 지표 발굴 및 적용
 - 도시재생 평가체계에 일자리 지표 도입: “도시재생 일자리 지표(가칭)” 등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종합성과평가, 재생사업 등에 활용
 - 일자리 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 전략·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시 공공분야, 사회적경제분야, 민간분야로 구분하여 일자리의 유형과 시계열적인 구조를 감안한 일자리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모니터링에 활용
 - 일자리 통계 DB와 연계방안 마련: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고도화, 일자리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에서 구축하는 양질의 일자리 통계체계와 연계방안 마련
- 도시재생 일자리 관리체계 마련
 - 도시재생 일자리 모니터링 체계 마련: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일관된 일자리 관리 체계 및 지표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추적·조사하는 방식 적용
 - 정량·정성적 일자리 조사체계 마련: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모니터링 실시
 - 일자리 관련 부처·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타부처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현황 공유

□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 단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도시재생 일자리 계획과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일자리 목표를 수립하여 성과 관리
- 중·장기: 국비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

차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요 약	ii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4. 연구의 기대효과	11

제2장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1. 관련 이론 고찰	15
2. 일자리 관련 정책 현황	25
3. 도시재생 사업과 일자리	32
4. 시사점	39

제3장 도시재생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분석

1. 분석 개요	45
2. 사례지역 개요	55
3. 사례지역 일자리 창출 현황	66
4. 도시재생 일자리 속성 및 정책 과제	102
5. 시사점	122

제4장 해외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1. 해외사례 분석 개요	129
2. 미국 프라미스 존 사업	130
3. 일본 IT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재생 사례	139
4. 시사점	148

제5장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방안

1. 기본 방향	155
2. 일자리 유형별 지원방안	159
3. 도시재생 성과관리 방안	164
4.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169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주요 연구내용	17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80

참고문헌	182
SUMMARY	192
부 록	195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10
〈표 2-1〉 국제기구의 일자리의 질 관련 논의	17
〈표 2-1〉 고용영향평가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19
〈표 2-2〉 정책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의 질 관련 지표	20
〈표 2-3〉 ILO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아젠다와 지표	21
〈표 2-4〉 일자리위원회 발표 주요정책	26
〈표 2-5〉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 27	
〈표 2-6〉 도시재생 선도·일반·뉴딜사업에서 일자리 사업 흐름	30
〈표 2-7〉 2014년 대비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성과 조사 현황	36
〈표 2-8〉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설단계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유발 원단위	38
〈표 2-9〉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황과 과제	41
〈표 3-1〉 도시재생 일자리의 양과 질 분석틀	46
〈표 3-2〉 심층면담용 토픽 가이드	47
〈표 3-3〉 도시재생 선도·일반·뉴딜사업지역별 조사 여건 비교	48
〈표 3-4〉 주요 사업구상별 사례지 선정 결과	49
〈표 3-5〉 심층면담 진행 개요	50
〈표 3-6〉 고용자 대상 설문조사 표본 구성	51
〈표 3-7〉 재생사업 일자리 질 평가를 위한 질적 일자리 분석 방법론 검토	52
〈표 3-8〉 재생사업 일자리 속성 평가 기준	54
〈표 3-9〉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단위사업	56
〈표 3-10〉 서울시 창신·송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	59
〈표 3-11〉 천안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	61
〈표 3-12〉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	63
〈표 3-13〉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현황	66

〈표 3-14〉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단위사업별 창출 일자리	67
〈표 3-15〉 서울시 창신·송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현황	73
〈표 3-16〉 서울 창신·송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별 일자리 창출	74
〈표 3-17〉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개요	76
〈표 3-18〉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한 연간 고용 인력	78
〈표 3-19〉 천안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현황	82
〈표 3-20〉 천안시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입주단체 및 직원 현황	86
〈표 3-21〉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현황	92
〈표 3-22〉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별 창출 일자리(마중물 사업)	93
〈표 3-23〉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별 창출 일자리 (지자체·부처협업·민간사업)	94
〈표 3-24〉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98
〈표 3-25〉 일반인 응답자 특성	102
〈표 3-26〉 전문가 응답자 특성	114
〈표 3-27〉 사례분석 결과 종합	122
〈표 4-1〉 가미야마초 창생전략·인구비전의 기본 목표 및 주요 시책	144
〈표 5-1〉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유형별 세부지원 내용	161
〈표 5-2〉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평가 배점 및 주요 고려사항	164
〈표 6-1〉 주요 연구내용 요약	180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일자리상황판 홈페이지	25
〈그림 2-2〉 서울시 분야별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과제	31
〈그림 3-1〉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비 구성 (단위: 억 원)	57
〈그림 3-2〉 서울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구성 (단위: 억 원)	58
〈그림 3-3〉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구성	65
〈그림 3-4〉 사업단계 및 분야별 청주시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 구조	68
〈그림 3-5〉 사업단계 및 분야별 서울 창신·송인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 구조 ..	75
〈그림 3-6〉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단계별 고용 인력 변화	77
〈그림 3-7〉 사업단계 및 분야별 천안시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 구조	83
〈그림 3-8〉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지역과 문화산업진흥지구 구역 경계도 및 사업 비교 ..	89
〈그림 3-9〉 천안시 창업실패 지원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90
〈그림 3-10〉 사업단계 및 분야별 순천시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 구조	95
〈그림 3-11〉 현 업무를 위한 조건의 중요도	103
〈그림 3-12〉 현 근무 직장 채용 시 배려가 있는 조건	104
〈그림 3-13〉 이전 직장과의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 비교	105
〈그림 3-14〉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이유	106
〈그림 3-15〉 현재 근무 직장에 대한 만족도	107
〈그림 3-16〉 향후 3년 이내 이직 고려 여부	108
〈그림 3-17〉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	109
〈그림 3-18〉 취업 및 창업 관련 제공 프로그램 이용 경험 비교	110
〈그림 3-19〉 취업 및 창업 관련 제공 프로그램 도움 여부	111
〈그림 3-20〉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 과제	113
〈그림 3-21〉 자영업(창업) 활동을 위한 필요 자원	114

〈그림 3-22〉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중 일자리 창출 중요성	115
〈그림 3-23〉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많은 분야	116
〈그림 3-24〉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117
〈그림 3-25〉 사업유형별 중요 일자리 지원정책	118
〈그림 3-26〉 사업단계별 중요 일자리 지원정책	119
〈그림 3-27〉 분야별 중요 일자리 지원정책	121
〈그림 4-1〉 미국 프라미스 존 사업지역 22개소	132
〈그림 4-2〉 로스앤젤레스 사업지역 (프라미스 존 1기)	134
〈그림 4-3〉 서부 필라델피아 사업지역 (프라미스 존 1기)	136
〈그림 4-4〉 동부 샌안토니오 사업지역 (프라미스 존 1기)	137
〈그림 5-1〉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예상도	162



1

CHAPTER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9
- 4. 연구의 기대효과 | 11

서론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의 회복과 지역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공공·청년·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과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성과 및 지속성,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선도지역 13곳, 2016년 일반지역 33곳, 2017년과 2018년 각각 도시재생 뉴딜지역 68곳과 99곳의 지정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추진 중이며, 향후 사업지역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¹⁾ 당초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은 쇠퇴지역의 회복과 지역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공공·청년·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8a)을 발표하고,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s://www.city.go.kr/index.do#none> (2019년 10월 31일 검색)

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2017)”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을 통하여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집수리 등 지역 기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구조를 확립하자는 제안을 하였다(일자리위원회·관계 부처 합동 2017, 40).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방법론 마련, 효과예측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실제 사업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 및 고용의 질적 특성 및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사업의 추진과 관리운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필요하다. 향후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민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일자리의 특성 및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과 실증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성과 및 지속성,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 속성과 내용, 성과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였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 주민조직 등 다양한 섹터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공공성, 사회적 가치, 고용의 질 등의 규범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도시재생 선도, 일반, 뉴딜 사업지역 및 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13곳, 일반지역은 33곳, 뉴딜지역은 2017년 선정 68곳, 2018년 선정 99곳, 2019년 선정 98곳 등 총 311곳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2019년 현재까지 6년간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도시재생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의 관련성, 일자리 성과 분석을 위한 기준, 주요 정책 동향과 여건 변화, 해외 정책에서의 시사점 등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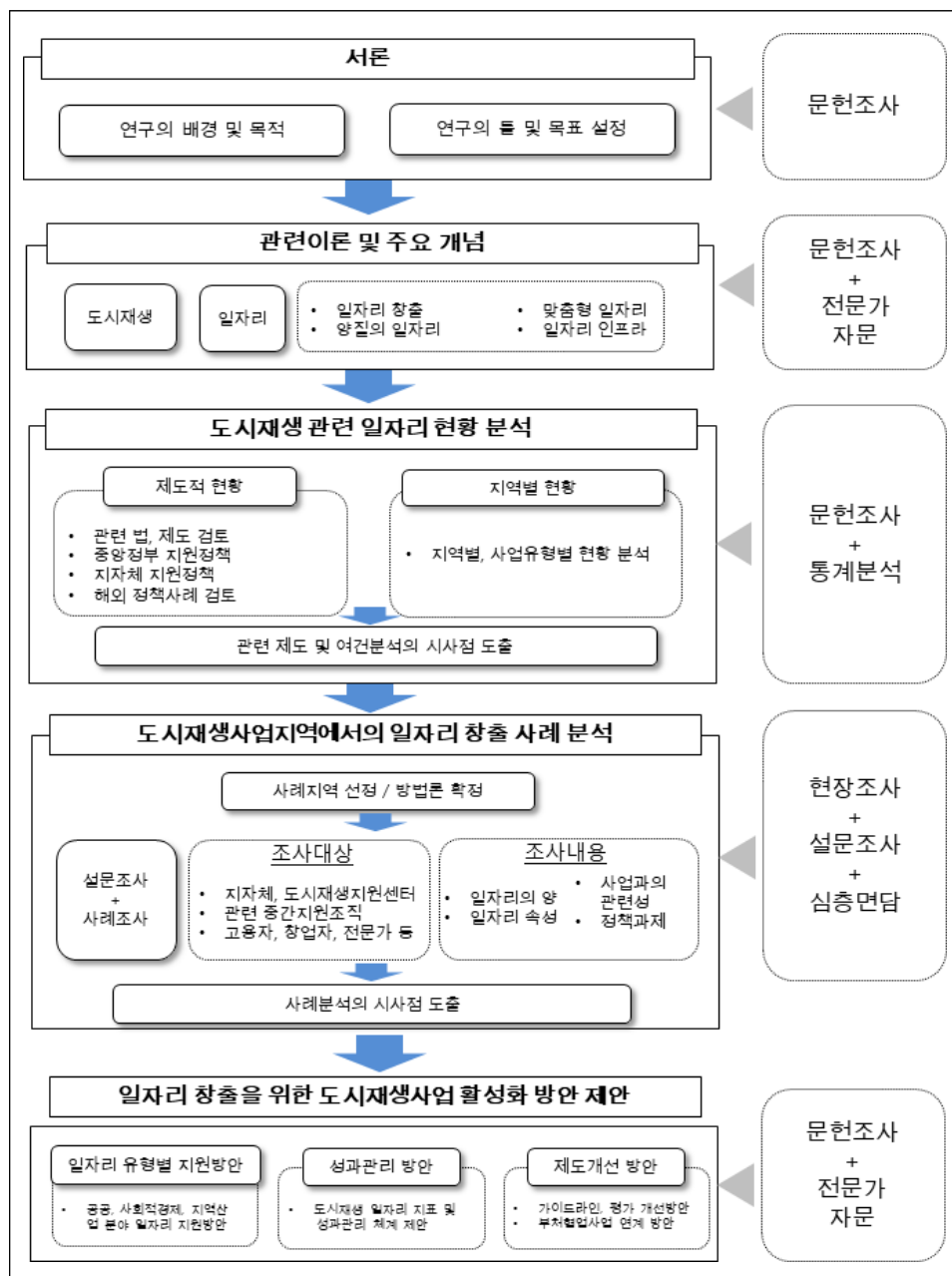
(2) 사례지역 현장조사

사례지역 현장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 및 설문지를 작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델파이, 지역 일자리 관계자 설문조사, 지자체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 대상 심층면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3)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방향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적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3) 주요 개념

(1)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도시의 경제적·물리적·사회적·환경적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노력(Roberts 2017, 18)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²⁾ 제정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 선도·일반·뉴딜사업 및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통칭하였다.

(2) 일자리 창출

일반적으로 “일자리”는 “고용”, “취업”과 개념적으로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³⁾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일자리는 비임금 활동을 포함하고, 고용은 비임금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임노동(paid-employed)만을 의미하지만, 취업은 임노동 외에도 자영업이나 농업 등 자가고용(self-employed)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의 일자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필요시 취업(또는 창업)까지 일자리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요컨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직접 창출되는 추가적인 일자리로써, ① 임금을 받는 취업, ② 자영업 창업이 해당된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주로 보기 어려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 건설 및 R&D 투자 등에 따른 2차적인 고용은 제외하였다.

2) 법적 의미를 살펴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을 의미함

3)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 의뢰서, 고용노동부(2019) 「2019년 재정(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해당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3)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등의 용어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OECD(2003)는 무조건적인 일자리의 증가보다 노동의 질과 근로조건을 함께 보장하는 “보다 많고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라는 개념을 적용하였고, EU(2001)는 성장, 경쟁,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일자리의 질(quality of work)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공통적인 조건으로 고용 기회, 적절한 임금, 고용 안정, 안전한 작업환경, 고용 평등 등이 있으나, 접근방식은 기관(ILO, EU, OECD 등)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일자리로서, 재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일자리의 질을 적절히 충족되는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4) 일자리 창출 효과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적 및 질적 효과를 종합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로 정의한다. 일자리 창출의 “직접 효과”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에서 사업, 정책, 제도 그리고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의미한다. 이외에 “간접효과”는 직접효과를 제외한 타 산업 및 국가경제 내에서 무기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산업연관(IO) 분석에 의한 산업간 전후방 연쇄효과에 의한 타 산업의 고용효과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의 직·간접적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되, 분석 범위에는 “간접효과”를 제외한 “직접 효과”만을 포함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관련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 성과·효과분석 연구와 도시재생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기존 선도·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태 및 성과 점검,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일자리 파급효과 분석 등이다.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청년,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성남 외(2017a, 2017b)는 11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의 특성과 직·간접적인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들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일자리 창출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직접적 참여로 창출된 고용 건수를 파악하고 있다.

김갑성 외(2017)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창신·송인지역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방법론을 개발하여 고용유발효과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진(2018)은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유발효과는 고용유발 인원(인)과 고용유발 경제가치(원)로 분석하고 있다.

권규상(2018)은 개별 입지 제조업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생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연구하였다.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중 인쇄업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생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역 및 향후 추진예정인 재생사업에서 창출되었거나 창출될 일 자리의 정량적인 수치 산정 및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양적 특성과 질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일자리 성과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도시재생 정책백서 I, II. · 연구자(년도): 박성남 외(2017a, 2017b) · 연구목적: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 사업에 대한 사업특성 및 성과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추진 실태 ·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추진 성과와 시사점
	2	· 과제명: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조사 분석 · 연구자(년도): 김갑성 외(2018) · 연구목적: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고용유발효과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현장답사 및 심층인터뷰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고용유발효과 분석 지표 및 방법론 정립 · 세운상가, 창신· 송인, 서울역 일대 고용유발효과 실증분석
	3	· 과제명: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자(년도): 남진 외(2018) · 연구목적: 도시재생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표 및 방법론 설정을 통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효과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도시재생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 정의 · 도시재생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 지 표 및 방법 개발 ·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효과 분석 및 일부 사례지역 분석
	4	· 과제명: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 생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권규상(2018) · 연구목적: 산업에 대한 고려를 바 탕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을 위하여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중 인쇄업 중심 으로 재생전략 제안	· 문헌연구 · 통계분석 및 지도화 · 현장답사 및 심층인터뷰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도시형 제조업과 집적지역 지원정책 동향 ·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의 공정특성 및 공 간활용방식 분석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제조업 집 적지역 재생전략 제안
본 연구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양적, 질적 성과 분석 및 정책 진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제안	· 문헌연구 · 관련이론 및 법제도 검토 · 설문조사 · 현장답사 및 면접조사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해외 사례 분석	· 공공사업(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 리 창출의 개념 및 성과분석 방법론 정립 · 도시재생정책 및 중앙·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 현황 및 한계 분석 · 도시재생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성 과 분석 및 대응과제 도출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적 속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을 통하여 바람직한 일자리의 창출과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정부보조를 통하여 추진하는 한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까지 고려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 및 유지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치우치지 않고 지자체가 뚜렷한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2) 학술적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는 기존 연구나 정책에서 단편적으로 고려되던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특성을 재정립하고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개념화 및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제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장을 확대하고 합의를 제공한다.



CHAPTER 2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 1. 관련 이론 고찰 | 15
- 2. 일자리 관련 정책 현황 | 25
- 3. 도시재생 사업과 일자리 | 32
- 4. 시사점 | 39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본 장에서는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간 관계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도시재생 분야 고유의 일자리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건설단계에서의 일용직·임시직 일자리 뿐 아니라 사업의 추진 및 운영·관리단계에서 지역기반을 가진 주민들의 지속적 고용까지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개 재정투입을 토대로 공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청년과 창업 중심의 일자리, 자립적 일자리 창출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반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현황 파악과 모니터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 관련 이론 고찰

1)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논의함에 있어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산업심리학, 사회학, 경제학계 등에서 다수 진행되었다(박은하 2011, 3).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일자리의 질을 직무만족도, 직업의 사회적 위세, 경제적 보상 등 미시적 차원 즉, 개인의 직무와 관련된 만족도 위주로 분석하여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일자리의 질(quality of work)에 대한 논의는 거시·중위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1999년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2001년 EU의 ‘일자리의 질(quality of job)’, 2003년 OECD의 ‘더 나은 일자리(better job)’ 등은 소득 수준,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고용평등, 직업훈련, 직무상 지위, 노사간 대화 등 다양한 기준에서 일자리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간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되어 있

던 일자리 논의를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관한 논의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국제기구들에서 제시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조건은 기관특성 및 분석목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고용 기회, 적절한 임금, 고용 안정, 안전한 작업환경, 고용 평등” 등을 공통적으로 추구한다. ILO는 “전 세계인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인류의 노동권에 기초해 질 좋은 일자리 구상을 제안하였다. OECD는 일자리의 질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 OECD 회원국에서 발견되는 지속적인 고실업과 고용의 불평등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회원국 내에서 고용의 차별을 경험하는 노동자 그룹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U 역시 OECD와 마찬가지로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관심을 가져, 사회적 배제가 노동시장의 분절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분열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OECD는 국가별 양질의 일자리 지표로 소득의 질(Earnings Quality), 노동시장 불안정성(Labor Market Insecurity), 근무 환경의 질(Quality of the Working Environment) 등 3가지 하위지표를 설정하여 지표별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가장 최신 분석자료인 2016년 양질의 일자리 지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에서 일자리의 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¹⁾

첫째, 양질의 일자리 지표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다소 어려운 일자리의 질을 정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3가지 하위지표를 설정하고 각각 측정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이 가질 수 있는 다면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셋째, 일자리의 질이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나타나는 차이라든지 경제 위기 전후에도 시계열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일자리의 질이 고정적인 개념이나 수치가 아니고 언제든지 개선되거나 저하될 수 있는 동적인 특성임을 보여주었다. 넷째, 일자리의 양과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시도하였다. 비록 횡단면적 상관관계 분석에 그쳤으나 일자리의 양과 질이 반드시 상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1)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employment/labour-stats/Job-quality-OECD.pdf> (2019년 10월 1일 검색)

표 2-1 | 국제기구의 일자리의 질 관련 논의

기관	주요 내용	총족 조건
ILO (1999)	• 괜찮은 일자리를 ①노동의 기회 ②자유로운 상태의 노동 ③ 생산적인 노동 ④평등한 노동 ⑤노동의 안정성 ⑥노동에서의 존엄성 등 6가지 차원에서 개념 정의 • 노동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모든 인류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방법	•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지표를 만들고 이를 특성별로 묶어 11개로 집단화(Anker et al., 2002) • ①고용기회 ②적절하지 않은 노동의 철폐 ③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 ④적정 노동시간 ⑤고용 안정성 ⑥일-가족 양립 ⑦고용에서의 공정한 대우 ⑧안전한 일자리 환경 ⑨사회 보장 ⑩작업장 및 사회적 수준의 대화 창구 ⑪괜찮은 노동에 대한 경제사회적 맥락 등
EU (2001)	• 유럽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주목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높은 질의 일자리(a high quality in work)' 제안 • '노동과 고용의 질 증진'이란 ①경력과 고용 보장 ②노동자의 건강한 삶 유지 및 증진 ③기술의 발전 ④일과 생활의 조화 등 4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것을 의미 • 노동하며 직업훈련을 제공받지 못하는 '장래성 없는 일자리(dead-end jobs)', 임금이 국가 전체 임금 중위값의 75% 미만이지만 고용안정성이 확보되고 직업훈련을 제공받는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low pay/productivity jobs)', 적절 수준의 임금과 생산성을 갖고 고용안정성, 직업훈련이나 진로 전망 중 한 가지라도 제공되는 '합리적 수준의 일자리(jobs of resonable quality)',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생산성을 갖고 고용안정성, 직업훈련, 진로전망 모두를 제공받는 일자리인 '양질의 일자리(jobs of good quality)' 등 4개 일자리 유형 구분	• 일자리 질의 총족요건을 13개로 제시 • ①고용 지위 ②소득 ③사회보장 ④노동자의 권리 ⑤건강 문제 ⑥위험 노출 ⑦노동 조직 ⑧자격 요건 ⑨훈련 ⑩교육 체계 ⑪경력 발달 ⑫노동/비노동 시간 ⑬사회적 인프라 등
OECD (2003)	• 노인, 여성, 한부모, 장애인, 이민자, 불리한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이 악화된 노동시장 속에서 불공평한 입장에 놓여있으며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 제안	• ①저임금과 임금불평등 ②직업 스트레스와 산재 발생 ③파트 타임과 임시고용 발생 ④고용 불안정 등 네 가지 측면이 고려된 일자리

자료: ILO. 1999; EU. 2001; OECD. 2003. 박은하. 2011: 5-8 인용 후 재가공.

국내의 경우, 학문적 맥락에서 고용의 질 연구는 초기단계로, 고용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고용의 질에 대해 개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이희찬 2017, 15-16). 방하남 외(2006)는 고용기회, 고용안정, 능력개발, 소득불평등, 근로조건, 고용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 참여발전, 사회보장 등 9개를, 배민근(2008)은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안전성, 근로환경, 전문성 제고, 소득분배, 기회평등 등 6개를, 그리고 박현정(2011)은 고용의 안전성과 윤리성, 수입과 복지

혜택, 근로조건과 일과 생활의 조화, 고용의 보장과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직장 내 관계 및 직무동기 등 7개 등을 고용의 질을 다룰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제시하였다. 일자리의 질에 대한 실증연구로 이재완 외(2018)는 주관적 만족에 초점을 맞추어 “나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준다”, “물질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준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나의 적성에 맞다”, “가족·친지·지인들로부터 인정받는다” 등의 문항을 적용하였다. 김범식(2014)은 보수 뿐 아니라 고용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만족하는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통해 서울시의 괜찮은 일자리 수준을 측정하였다.

요컨대, 국내외적으로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고용 기회, 적절한 임금, 고용 안정, 안전한 작업환경, 고용 평등 등의 공통적인 조건들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이 개인의 행복도, 조직의 업무성과와 긍정적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양적 일자리 확대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보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고용의 질

(1) 국내 고용의 질 분석 현황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 시 고용의 질 제고에 대해 4개의 항목에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개별 항목은 5단계의 평가 과정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고용의 질 제고 항목으로는 고용의 안정성, 임금수준, 교육과 훈련, 안전 예산 확보 분야로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고용정보원과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실태조사, 심층그룹 면담을 통해 분석된다. 정책고용영향평가 연구에서 지켜야 할 수준을 정리한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2018)에서는 정책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 현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 등의 추진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4).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의 질 관련 평가 항목은 모두 6개이며, 모두 15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 등 추진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개별 지표의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좌담회나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용의 질을 추정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는 7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7개 지표를 활용하여 고용의 질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 | 고용영향평가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분 류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평가 및 권고의 내용				
		1단계 ¹⁾	2단계 ²⁾	3단계 ³⁾	4단계 ⁴⁾	5단계 ⁵⁾
고용 확대	내국인 고용	○	○	○	△	△
	미취업자 우선 고용	○	○	○	○	-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사업일정, 사업비 책정방식)	-	○	○	-	-
	고용 소외계층의 고용(청년, 여성, 고령)	○	○	○	○	○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	○	○	○	○
고용의 질 제고	직접고용의 안정성 (고용계약 형태와 사업 후의 일시적 실업)	○	○	○	○	○
	임금수준 (유사 (민간) 사업에서의 기능별 임금수준 비교)	○	○	○	○	○
	직접고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	○	○	○	-	○
	근로 안전 예산확보	-	○	○	○	○
인력 수급	노동시장 교란방지(타 사업장 고용의 교란)	○	○	○	-	-
	교육훈련을 통한 수급	-	○	○	○	○
고용의 지속가능성(사업, 정책, 법, 제도 등이 시행(완료)된 이후에 정부의 지원 없이 고용이 지속되는 수준)		○	○	○	○	△
평가대상의 특수성		○	○	○	○	△

주1: 평가 방식 및 내용

- 1) 현 고용시장 하에서 고용 가능성 : 세부 고용시장 상황 파악 및 해당 사업의 추진 시 발생될 고용의 양적·질적 형태 전망
- 2) 기 수립된 고용촉진 : 방안 점검사업 계획서에서 제시한 고용시장 현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세부 계획안 평가
- 3) 새로운 고용촉진 방안 : 마련선행단계 검토를 통해 주무부처에 제안 가능한 고용촉진방안 마련 및 권고
- 4) 고용촉진 목표치 설정 : 선행단계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발생할 추가적 고용효과 전망
- 5) 추가 예산 소요 추정 : 전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변화 전망

주2: ○, 적극적 고려; △, 최대한 고려; -, 해당사항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 2013: 34 <표 8>, 36 <표 9>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3 | 정책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의 질 관련 지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임금	명목임금 수준, 임금격차(p10/p50), 노동소득분배율
근로시간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
고용형태	정규비정규 비중, 파견·용역 비중
고용안정	근속년수, 1년 미만 근로기간 근로자 비중
성평등	여성고용현황(여성/관리자 비중), 임금격차
기타	산업안전, 사회보험, 일자리만족도, 직업훈련 등

자료: 고용노동부, 2018: 5 <표 1> 재인용.

(2) 고용의 질 지표

1999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양질(良質)의 일 자리를 뜻하는 ‘Decent Work(DW)’ 개념을 제시하였다. 양질의 일자리는 생산적이고 공정한 임금에 대한 기회, 안전한 작업 환경, 사회적 보호,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의사 표현과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참여에 대한 자유, 남녀의 구분 없는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²⁾(국제노동기구). 또한 국제노동기구는 양질의 일자리 개념의 11개 아젠다를 바탕으로 통계지표(주요지표, 추가지표, 후보지표)와 법 제도 관련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2) ILO 홈페이지 <https://www.ilo.org/global/topics/decent-work/lang-en/index.htm>
(2019년 3월 14일 검색)

표 2-4 | ILO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아젠다와 지표

아젠다	통계 지표		법제도 지표
고용 기회	주요 지표	고용률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완전 고용에 대한 정부의 약속 (Government commitment to full employment) 실업 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실업률 (Unemployment rate)	
		미고용, 미취학, 또는 교육훈련 중이지 않은 15-24세 사이 청년 비율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15-24 years)	
		비공식 고용 비율 (Informal employment rate)	
	추가 지표	노동 참여비율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15-24세 사이 청년실업률 (Youth unemployment rate, 15-24 years)	
		학력 수준에 따른 실업률 (Unemployment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고용상태에 따른 고용 (Employment by status in employment)	
		전체 고용 중 자영업과 가족종사자 비율 (Proportion of own-account workers and contributing family workers in total employment)	
		비농업부문 임금 고용 비율 (Share of wage employment in non-agricultural employment)	
	후보 지표	노동 저활용 (Labour underutilization)	
적정 수입과 생산적 일자리	주요 지표	고용 빈곤률 (Working poverty rate)	법정 최저 임금 (Statutory minimum wage)
		저임금1) 노동자 (Employees with low pay rate)	
	추가 지표	평균 시급 (Average hourly earnings by occupation group)	
		평균 실질 임금 (Average real wages)	
		중위 임금 비율로의 최저 임금 (Minimum wage as a percentage of median wage)	
		제조업 종사자 임금 지수(Manufacturing wage index)	
괜찮은 노동시간	주요 지표	1주 48시간 이상 과도한 작업시간 고용 (Employment in Excessive Working Time)	최대 작업 시간 (Maximum hours of work) 유급 연차 (Paid annual leave)
	추가 지표	주단위 고용 노동자 (Employment by weekly hours worked)	
		고용자의 평균 연간 고용시간 (Average annual working time per employed person)	
		시간 관련 고용불안정 비율 (Time-related underemployment rate)	
	후보 지표	유급 연차 (Paid annual leave)	
일과 가정·개인 삶의 양립	후보 지표	비사회적, 비일상적 시간 (Asocial / unusual hours)	출산 휴가 (Maternity leave) 육아 휴가 (Parental leave)
		산모 보호 (Maternity protection)	

표 2-4 | ILO 양질의 일자리 아젠다와 지표 (계속)

아젠다	통계 지표		법제도 지표
퇴출되어야 할 일자리	주요 지표	아동노동 비율 (Child labour rate) 위험한 아동노동 비율 (Hazardous child labour rate)	아동노동 방지정책 (Child labour)
	추가 지표	위험한 노동보다 저질의 아동노동 비율 (Rate of worst forms of child labour other than hazardous work)	강제노동 방지정책 (Forced labour)
	추가 지표	강제노동 비율 (Forced labour rate) 귀환한 이민자의 강제노동 비율 (Forced labour rate among returned migrants)	
고용 안정성 및 안전성	주요 지표	불안정한 고용 비율 (Precarious employment rate)	수주일 이내 해고 통지 (Termination of employment)
	추가 지표	근로 기간 (Job tenure)	
	추가 지표	영세 노동자 비율 (Subsistence worker rate)	
	추가 지표	임시 노동자의 실제 소득 (Real earnings of casual workers)	
동일한 기회와 대우	주요 지표	성별 직종 분리 (Occupational segregation by sex) 고위직 경영진의 여성 참여 비율 (Female share of employment in senior and middle management)	동일한 기회와 대우 (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 남녀간 동일한 노동 가치에 대한 동일한 보수 (Equal remuneration of men and women for work of equal value)
	추가 지표	성별 임금 차이 (Gender wage gap)	
		비농업부문의 임금 고용의 여성 비율 (Share of women in wage employment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노동자 기본권 관련 지표 - 고용 및 직종 관련 차별 철폐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이주 노동자와 지방 노동자의 인종과 민족에 의한 차별 조치 (Measure for discrimination by race / ethnicity / of indigenous people / of (recent) migrant workers / of rural workers where relevant and available at the national level to be developed by the Office)	
	후보 지표	이주 노동자의 부서별, 직종별 참여 확산 조치 (Measure of dispersion for sectoral / occupational distribution of migrant workers)	
안전한 고용 환경	주요 지표	치명적 부상 빈도 (Occupational injury frequency rate, fatal)	산재보험 (Employment injury benefits) 안전과 건강 관련 근로감독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bour inspection)
	추가 지표	비치명적 부상 빈도 (Occupational injury frequency rate, nonfatal)	
		직업적 부상에 따른 시간 손실 (Time lost due to occupational injuries)	
		근로자 만 명당 근로감독관 비율 (Labour inspection)	
사회 보장	주요 지표	65세 이상 연금수혜자 비율 (Share of population above the statutory pensionable age benefiting from an old-age pension)	고령자 사회적 안전 또는 연금 수혜 (Old-age social security or pension benefits) 병환에 따른 노동 불가 (Incapacity for work due to sickness / sick leave)
		GDP대비 공공사회보장비 비율 (Public social security expenditure)	
	추가 지표	민간에서 지불하지 않는 건강보험 지출비용 (Healthcare expenditure not financed out of pocket by private households)	
		연금 가입자 비율 (Shar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tributing to a pension scheme)	

표 2-4 | ILO 양질의 일자리 아젠다와 지표 (계속)

아젠다	통계 지표		법제도 지표
사회 보장	후보 지표	건강보험 수혜자 비율 (Share of population covered by (basic) healthcare provision)	거동불가에 따른 노동 불가 (Incapacity for work due to invalidity)
		GDP대비 현금소득보전을 위한 공공지출 비율 (Public expenditure on needs based cash income support)	
		빈곤인구 대비 현금소득지원 수혜자 비율 (Beneficiaries of cash income support % of the poor)	
		병가 (Sick leave)	
노사간 사회적 대화	주요 지표	노동조합 설립 비율 (Trade union density rate)	단체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organize)
		고용자 조직 설립 비율 (Employers' organization density rate)	
		단체교섭 적용률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rate)	
노사간 사회적 대화	주요 지표	노동자 기본권 관련 지표 - 단체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단체교섭권 (Collective bargaining right) 3자간 협의 (Tripartite consultations)
	추가 지표	파업과 사업장 폐쇄에 따른 비노동 일수 (Days not worked due to strikes and lockouts)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경제·사회적 맥락	맥락 지표	비취학 아동 비율 (Children not in school)	노동기구 (Labour administration)
		HIV 보유 경제활동가능 인구비율 (Estimated percentage of working-age population who are HIV positive)	
		노동 생산성 - 고용자 대비 GDP (GDP per employed person, level and growth rate)	
		소득 불균형 (Income inequality (90:10 ratio))	
		인플레이션 비율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 Index, CPI))	
		경제활동 분기 고용 (Employment by branch of economic activity)	
		성인 교육 - 성인 문해력, 성인 중등교육 졸업률 (Adult literacy rate, adult secondary school graduation rate)	
		부가가치의 노동 비율 (Labour share of Gross Value Added)	

주: 1) 평균 시급의 2/3 이하

자료: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2013: 14-17. Table A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는 중립적이고 포괄적으로 고용의 질(quality of job)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7개 항목의 68개 지표로 구성된 진단체계를 개발하였다(UNECE, 2015: 22, 그림1). 해당 지표는 근로자의 측면에서 측정하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은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지표를 산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
- 안전과 윤리: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작업장 안전성, 공정한 대우
 - 소득과 혜택: 임금, 비급여 금전상 혜택
 - 노동시간과 일과 생활의 양립: 노동시간, 노동시간 배열, 노동과 비노동 삶의 균형
 - 고용 보장 및 사회 보장: 고용 보장, 사회적 보장
 - 사회적 대화
 - 기술 개발 및 훈련
 - 고용 관련 관계와 노동 동기: 직장 내 관계, 노동 동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개발하여 사회 발전을 측정하고 있으며, 11개 항목 중 일자리(Jobs) 부분은 다음의 4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³⁾. 더 나은 삶 지수가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수에 포함된 일자리 부분 지표 역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 직업 안정성: 전년도 고용자 중 다음 년도에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의 비율
- 개인 소득: 정규직 노동사의 연소득(월급 외 금전적 혜택 포함)
- 장기 실업률: 경제활동가능연령(15-64세) 중 실업자(현재 실업 상태이나 근로의 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비율로 장기 실업률은 고용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고용률: 경제활동가능연령(15-64세) 중 현재 고용 상태인 인구 비율

3)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jobs/> (2019년 3월 15일 검색)

2. 일자리 관련 정책 현황

1) 중앙부처 일자리 정책

(1) 일자리위원회 (2017년 ~)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경제’ 부문의 맨 앞에 국정전략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제시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7, 49).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4개 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일자리 정책 집중관리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성차별과 격차를 줄이며, 일자리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관련하여 일자리 관련 지표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개설하여 취업자수, 고용률 등 취업상황 관련 통계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과 관련된 지표를 업데이트 중이다.

그림 2-1 | 일자리상황판 홈페이지



자료: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홈페이지 <https://dashboard.jobs.go.kr> (2019년 3월 14일 검색)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5년 로드맵(2017. 10)”을 통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각 과제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여건변화에 따라 과제를 추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련 도시재생, 건설산업 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 15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018년 12월까지, 총9차례의 일자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23건의 주요정책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위원회에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하여 일자리 5년 로드맵, 청년일자리 대책과 연계한 주택·도시·건설·교통 등 국토교통 정책수단을 활용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청년 창업공간 마련, 예비사회적기업 확산,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국토교통부 2018e, 4).

표 2-5 | 일자리위원회 발표 주요정책

회 차	제 목
제2차 (2017.5.16.)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제3차 (2017.8.8.)	•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제4차 (2017.12.12.)	•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일자리통계 개선방안
제5차 (2018.3.15.)	• 청년일자리 대책 • 청년고용 촉진방안 •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
제6차 (2018.5.16.)	•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제7차 (2018.9.11.)	• 바이오헬스 일자리 창출계획 •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 • 지식재산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
제8차 (2018.10.4.)	•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제9차 (2018.12.14.)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

자료: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jobs.go.kr> (2019년 3월 14일 검색)

(2) 국토교통부(2018년 ~)

국토교통부는 2018년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목표를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① 일자리 기반 조성, ② 좋은 일자리 창출, ③ 신(新)산업 육성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중 도시재생은 ① 일자리 기반 조성 분야로 분류되어, 지역청년 창업공간 마련, 예비 사회적기업 확산,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추진과제별로 창출될 창업공간, 일자리, 교육훈련 등을 일자리의 양과 질의 관리 측면에서 실적검토와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표 2-6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분야	주요 내용	정책 목표치
도시재생 거버넌스 일자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채용	'22년까지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12,500명 양성(연 2,500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1,200개 창출
도시재생 창업 지원	- 도시재생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사업화 비용, 컨설팅, 네트워크 조성 등을 지원하여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모태펀드(중기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지역 내 경제조직(청년창업가,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검토	'22년까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250개를 지정·지원하고, 일자리 1,250개 창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터 새로이' 사업) 청년 건축가 기술인을 채용하는 지역 업체를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의 사업자로 지정하여 자생적인 회사로 육성 (소규모 재생사업) 지역주민·청년들이 점 단위 소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등 경제조직으로 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마을관리 협동조합) 단독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관리하는 협동조합 설립	'22년까지 터 새로이 사업자 100곳 지정, 소규모 재생사업 250곳,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 설립 추진 검토, 일자리 2,100개 창출

자료: 국토교통부, 2018e: 10-11 인용 후 재가공.

2) 중앙부처 도시재생 일자리 정책

(1)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관련 정책

도시재생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서 일자리 창출이 제시되어 있으나 일자리 창출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국토교통부, 2014)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도시재생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공모 평가기준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효과평가의 주요 항목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받았으나 그 자체가 강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도시의 산업 구조와 고용창출이 중요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기보다는 민간(자본) 참여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도시재생 선도·일반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대개 재정투입을 토대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도시재생 선도·일반사업 추진시기에는 공공 부문에서 재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건설부문 등 도시재생을 통한 정비 사업에서 직접 고용하는 한시적 일자리, 중장기적으로 재생사업에 활용할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예: 중간지원조직), 재정보조를 통해 민간 차원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재정투입을 통한 한시적 혹은 상시 고용이나 사회적 기업 이외의 민간 조직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정책의 방향 또한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직접적인 재정투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정책의 경우, 도시재생특별법 내 사업시행 주체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시재생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경우 법적 정의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있으나 실제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었으며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비 지원 및 금융·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북구 동네목수의 경우 2011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 당선을 통해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 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과정에서 재정 활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

생하는 건설 부문 일자리 이외에 민간 비즈니스, 특히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해당 문헌들, 등). 2014년 주택도시보증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에 도시계정을 신설하고 다양한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출자 및 융자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단, 2019년 현재 실제 기금이 투자된 곳은 청주시와 천안시 등 2개 사업 뿐이다. 또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추진 시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2)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정책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선정 시 일자리 창출은 주요 목표 중 하나였으나 뉴딜 등장 이후 일자리 창출이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부각될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기존의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사회적경제조직을 강조하지만 청년과 창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신규로 도입된 ‘더 새로이 사업’은 지역 건축사 및 건축 관련 기업들의 창업을 통해 지역 내 노후건축물 개선사업을 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혁신 및 창업 공간 조성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공공임대상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등 일과 주거를 결합한 각종 공간을 창출하고 선도적인 청년 스타트업을 멘토로 활용하여 창업 기획 및 컨설팅 등 각종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이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국토교통부, 2018e)에 담긴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과 기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책·제도화하고 있다. 우선 2019년부터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제도는 구도심을 대상으로 혁신 및 창업 공간을 지구 형태로 결집시켜 기업 생애 전주기적 지원을 추구하는 제도로, ‘도시재생인정제도’, ‘총괄사업관리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처분 유연화’, ‘혁신지구 관련 각종 규제완화 조치’ 등을 포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두 번째로 2018년부터 추진된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인증추천제도는 국토 교통 분야에 특화된 기업, 특히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기업

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조건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국토교통부 차원의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하여 2018년 52개 기업이 국토교통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제도는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건축, 도시공학 등 관련 분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턴으로 채용하여 도시재생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로 육성하고 이후 지역 및 도시재생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는 제도이다. 2019년 7월 기준 260명의 청년인턴이 선발되어 앞으로 전국 지자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120여 곳에 배치되어 지역자원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 홍보, 자유프로젝트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재생 모태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 임팩트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의 청년 스타트업에 지원하여 창업 및 혁신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표 2-7 | 도시재생 선도·일반·뉴딜사업에서 일자리 사업 흐름

구분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목표	도시재생 활성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제시	도시재생의 주요 목표 중에서도 우선순위 강조
사업유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정책 -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정책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 -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추천제도 -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제도 -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일자리창출 주요 분야	- 건설단계의 한시적 일자리 - 중간지원조직 고용 일자리 - 사회적기업 창업 등	- 사업추진 및 운영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 - 청년 취업·창업 등

자료: 저자 작성.

3) 지자체 도시재생 일자리 정책

지역형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는 도시재생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제를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 순환경제로 2025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서울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하였다(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2018).⁴⁾ 이를 위하여 공공분야, 지역산업·경제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등 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실행전략 수립 및 시행 예정이다.

그림 2-2 | 서울시 분야별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과제

공공 분야	지역산업·경제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도시 재생사업 설계 ◦ 지역별 거점시설 설치·운영 ◦ 도시재생 활동가/전문관 양성	◦ 스마트시티, 4차산업 혁명 등 지역산업 육성 재창조 일자리 창출 ◦ 유희공간 활용 청년 스타트업 지원 ◦ 골목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 마을기업(CRC) 일자리 창출 ◦ 마을 공동체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명소화 관광 일자리 창출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2018. 주요업무 보고 자료.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6-25.

부산시는 “참여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목표로, 4대 전략 16개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4번째 전략 “상생협력 일자리로 사회적 가치 실현”, 14번 과제 “돌봄·문화·도시재생·서비스분야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제안하였다. 해당과제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신라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도시재생 일자리 프로젝트-마을이 일자리다” 사업(2018)을 추진 중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마을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마을 자원 상품화 마케팅 프로그램’,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일자

4)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7/03/58dcc6e9d6bce3.12266123.pdf>

(2019년 3월 15일 검색)

리창출 프로그램’, 구인구직 상담 및 도시재생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마을일자리 발굴지원 프로그램’ 등이 진행 중이다.

3. 도시재생 사업과 일자리

1) 도시재생 일자리의 성격

주로 쇠퇴한 기성시가지에는 정규직이나 전문직보다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서민계층이 주로 정주기반을 두고 있어 일자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해 단기간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일정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별다른 사전준비 없이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이왕건 2009, 41).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국책사업을 통한 일자리가 더욱 촉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개발사업의 효과가 침체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주민들의 고용 지원, 개발사업과 주민들의 일자리 연결 등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서종균 2009, 21). 쇠퇴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기도 하지만, 기업이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전체 일자리 수 못지않게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사업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고 다양한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과는 구분이 필요하다.

2) 도시재생사업 일자리의 유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유형은 사업단계, 직·간접 일자리의 여부, 분야 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사업단계별로 살펴보면 건설단계에서는 한시적 건설 관련 일자리, 직업훈련 시행 일자리가 있고, 사업추진·운영관리 단계에는 창업고용센터, 도시재생회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가, 마을안내자, 서포터즈 고용,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등이 해당된다. 직·간접적 창출로 구분해보면 직접적 일자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일자리 등이며, 간접적 일자리는 시설의 개선에 따른 창업, 관광객 증가, 접근시간 단축, 물동량 증대 등이 유발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해당된다(국토교통부 2018e). 창출 분야에 따라 살펴보면 공공, 지역산업·경제, 사회적경제 분야로 분류 가능하며, 공공 분야는 도시재생 활동가 및 전문가 양성, 지역산업·경제 분야는 도시재생 관련 지역기업 창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는 마을기업, 지역재생회사 등이 해당된다(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2018).⁵⁾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들 및 지역주민들이 주요 일자리 창출정책의 목표 집단이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이 공통의 목표집단이 되는데, 지역별 여건과 사업특성이 모두 상이하므로, 실업자, 사회보장 급여자, 여성·청년·이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과 기타 고령노동자 및 신규진입 노동력집단 등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요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분야, 혁신분야 창업과 고용이 주요 이슈이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의 고용유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쟁에서 뒤처지기 쉬운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고용을 통해 사회 안정을 가져오는 의미가 커서, 도시재생에서 주요한 일자리 창출 분야로도 분류된다(김륜희 외 2017). 청년 창업(start-up) 등도 쇠퇴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최근 급격히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윤주선 외 2016).

5) 이투데이 기사 “서울시, “도시재생으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2025년까지 30만개 창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7760#csidx7ee7206cb01ae2db7156dfdb1740d6d>(2019년 3월 21일 검색)

3) 도시재생과 양질의 일자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으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지역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양질의 일자리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종균(2009)은 쇠퇴한 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던 주민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일자리와 연결이 가능하고, 특히 물리적인 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단기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활력 제고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착공되면 이에 대한 효과로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 및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 각 분야에서 일하는 고용자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질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회적경제를 위시한 제3섹터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의 토대가 되면서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일자리 확보가 주요한 이슈이다. 일례로 도시재생 선도시업 지역 중 하나인 영주시는 인구공동화·초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쇠퇴를 겪고 있고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고자 어르신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과 같은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가 가시화되었다(국토교통부 2016).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충족하는 괜찮은 일자리여야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기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기여가 가능하다.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기업유치, 창업, 공동작업장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 제공, 재취업 정보제공, 직업교육 기회 제공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재생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즈음하여 발생하는 신규 일자리와 일을 그만두는 사람의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역

기업들과 매칭하거나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서종균 2009).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는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필요한 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받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OECD(2003)의 개념 정의 와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도시재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 고, 건설단계의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 뿐 아니라 사업의 추진 및 운영·관리되는 단계 에서 지역기반을 가진 주민들의 지속적 고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는 한 시점에서의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측정보다는, 다양한 사업 특성에 따 라 나올 수 밖에 없는 단기·저급·단순 일자리도 있다는 전제를 인식하고, 사업의 진행 에 따라 일자리의 창출 구조가 이어져서 현재의 수준보다 더 양과 질이 우수한 일자리 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4) 도시재생 사업지역 일자리 분석 사례

(1) 도시재생 선도지역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주요 지표로써 고용 건수, 인구변화, 사업체수 변화, 신설·폐업 법인 수, 건축물 인허가 건수 등을 활용하 고 있다. 박성남 외(2017b)⁶⁾는 고용건수를 기준으로 11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1,039건의 고용이 발생하였다고 조사하였다. 이외에 이승재 외(2018), 이삼 수 외(2018)는 인구변화, 사업체수 변화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는 직접적인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표를 조사하였다.

6)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법정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근린재생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 지원을 담당하였음

표 2-8 | 2014년 대비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성과 조사 현황

성과 지표		고용건수*	인구 변화**	사업체수 변화**	신설 법인***	폐업 법인***	건축물 인허가***	
대상지역								
도시경제 기반형	부산 동구	-	-	-	123	6	44	
	충북 청주	-	-	-	14	1	20	
합계 (도시경제기반형)		-	-	-	137	7	64	
근린 재생 형	일반 규모	서울 종로	64	698	42	44	2	27
		광주 동구	15	648	29	199	5	110
		전북 군산	93	322	27	23	1	27
		전남 목포	220	1,002	43	36	0	23
		경북 영주	44	640	26	15	0	52
	소 규모	경남 창원	53	151	21	24	0	33
		강원 태백	74	-	-	6	0	18
		대구 남구	83	878	84	62	4	69
		충남 천안	108	407	20	59	2	19
		충남 공주	133	839	22	36	2	69
전남 순천		152	530	29	17	0	34	
합계 (근린재생형)		1,039	6,115	343	521	16	481	

주: “-” 표시는 관련 공식자료 없음

자료: * 박성남 외. 2017. 도시재생 정책백서 2017 II.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승재 외. 2018. 도시재생 뉴딜 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이삼수 외. 2018.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대전: 토지주택연구원.

(2) 도시재생 일반지역 (2016년~)

도시재생 일반지역의 경우, 최근까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 도시재생 일반지역의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문심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 중 하나로 일자리 수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일자리의 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미비한 편이다. 김륜희 외(2017)는 도시재생지역에서 사회적경제와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사업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의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3)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2017년~, 2018년~)

도시재생 뉴딜지역의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세부사업별 및 전체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창출되는 고용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표가 아닌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한다.

아직 일자리 창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뉴딜사업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받게 되며, 일자리 창출 성과는 양적 고용효과로 산정된다. 일자리 창출 성과는 크게 1) 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2) 건설단계에서 파생되는 고용, 3) 시설 건설에 따른 고용으로 구분하여 총 창출 일자리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재생사업 일자리 창출은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파생되는 고용인구의 총 합으로 도시재생사업 운영 단계에서의 직접고용 예정인 공공부문(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 마을 재생활동가, SNS 서포터즈 등 고용, 창업고용센터와 도시재생회사(CRC) 등 고용) 등을 포함한다(국토교통부 2018e). 재생사업 일자리 창출은 직접고용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직접고용의 목표치 합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건설단계에서 파생되는 고용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건설단계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인구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고용표의 고용유발계수를 토대로 구축된 모형을 통해 건축 사업, 토목 사업, 사업지원 서비스 총 비용 10억 원 당 유발되는 고용인원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국토교통부 2018e). 건설단계에서 파생되는 고용은 양적 효과 중 간접효과로 볼 수 있으며, 간접 및 유발고용 효과 분석에 용이한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적 특성은 반영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작성된 지역별 고용유발 원단위를 적용한다.

표 2-9 |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설단계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유발 원단위

지 역	건 설	토 목	사업지원서비스
서울	9.809	8.692	25.721
인천	9.819	9.733	32.284
경기	10.846	9.740	32.527
대전	9.069	8.079	34.663
충북	10.120	8.552	29.369
충남	10.003	10.279	25.588
광주	9.948	8.979	29.545
전북	10.536	8.820	34.151
전남	10.212	10.213	22.305
대구	10.440	9.363	30.750
경북	10.352	9.840	26.820
부산	10.511	9.046	34.705
울산	9.615	10.231	26.960
경남	10.907	9.175	24.664
강원	10.172	10.214	33.762
제주	10.629	9.690	36.224

자료: 국토교통부, 2018e.

시설 건설에 따른 고용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건설된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인원으로 법제도 기준과 유사사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법제도 기준은 계획서에서 제시한 개별 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 시설(용도)별 1인당 필수면적과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요 고용인원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8e). 유사사례 기준은 법적 필수면적이 없는 시설의 경우, 인근지역 유사사례의 연면적 또는 사업비 대비 고용인구 원단위를 산정, 계획서를 토대로 조사된 연면적 또는 사업비를 적용하여 창출될 고용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 2018e).

(4) 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지역

지자체별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모두 상이하며,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관련 지표들을 대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성과지표가 부재한 곳도 많다. 부산시(2016)의 경우, 사업체수 증가, 업종별 종사자수, 신규 일자리 창출, 업종별 종사자수 증가 등을, 서울특별시(2017)는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 모니터링에서 일자리 관련 지표로 사회적경제조직 수, 종사자 변화율 등을, 수원시(2017)⁷⁾는 사업체 수, 종사 수, 공공기관 종사자 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수 등을, 영주시(2018)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조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1>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현황” 참조).

4. 시사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존 도시재생에서의 일자리 정책은 쇠퇴지역의 경제적 활성화가 핵심목표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에 치중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근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 일반근린형) 사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양적 일자리의 수준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의 정책 목표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형별 성과관리 기준 차별화가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 재정의 직접 활용 혹은 보조를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낮다. 도시재생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반시설 개보수나 공간조성을 위한 건설 분야의 한시적 일자리나 재정으로 직접고용하는 중간지원조직 등 재정이

7)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2017. 수원형 도시재생지표 개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유지불가능한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재정 의존적인 일자리는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고용불안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중간지원조직의 경우에도 재정을 쥔 행정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부문 중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조직체계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고용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도시재생은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딜레마 속에서 공공성을 잃지 않기 위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이나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을 주요 사업시행자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대상으로 간주한다. 도시재생 자체의 공공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적인 민간 조직형태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적경제조직 이외의 민간에 대한 관심은 창업, 부동산이나 건설 등의 일자리에 불과하며 이는 민간자본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간을 구축하면 그 공간을 채울 사람이 있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공급주도적인 정책으로만 편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도시재생 뉴딜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요 대상으로 청년, 창출 방식으로 창업을 강조함으로 인해 청년 이외의 중장년층이나 창업 이외의 고용이나 기존 사업자의 고도화, 첨단산업이 아닌 타 산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나 청년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위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에게 창업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아이디어만 가진 청년이 아닌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숙련과 기술이 있는 중장년층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도시재생이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첨단산업 이외에 도시형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생태계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방안, 서비스 중심의 창업이 아닌 제조혁신 중심의 창업 등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2-10 |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황과 과제

현황	과제
양적 일자리에 치중하다보니 일자리 창출의 주요 사업유형이 경제기반형에 집중	⇒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의 일자리 양과 질의 검토기준을 달리하여, 사업 전유형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 필요
공공부문 및 재정외준적 일자리 강조	⇒ 공공자원이 필요한 일자리와 지역자립형 일자리 정책의 균형 필요
민간부문 조직형태의 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 부족	⇒ 부처연계 및 지자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방안 필요
공간제공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	⇒ 공간제공 이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연계 부족
주요 창출 분야(청년 등) 중심 일자리 강조	⇒ 주요 분야 소외집단을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 처방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이와 더불어, 일자리 성과관리 차원에서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정리된 일자리 성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지역이 계획단계 및 사업추진 초기단계로, 사업 초기단계의 일자리 창출 현황 파악만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지역·뉴딜 사업지역의 경우 계획 수립 중이거나 사업 착수단계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현재까지의 공식자료로는 향후 예상되는 고용 효과 등만 파악 가능한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단기 일자리 및 계약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일자리의 특성에 주목하여 일자리의 양보다는 특성(지역주민 고용, 구도심지역의 재취업기회 확대, 취약계층 고용, 지역기반 경제조직 창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절한 성과 평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피드백이 중앙정부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하다.

셋째,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은 정량적인 지표가 대부분으로 정성적인 지표가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주민체감형 도시재

생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한 일자리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성이 있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직접적 일자리와 간접적 일자리 분석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양적 증가현황 이외에, 청년 및 사회적경제 등 특정 분야의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연구 진행 중이나, 도시재생과 연계된 일자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적인 고용효과 분석 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는 분석을 위한 전제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역기반인 만큼, 고용효과 측정 범위를 가급적 사업추진 현장, 즉 사업대상지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접 유발효과와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위를 전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선정 및 평가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종합 성과관리의 단계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용효과 분석 역시 사전, 추진 과정, 사후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의 고려가 중요하다. 분석 단위 역시 통계자료 구축에 사용되는 단위 보다는 지역에서 구축 가능한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 질적 효과 분석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 역시 대부분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 밀착형 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개발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적 효과 분석 방법론은 실태조사나 심층그룹면담 등 사업체 단위 또는 근로자 단위로 진행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기구 지표의 경우 실제 사업지에 적용된 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와 국내외 고용영향평가 지표들을 참고하여 국내 도시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여 사례조사에 활용하였다.



CHAPTER 3

도시재생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 1. 분석 개요 | 45
- 2. 사례지역 개요 | 55
- 3. 사례지역 일자리 창출 현황 | 66
- 4. 도시재생 일자리 속성 및 정책 과제 | 102
- 5. 시사점 | 122

도시재생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본 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우선,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지4개 지자체(충북 청주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를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국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취업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은 일반적인 고용의 질 평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취약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상당 부분 바람직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 속성과 과제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분석 개요

1) 분석틀 설정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갖게 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 현황,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선도지역 중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핵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 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취업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속성 및 일자리의 양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1 | 도시재생 일자리의 양과 질 분석틀

구 분	분석내용	조사대상 / 조사방식
심층 면담	- 일자리 현황 자료 확인 ↓ ↓ ↓ - 일자리의 특성 파악 - 일자리 창출 시기, 지역주민 기회제공 - 단위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부 - 일자리 창출 기여/저해요인 - 재생사업 운영관리 방안 수립 여부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부 - 지역주민 혜택 수혜 여부 -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한 단위사업 내용 - 주민참여가 활발한 단위사업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저해요인 등	- 조사대상: 사례지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핵심 이해관계자 대상자 20인 내외 - 공공 분야 -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 ↓ ↓ (소개) - 사회적 경제 분야 -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운영자, 협동조합 조합원 등 - 지역 산업·경제 분야 - 창업자, 시설 운영·관리자 등 - 조사방식: 1:1 심층면접 - 주제별 토픽가이드 활용
일자리 속성 기준 설정	기존 방법론 검토 ⇨ 도시재생 분야에 적용 가능한 평가항목 도출 ⇨ 일자리 속성 분석기준 마련 ⇨ 설문조사 적용	
취업자 설문 조사	- 도시재생분야 일자리 속성 분석 - 고용 유형 분류 - 고용 기회: 고용 개방성, 취약계층 고용 - 고용 형태 - 고용 안정성 - 수입 - 재생사업과의 연계 - 고용 만족도 등	- 조사대상: 재생사업 관련자 중 고용자 270명 - 심층면담과 동일하게 공공 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 지역산업·경제 분야 - 조사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 조사	- 도시재생분야 일자리 정책 과제 분석 - 사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분야 - 사업유형별 일자리 지원 정책 - 사업단계별 일자리 창출 분야 - 사업단계별 일자리 지원 정책 등	- 조사대상: 도시계획·도시재생분야 전문가 50인 - 조사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 저자 작성.

2) 심층면담 개요

(1)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토픽가이드(Topic Guide)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설문조사를 채택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은 핵심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눈덩이표본추출법(Snowballing) 방식을 적용하였다. 각 사례 지역별로 관련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관련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해당지역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일자리 현황과 지역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모든 사례지역은 국토연구원 연구진(저자)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별 전문가가 매칭팀을 구성하여 공동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용 토픽 가이드는 2장장 선행연구 및 도시재생 정책 분석,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구성하였다.

표 3-2 | 심층면담용 토픽 가이드

구 분		면담 내용
일자리 양	정보 확인	• 문헌조사 결과 확인 • 재생 부문별 창출 일자리 파악
	창출 결과	• 어느 시점부터 일자리가 창출되기 시작하였는가? • 재생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지역 주민에게 충분하게 부여되었는가? • 단위사업 중 어떤 사업이 사업비 대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는가? • 단위사업 중 어떤 사업이 지역주민을 가장 많이 고용하였는가?
	창출 원인	• 무엇이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가? • 무엇이 많은 일자리 창출을 방해했는가? • 추후 운영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해당 지역만의 특성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쳤는가?
일자리 속성	창출 결과	• 재생 분야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가? • 재생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되었는가? • 단위사업 중 어떤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가? • 단위사업 중 어떤 사업에 주민의 참여가 가장 높았는가?
	창출 원인	• 무엇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가? • 무엇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방해했는가? • 추후 운영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해당 지역만의 특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쳤는가?

자료: 저자 작성.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건축물 및 시설물 철거와 신·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고용 인력부터 창업 인력, 재생 활동가, 사회적경제 사업자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분야 일자리는 사업 분야에 따라 크게 1) 공공, 2) 사회적 경제, 3) 지역 산업·경제로 구분하고,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단계에 따라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공공 분야 일자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공공부분을 포함한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 활동가 및 전문관, 지역별 거점시설 운영관리 담당자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는 마을기업(CRC) 일자리, 마을 공동체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지역 명소화 관광 일자리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경제 분야 일자리는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유희공간을 활용한 창업 고용, 골목상권 창업 고용 등을 포함한다.

(2) 분석 대상지 선정

분석 대상지는 1차적으로 조사가 가능 방법론에 따라 선도, 일반, 뉴딜사업 지역 중 선도지역 13개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선도지역의 경우 현재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사업의 실적 및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역으로, 고용의 양적·질적 효과를 통계자료 및 직접조사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3 | 도시재생 선도·일반·뉴딜사업지역별 조사 여건 비교

구분	선도지역	일반지역	뉴딜지역
사업추진 현황	- 국비지원 종료 단계 - 사업추진단계	-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단계 - 사업 추진단계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
조사가 가능 방법론	-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 통계분석 가능 - 직접조사 가능	- 계획상 일자리 목표치 검증 - 통계분석 가능 - 직접조사 불가능	- 계획상 일자리 목표치 검증 - 통계분석 가능 - 직접조사 불가능
일자리 특성	- 건설단계 일자리 - 사업추진단계 일자리 - 운영관리단계 일자리 일부	- 건설단계 일자리 - 사업추진단계 일자리 일부	계획수립단계 일자리 일부

자료: 저자 작성.

이에 반해 일반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건설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도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설분야 등 한시적 일자리의 비중이 높고, 사업추진단계의 일자리가 드물어 직접조사로 분석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원내 연구진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선도지역을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으로 사업유형을 분류하였다.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양과 질의 속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지역별 특성을 잘 활용하여 테마를 선정하였고, 일자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는 4개 지자체를 사례조사 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사례지 선정을 위하여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도시재생지원지구 모니터링 담당자 포함), 2차례의 현장 활동가 인터뷰(총괄 코디네이터, 지자체 도시재생담당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등) 등을 실시한 결과, 도시재생 사업지역들은 사업 특성상 대부분 “물리적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등을 공통의 목표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특정 단위사업 또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성과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다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 주요 사업구상별 사례지 선정 결과

유형		사례지역	대상지역	주요 사업 구상 (안)	일자리 관련 분야
도시경제 기반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폐공장 부지를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문화예술 분야
근린 재생형	일반 규모	서울 종로구	창산·송인 1·2·3동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	주민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분야
	소규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빈 건물을 활용한 청년기반시설 조성	청년 창업 분야
	소규모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물리적 환경개선 분야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심층면담 진행 개요

심층면담은 2019년 6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16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한 명의 면담대상자를 여러 번 면담한 경우도 있어 실제 면담횟수는 20회 이상이다. 앞서 분석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층면담 대상자는 해당지역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전체적인 구조와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지자체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및 각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일자리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성과 분석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연구를 수행 중인 학계 전문가들도 심층면담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3-5 | 심층면담 진행 개요

지 역	일 시	대 상 자
전라남도 순천시	'19. 6.14	• 황학중 팀장 (순천시청 도시재생과)
	'19.7.19	• 정광석 사무장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9.7.19	• 이강숙 대표 (사회적기업 엘리스)
	'19.7.19	• 이영래 대표 (청수정 협동조합)
	'19.9.13	• 김어진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충청남도 천안시	'19.6.18	• 이경환 교수 (공주대)
	'19.8.30	• 이경렬 팀장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뉴딜사업팀)
	'19.9.3	• 임준홍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19.9.10	• 이경주 교수 (한국교통대)
	'19.9.24	• 김동규 본부장 (콘텐츠 코리아 랩)
충청북도 청주시	'19.7.18	• 이진영 주무관 (청주시청 도시재생과)
	'19.7.18	• 홍병곤 사무국장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 창신·송인	2019. 6. 3	• 손경주 상임이사 (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
	'19.9.10	• 한은실 운영팀장 (산마루 놀이터)
	'19.9.10	• 이종화 이사 (백남준 기념관)

자료: 저자 작성.

3) 설문조사 개요

(1) 조사개요

설문조사는 크게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고용자 대상으로 일자리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고용자 대상 조사는 전국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서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심층면담과 달리, 선도·일반·뉴딜사업 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공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지역산업·민간 분야를 배분하여 조사자 특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크기로 배분하는 동일배분법(equal allocation method)을 적용하고, 통계분석을 위한 최소 연구 표본 수 30명을 고려하여 총 270명을 표본 수로 설정하였다.

표 3-6 | 고용자 대상 설문조사 표본 구성

구분	선도지역	일반지역	뉴딜지역
공공 분야	30명	30명	30명
사회적경제 분야	30명	30명	30명
지역산업·민간 분야	30명	30명	30명

자료: 저자 작성.

전문가 조사는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10월 1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응답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설계전공이 30인(60%), 주택 및 토지정책 8인(16%), 기타 7인(14%), 도시지역경제 3인(6%), 환경정책 및 계획 1인(2%) 등으로 나타났다.

(2) 설문조사 내용

① 고용자 대상 설문조사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창출된 재생 관련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2장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기존 일자리 분석 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준을 검토하여, 전문가 자문,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재생사업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3-7 | 재생사업 일자리 질 평가를 위한 질적 일자리 분석 방법론 검토

방법론	관련 항목	재생 관련 항목
고용 영향평가	내국인 고용	고용 개방성
	미취업자 우선 고용	고용 형태(기준)
	고용 소외계층의 고용(청년, 여성, 고령)	취약계층 고용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고용 형태(현재), 근로 시간
	직접고용의 안정성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임금 수준
	직접고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	재생사업을 통한 교육 및 학습 여부
정책고용 영향평가	임금 수준	임금 수준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	근로 시간
	정규비정규 비중, 파견·용역 비중	고용 형태(현재)
	근속년수, 1년 미만 근로기간 근로자 비중	고용 기간
	여성고용현황(여성/관리자 비중), 임금격차	취약계층 고용
	산업안전, 사회보험, 직업훈련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 재생사업을 통한 교육 및 학습 여부
예비 타당성 조사	고용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비중	고용 기간
	노동비용에서 교육훈련 비용 비중	재생사업을 통한 교육 및 학습 여부
	평균 임금	임금 수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취약계층 고용
ILO 양질의 일자리 지표	고용 기회	고용 개방성
	적정 수입과 생산적 일자리	임금 수준
	편람은 노동시간	근로 시간
	고용 안정성 및 안전성	고용 형태(현재)
	동일한 기회와 대우	취약계층 고용
	사회 보장	4대 보험 가입 여부
UNECE 고용의 질 지표	안전과 윤리	취약계층 고용
	소득과 혜택	임금 수준
	노동시간과 일과 생활의 양립	근로 시간
	고용 보장 및 사회 보장	4대 보험 가입 여부
	기술 개발 및 훈련	재생사업을 통한 교육 및 학습 여부

자료: 저자 작성.

기존 방법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생 관련 일자리 속성평가를 위한 기준을 <표 3-8>과 같이 설정하여, 고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에 활용하였다.

고용 기회는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의 고용 기준과 범위에 따라 고용 개방성과 취약계층 고용으로 구분하였다. 고용 개방성은 일자리가 지역 주민에게만 제한되어 있는지, 고용을 위한 학력이나 기술, 자격증 등의 조건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취약계층 고용은 재생사업에 따라 발생한 일자리가 고령자나 여성(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고용 형태는 기존 고용 형태와 현재 고용 형태로 구분하고, 고용 계약에 따른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한 일자리를 평가한다. 취업 형태에 따라 먼저 미취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구분하였고,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일용 근로(1개월 미만 근로), 임시 근로(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 상용 근로(고용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등으로 재구분하였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근로자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 및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용역·호출·특수고용으로 재구분하였다(김우영·권현지 2008).

고용 안정성은 고용 기간과 근로 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구분하여 재생사업에서 발생한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고, 과도한 노동 시간을 요구하지 않음을 평가하였다. 고용 기간은 1개월 미만, 1~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일자리를 제공받았는지를 평가하였다. 근로 시간은 1일 또는 1주일 근로 시간으로 평가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였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재생사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사회 보장 정도를 평가하였다. 수입은 임금 형태와 수급 기간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되는가를 평가하였다. 재생사업과의 연계는 교육이나 훈련 등이 제공되어 보다 생산적 일자리를 지원하였는가와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기반의 일자리가 확보되었는가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항목 별로 응답자의 고용 만족도를 별도로 확인하여 재생사업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였다.

표 3-8 | 재생사업 일자리 속성 평가 기준

관련 항목		재생 관련 항목
고용 유형		1) 공공분야(도시재생지원센터, 시설 유지 및 관리, 활동가), 2) 사회적 경제, 3) 지역 산업·경제(창업 관련)
고용 기회	고용 개방성	지역 내·외 (사업지, 해당 시군구) 자격 조건
	취약계층 고용	청년, 여성, 고령, 장애인
고용 형태	기존 고용 형태	미취업, 비정규직, 정규직 일용 근로, 임시 근로, 상용 근로 한시적 및 기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 파견·용역·호출·특수고용, 전시간 근로
	현재 고용 형태	비정규직, 정규직 상용 근로, 임시 근로, 일용 근로, 상근직 한시적 및 기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 파견·용역·호출·특수고용, 전시간 근로
고용 안정성	고용 기간	1, 6, 12개월 단위
	근로 시간	4, 8시간 단위
	4대 보험 가입 여부	
수입	평균 임금	임금 만족도
	임금 수급 기간	시급, 주급, 월급, 연봉
	임금 형태	정기 임금, 지역 화폐, 배당금 등
재생사업과의 연계	재생사업을 통한 교육 및 학습 여부	
	협동조합 설립 및 가입 여부	
고용 만족도		고용 기회 만족도
		고용 형태 만족도
		고용 안정성 만족도
		수입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자료: 저자 작성.

②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는 고용자 대상 설문과 달리,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느끼는 중요도, 도시재생 사업 유형 별 및 사업단계별 일자리 정책의 차별화 필요성,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고용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는 <부록 2> 참조).

2. 사례지역 개요

1) 청주

청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2014년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되었으며, 5년간 선도사업비 500억 원(국비 955억원, 지방비 755억원, 민자 1,718억원) 포함 총 3,428억 원이 소요되었다. 해당 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일원 약 1.36㎢ 면적의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산업기능 이전지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사업은 문화업무시설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 문화업무공간 조성 등의 하드웨어 사업과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성남 외, 2017b; 이삼수 외, 2018).

전체 14개 단위사업 중 마중물사업은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중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3,428억 원 중 약 14.6%를 차지하는 50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협업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처협업 사업비 848억 원은 비 705억 원과 지방비 143억 원으로 약 8.3:1.7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1%에 해당하며 현재 3개 사업이 정주시설, 비즈니스센터 및 호텔, 복합문화레저시설 건립 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 중이다. 지자체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10.6%를 차지하는 362억 원으로 문화업무공간 조성 등의 하드웨어 사업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국토교통부 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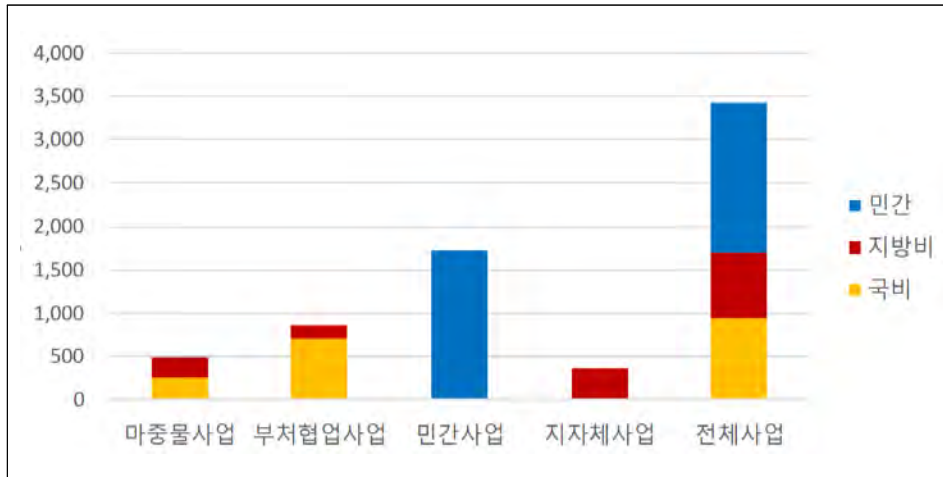
주요 재생부문에 따라 단위사업은 크게 특성화 사업이 8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물리적·환경적 개선(5개), 지역 경제 활성화(3개) 및 역량 강화와 공동체 회복(3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순으로는 물리적·환경적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8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특성화(13.0%), 경제 활성화(1.7%),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회복(1.6%) 순이다.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분포 비율은 각각 77%와 23%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이삼수 외, 2018).

표 3-9 |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단위사업

유 형	사업명	내 용	H/S	사업비(백만원)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마중물 사업 (5)	문화업무시설 건립사업	- 전시컨벤션, 한국공예관, 창작스튜디오 및 문화관련 시설	HW	260	130	130	-
	문화예술특화거리 등 연계사업	-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등	HW	10	5	5	-
	기반시설 확충사업	- 상당로 확장, 이면도로 정비, 교차로 개선 등	HW	200	100	100	-
	공연 소극장 및 중앙광장 조성사업	- 중앙광장, 공연시설 조성	HW	25	12.5	12.5	-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추진 협의회 운영, 지역별 도시재생 사업 발굴지원 등	SW	5	2.5	2.5	-
	소 계			500	250	250	-
부처 협업 사업 (6)	국제공예비엔날레 및 공예페어 개최	- 국제 공예문화 전파를 통한 세계 공예 거점화	SW	70	21	34	15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	- 전시관, 수장고, 보존연구센터 도입	HW	580	580	-	-
	시민예술촌	- 산업단지 문화재생 (34동 리모델링, 창작, 협업공간)	HW	20	10	10	-
		- 공연연습장 조성 (35동 리모델링, 공연단체, 시민동아리 대상 연습공간 제공)	HW	25	20	5	-
		- 생활문화센터 조성 (36동 리모델링, 커뮤니티공간 및 창작실 등)	HW	20	6	14	-
		- 공예디자인벨트 구축 (8동 리모델링, 공예품 판매공간)	HW	10	8	2	-
	문화콘텐츠 타운 조성	- 문화콘텐츠 창작/창업/교류/전시/홍보타운 등	SW	60	30	30	-
	안덕별 예술의 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 거리환경 개선, 주차장, 포켓공원 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SW	60	30	30	-
	드라마 한류관광 명소화 조성	- 수암골 주변 드라마 촬영지 명소화	SW	3	-	3	-
	소 계			848	705	143	15
지자체 사업 (3)	복합공영주차장 추가 사업	- 복합공영주차장 부족사업	HW	80	-	80	-
	문화업무공간 조성 사업	- 전시컨벤션, 한국공예관, 창작공간 등	HW	260	-	260	-
	기반시설 확충 추가 사업	- 기반시설정비 부족사업	HW	22	-	22	-
	소 계			362	-	362	-
민간 사업 (3)	정주시설 조성	스튜디오 레지던시 및 행복주택	HW	98	-	-	98
	비즈니스센터 및 호텔 조성사업	기업입주공간 및 창업지원시설/중저가 호텔, 공동회의공간 등 기업지원시설	HW	938	-	-	938
	복합문화레저시설 건립	도심형 레저시설, 문화시설, 공예·디자인 및 외국인 관광객 맞춤 특화상업시설, 야외공연장 등	HW	682	-	-	682
	소 계			1,718	-	-	1,718

자료: 이삼수 외, 2018;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2015년도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 |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비 구성 (단위: 억 원)



자료: 저자 작성.

2) 서울 창신·송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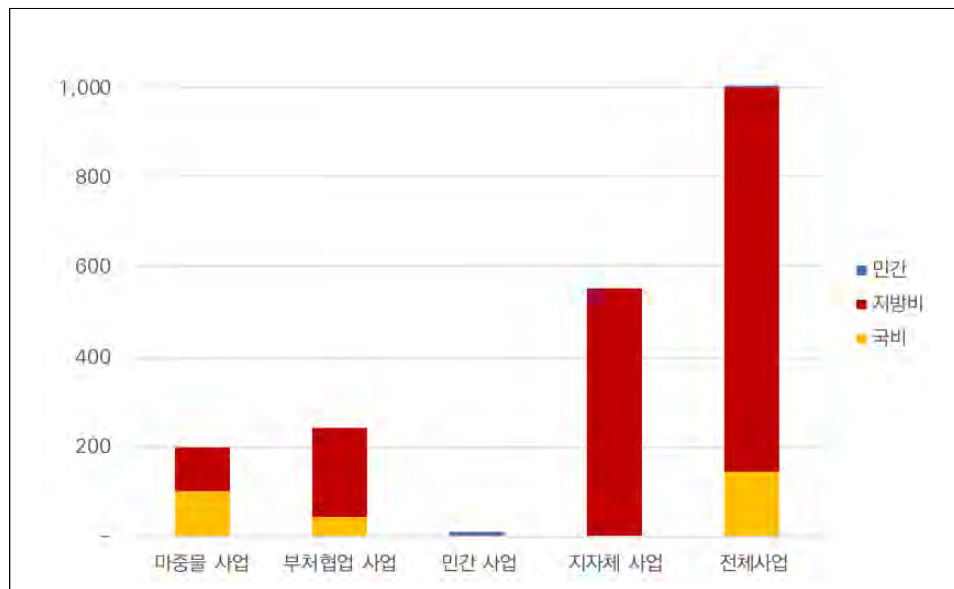
서울시 창신·송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2014년 일반근린재생형으로 선정되었으며, 4년간 선도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포함, 총 996억원이 소요되었다. 해당사업은 서울시 창신 1, 2, 3동, 송인 1동 일원 약 830,130㎡ 면적의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지역 및 봉제산업 밀집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주거·산업·문화의 통합재생 실현을 목표로 다음의 세부 사업을 제시하였다. 주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푸른마을가꾸기,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하드웨어사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마을탐방로 조성, 채석장 등 관광 사업, 지역 역량 확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일자리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국토교통부 외, 2018).

전체 19개의 단위사업 중 6개는 마중물 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마중물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996억 중 약 20%를 차지하는 200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협업사업은 총 4개 기관의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사업비의 약 24.3%를 차지한다. 민간 사업은 전체

19개 사업 중 5%에 해당하는 1개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된다. 민간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0.1%에 해당한다.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사업비의 55.5%를 차지한다(박성남 외, 2017b; 이삼수 외, 2018).

주요 재생부문에 따라 단위사업은 크게 1) 물리적·환경적 개선, 2)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3) 지역 경제 활성화, 4) 지역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로 구분된다(박성남 외, 2017b). 사업 개수로는 물리적·환경적 개선 사업이 10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지역 특성화(4개), 지역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3개), 지역경제 활성화(2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순으로는 물리적·환경적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4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5.7%), 지역 특성화(4.8%),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0.6%)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분포 비율은 각각 64%와 36%로, 하드웨어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3-2 | 서울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구성 (단위: 억 원)



자료: 박성남 외, 2017b;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10 | 서울시 창신·송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

유 형	사업명	내 용	H/S	사업비 (백만원)			
				총 계	국비	지방비	민간
마중물 사업 (6)	주거환경개선	-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HW	10,418	5,324	5,094	-
		- 자투리땅 쉼터(누리공간) 조성					
		- 공동이용시설					
	봉제재생	- 공공작업장 조성	HW	5,135	1,611	2,799	-
		- 일자리 지원	SW				
		- 봉제박물관 조성	HW				
	역사문화자원화	- 채석장 관광화	HW	3,806	2,805	1,001	-
		- 마을탐방로 기반조성	HW				
		- 백남준 기념공간 조성	HW				
부처 협업 사업 (4)	주민공모	- 일반공모 / 기획공모	SW	400	236	164	-
	주제공모	- 채석장 활용방안	SW	145	21	124	-
		- 오토바이 친환경화 방안	SW				
	마을배움터	- 공통, 주민협업체,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 연계 프로그램 등	SW	95	3	92	-
	소 계			20,000	10,000	10,000	-
	주차장 및 청소년문화시설	- 주차장, 도서관 등 설치	HW	21,330	1,760	19,570	-
		- 공작소 및 예술거리 조성	HW	400	200	200	-
		- 지역주민 예술활동 지원	SW				
		- 전선, 통신, 방송케이블 등 공중선 정비	HW	2,000	2,000	-	-
민간 사업(1)	창신골목시장활성화	- 창신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상인역량강화 등	SW	520	260	260	-
	소계			24,250	4,220	20,030	-
	희망의 집수리사업	-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HW	100	-	45	55
	소 계			100	-	45	55
지자체 사업 (8)	푸른마를 가꾸기 사업	- 녹화·정비사업	HW	750	-	750	-
		- 쉼터 등 조성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차도로 개선 등	HW	1,000	-	1,000	-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 상수관 교체	HW	140	-	140	-
		- 음수대 설치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 하수관 교체 및 보수	HW	52,800	-	52,800	-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정비	- 무질서한 간판 개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로 유도	HW	100	-	100	-
	서울가꿈주택	- 20년이상 노후주택 정비비용보조	HW	20	-	20	-
총 합 (19)	공공미술프로젝트	- 백남준-박수근가 안내를 위한 환경디자인 조성	SW	400	-	400	-
		-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효율화 등	SW	80	-	80	-
	소 계			55,290	-	55,290	-
	총 합 (19)			99,639	14,220	84,639	55

자료: 박성남 외, 2017;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2015년도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천안

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근린재생형 중에서 소규모형으로 2014년에서 선정되었으며, 4년간 재정 126억원(국비 60억, 지방비 66억)과 부처협업으로 120억원, 민간사업으로 2,400억원 등 총 2,704억원을 투입하였다. 해당 사업은 충남 천안시 중앙동과 문성동 일원의 19.6만㎡의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은 ‘복합문화특화공간’으로 거듭나는 천안 원도심’이라는 비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사업은 원도심 내 빈 점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정보구축, 젊은 인적자원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이들을 문화 창조 및 도시재생 추진주체로 키우기 위한 역량강화사업, 각종 문화 콘텐츠 조성 및 다문화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성남 외, 2017b).

전체 23개의 단위사업 중 9개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지하상가공간개선사업, 원도심종합지원센터조성사업, 문화예술동지사업, 한마음센터 조성사업 등은 모두 하드웨어 사업에 속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은 청년활동공간조성사업, 마을골목문화조성사업, 참여형플랫폼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부처협업사업은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건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한 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다른 하나는 산림청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다. 이 중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아트큐브 136 조성 등의 하드웨어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기획 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세 건의 사업은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사업은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동남구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2018년 공동주택 분양 당시 100%의 분양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표 3-11 | 천안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

유 형	사업명	내 용	H/S	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민간
마중물 사업 (9)	공간 재생뱅크 사업	빈공간 DB 구축 및 콘텐츠 발굴사업	S/W	595	156	90	359	
		지하상가 공간개선사업	H/W	1,395	233	211	951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	원도심 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	H/W	4,623	2,733	344	1,546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S/W	600	300	55	245	
	문화예술 기반 조성사업	문화·예술 동지조성사업	H/W	1,450	121	242	1,087	
		마을골목문화 조성사업	H/W	300	183	21	96	
		참여형 플랫폼 사업	S/W	460	252	38	170	
	다문화거리 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사업	H/W	2,209	1,500	129	580	
		특화거리 조성사업	H/W	968	522	81	365	(10)
소계				12,600	6,000	1,211	5,399	
부처 협업 사업 (4)	문화·예술 기반 조성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15)	H/W	3,000	1,500		1,500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16)	H/W	5,000	2,500		2,50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H/W S/W	3,800	1,500		2,300	
		가로수 생육개선(따늑지) 사업	H/W	200	100	20	80	
	소계				12,000	5,600	20	6,380
민간 사업 (2)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사업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H/W	190,000			71,600	118,400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예정)	H/W	50,000				50,000
	소계				240,000			71,600
지자체 사업 (8)	도시재생 기반구축 사업	행정지원 기반구축	S/W	-				
		중간지원조직체계 기반구축	S/W	600			600	
		주민역량강화 기반구축	S/W	600			600	
		지역자원활용 기반구축	S/W	200			200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사업	집창촌 정비사업	H/W	2,000			2,000	
		유흥지를 활용한 손바닥 공원화 사업	H/W	1,000			1,000	
		주차장 조성	H/W	1,000			1,000	
		창작문화 활용 공간 조성	H/W	400			400	
	소계				5,800			5,800
총 합 (23)				270,400	11,600	1,200	89,200	168,400

자료: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2015년도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해당 사업은 민간자본의 규모가 크며 국비:지방비:민간의 사업비 비중은 4:34:62 수준으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 도시

재생 기반구축사업과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들과 지자체 내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박소영 외 2018).

천안 근린재생 선도사업의 단위사업과 사업비 비중을 검토한 결과 하드웨어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청년지원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또한 부처협업 등을 통해 함께 추진되는 특성을 보인다. 천안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이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업의 4.7%에 불과하지만, 공간조성 이외에도 청년 창업을 위한 임차료 지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창업 컨설팅 지원, 참여형 플랫폼 지원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도 추진되었다.

4) 순천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2014년 소규모 근린재생형으로 선정되었으며, 4년간 선도사업비 2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140억 원)을 포함, 총 3,409억 원이 소요되었다.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 순천시 향동·중앙동 일원 약 371,000㎡의 면적의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자연의 씨줄과 날줄로 엮어내는 천가지로(天街地路)’를 콘셉트로 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재생과 생태를 고려한 주거지 재생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및 골목길 정비, 생활인프라 확충 등의 하드웨어 사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거리 조성 및 역사거점 조성 등 관광 사업, 지역 역량 확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창업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국토교통부 외 2018).

전체 19개의 단위사업 중 7개는 마중물 사업이며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중물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3,409억 원 중 약 5.9%를 차지하는 20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3:7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협업 사업은 총 4개 기관의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처협업 사업비 368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27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사업은 전체 사업 중 10%에 해당하

는 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비는 2천 744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0%를 상회한다. 지자체 사업 중 절반은 하드웨어 사업이고, 나머지 반은 지역 축제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성남 외 2017a).

표 3-12 |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

유형	사업명	내 용	H/S	사업비 (백만원)			
				총 계	국비	지방비	민간
마중물 사업 (7)	금곡 에코지오 마을만들기	- 옥상 및 벽면 녹화	HW	1,000	140	860	-
		- 에너지효율 집수리					
		- 골목길 정비, 정원 조성					
		- 생태주차장 조성					
	옥천 수변공간 개선	- 옥천 수변 경관디자인	SW	3,500	1,870	1,630	-
		- 옥천 진입로 개선	HW				
		- 편의시설 보강	HW				
		- 야간 경관조성	HW				
	에코지오 창작예술촌	- 시민 창작 시범공간	SW	2,500	780	1,720	-
		- 문화예술 프로젝트	SW				
		- 지역문화사업 지원	SW				
		- 물길 조성	HW				
		-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SW				
	무지개 테마거리 만들기	- 청춘 패션 거리, 별미거리 조성	HW	2,750	1,140	1,610	-
		- 700년 동네길, 정원거리 조성					
		- 향교 문화거리, 청수골 달빛거리 조성					
	순천부읍성 상징화 사업	- 연자루 건립	HW	6,700	1,830	4,870	-
		- 상징공간 + 상징거리 등 조성	HW				
		- 사이버 순천부읍성	SW				
	도시재생사업 창업교육 및 지원	- 창업컨설팅 및 맞춤교육	SW	300	50	250	-
		- 창업점포 지원	SW				
		- 빈점포 활용	HW				
	주민역량 강화사업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주민공모사업	SW	3,250	190	3,060	-
		- 역량강화 교육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 거점공간 설치						
	소 계			20,000	6,000	14,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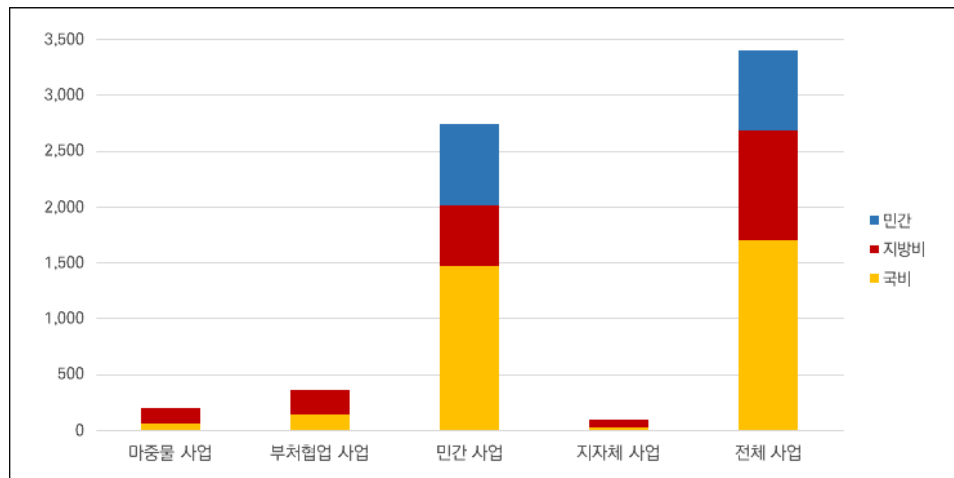
표 3-12 |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 (계속)

유 형	사업명	내 용	H/S	사업비 (백만원)			
				총 계	국비	지방비	민간
부처 협업 사업 (4)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문체부)	- 시민광장 조성	HW	25,000	7,500	17,500	-
		- 창조관광센터 건립					
		- 지하주차장 조성					
		- 사료관, 광장, 정원 등 조성					
	청수골 새들마을 사업(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 주민공동체 회복	SW	6,800	4,800	2,000	-
		- 기초인프라 개선	HW				
		- 노후주거 집수리	HW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상권통합브랜드 구축	SW	3,000	900	2,100	-
		- 신활력 증진 사업	SW				
		- 지역 마케팅 등	SW				
민간 사업 (2)	순천만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 전시, 공연장, 녹음실, 연습장 등 조성	HW	2,000	1,000	1,000	-
	소 계			36,800	14,200	22,600	-
	중앙동 상가 지중화 사업	- 쇼핑길 패션·청춘공간 L=1.40km	HW	2,500	-	1,500	1,000
		- 오폐수 분리 관로 교체	HW	271,900	147,400	52,800	71,700
		- 마을 하수처리 시설 22개소	HW				
	소 계			274,400	147,400	54,300	72,700
지자체 사업 (6)	도시가스 주택공급 지원 사업	주공급관로 설치 공사	HW	2,000	-	2,000	-
	동천 야간 경관사업	교량 및 산책로 야간 경관 보완등 체계 개선 등	HW	3,800	1,900	1,900	-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부지 631㎡ / 연면적 460㎡ /2층(전시실, 체험실, 강의실)	HW	2,600	500	2,100	-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관련 전시, 판매, 체험 공연 등	SW	800	-	800	-
	문화재 야록 프로그램 운영	야간에 볼수 있는 지역문화 유산 탐방 및 체험 등 인프라	SW	400	200	200	-
	원도심 마을 대중교통 운행	55번 / 1회 8회 운행 / 8.6km	SW	100	-	100	-
	소 계			9,700	2,600	7,100	-
	총 합 (19)			340,900	170,200	98,000	72,700

자료: 박성남 외, 2017;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2015년도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요 재생부문에 따라 단위사업은 크게 1) 물리적·환경적 개선, 2) 지역 경관 및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3) 지역 경제 활성화, 4) 지역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회복으로 구분된다(박성남 외, 2017). 사업 개수로는 특성화 사업이 8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물리적·환경적 개선(5개), 지역 경제 활성화(3개) 및 역량 강화와 공동체 회복(3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순으로는 물리적·환경적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8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특성화(13.0%), 경제 활성화(1.7%),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회복(1.6%)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분포 비율은 각각 77%와 23%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박성남 외, 2017b).

그림 3-3 |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구성



자료: 이삼수 외, 2018;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사례지역 일자리 창출 현황

1) 청주¹⁾

2019년 청주시 선도지역 내 민간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사업이 완공되었으며, 현재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 다른 사례들과 달리 청주시는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민간사업을 통한 일자리가 2020년 이후 창출 예정인 관계로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집계된 일자리와 함께 향후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를 동시에 검토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범위 역시 경제기반형의 특성상 지역 산업 생태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첨단문화산업단지 등의 인력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하였다.

표 3-13 |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현황

	구 분	재생부문	세부 일자리	인원(명)	비 고
직접 일자리	공공 분야	역량 강화 및 시설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	10	* 재생센터 운영
			리츠(REITs) 직원	5	
			도시재생 활동가, 안내원	2	* 2020년 이후 예정
			광장 안내소, 주차장 관리	10	* 24시간 상주
	지역 산업·경제	지역 활성화	문화 및 창작지원	30	* 30팀 규모
			비엔날레 단기인력	1,000	* 행사기간 중 단기 일자리
			비즈니스 복합단지 (리모델링, 1~2층)	1,500	* 2020년 이후 예정
			비즈니스 복합단지(신축)	-	* 사업 보류 중
직접 일자리 소계					
간접 일자리	공공 분야	시설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관리 고용	100	
	사회적 경제	공동체 회복	지역재생 사회적협동조합	33	* 허브센터 시설관리
	지역 산업·경제	지역 활성화	첨단문화산업단지 고용	546	
			소 계		
	건설 단계에서 파생된 고용			3,254	* 취업유발효과 분석결과 (청주시 자료, 2015)
	종사자 수 증가			4,908	
	간접일자리 소계			8,162	

주: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 현황은 저자가 직접조사 결과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가능한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기간 및 자료 구축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청주시청·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2019.7.19.)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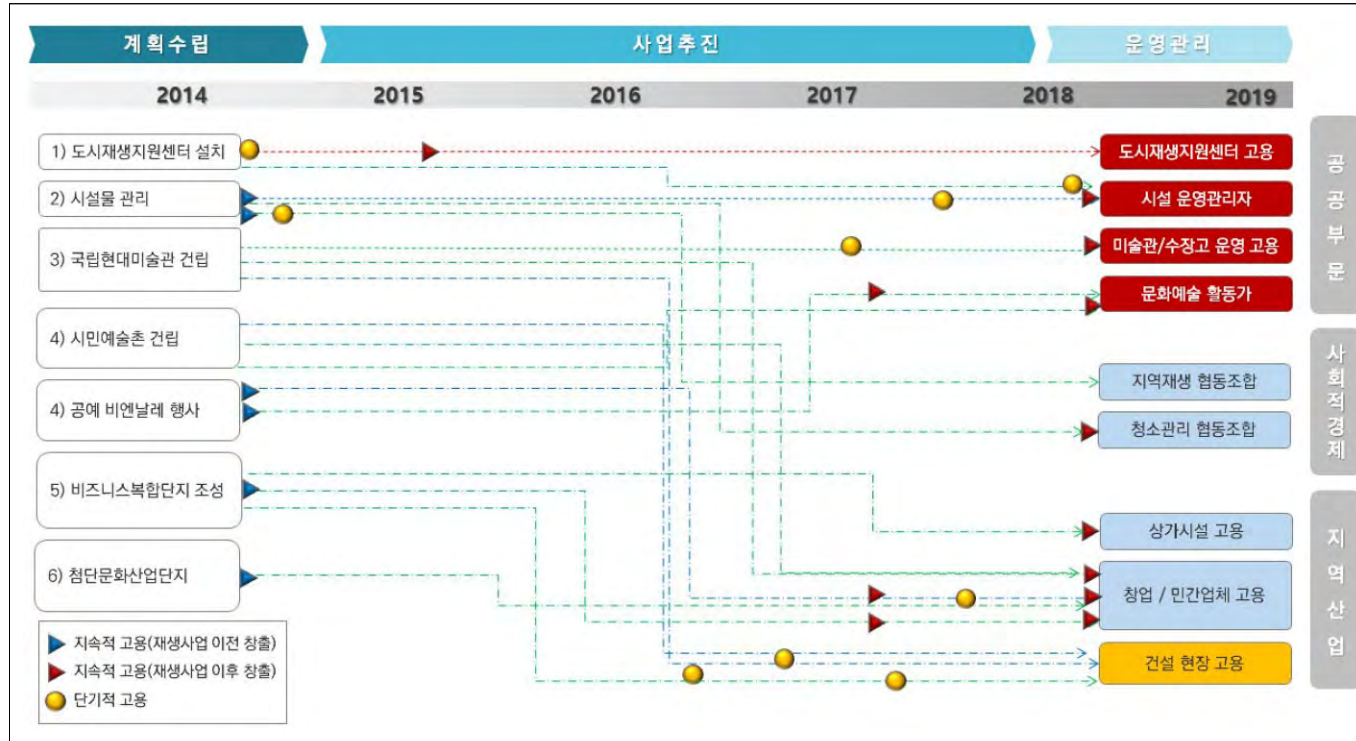
1) 본 절에 제시된 표, 사진, 구상도는 저자 직접 조사 자료, 인터뷰 내용, 청주시 내부자료 등을 통해 구성함

표 3-14 |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단위사업별 창출 일자리

유 형	사업명	내 용	H/S	일자리 창출	
				투입	산출
마중물 사업 (5)	문화업무시설 건립사업	- 전시컨벤션, 한국공예관, 창작스튜디오 및 문화관련 시설	HW	문화시설 건립	② 시설 운영관리자 ④ 문화예술 활동가 ⑦ 건설현장 고용
	문화예술특화거리 등 연계사업	-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등	H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② 시설 운영관리자 ⑦ 건설현장 고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 상영로 확장, 이면도로 정비, 교차로 개선 등	H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⑦ 건설현장 고용
	공연 소극장 및 중앙광장 조성사업	- 중앙광장, 공연시설 조성	H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⑥ 예술창작 인력 ⑦ 건설현장 고용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추진 협의회 운영, 지역별 도시재생 사업 발굴지원 등	SW		①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 ⑤ 사회적경제조직
부처 협업 사업 (6)	국제공예비엔날레 및 공예페어 개최	- 국제 공예문화 전파를 통한 세계 공예 거점화	SW	문화시설 건립	⑦ 단기 건설 인력 ② 시설 운영관리자 인력 ⑥ 예술창작 인력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	- 전시관, 수장고, 보존연구센터 도입	HW	문화시설 건립	⑦ 단기 건설 인력 ⑥ 예술창작 인력
	시민예술촌	- 산업단지 문화재생 (34동 리모델링, 창작, 협업공간) - 공연연습장 조성 (35동 리모델링, 공연 단체, 시민동아리 대상 연습공간 제공) - 생활문화센터 조성 (36동 리모델링, 커뮤니타공간 및 창작실 등) - 공예디자인벨트 구축 (8동 리모델링, 공예품 판매공간)	HW	문화시설 건립	④ 문화예술 활동가 ⑤ 사회적경제조직 ⑥ 창업/민간업체 ⑦ 단기 건설 인력
	문화콘텐츠 타운 조성	- 문화콘텐츠 창작/창업/교류/전시/홍보타 운 등 (예정)	SW	문화시설 건립	② 시설 운영관리자 ④ 문화예술 활동가 ⑥ 창업/민간업체
	안덕별 예술의 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 거리환경 개선, 주차장, 포켓공원 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SW	문화시설 건립	② 시설 운영관리자 ⑦ 건설 현장 고용
	드라마 한류관광 명소화 조성	- 수암굴 주변 드라마 촬영지 명소화	S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② 시설 운영관리자 ⑦ 건설 현장 고용
	복합공영주차장 추가 사업	- 복합공영주차장 부족사업	H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⑦ 건설 현장 고용
지자체 사업 (3)	기반시설 확충 추가 사업	- 기반시설정비 부족사업	H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⑦ 건설현장 고용
	문화업무공간 조성 사업	- 전시컨벤션, 한국공예관, 창작공간 등	HW	문화시설 건립	② 시설 운영관리자 ④ 문화예술 활동가 ⑦ 건설현장 고용
민간 사업 (1)	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	- 업무, 판매시설, 주거(행복주택 등), 숙박시설 등 복합시설	HW SW	비즈니스단지 조성	② 시설 운영관리자 ⑤ 창업/민간업체 고용 ⑥ 예술창작 인력 ⑦ 건설현장 고용

자료: 청주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4 | 사업단계 및 분야별 청주시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 구조



자료: 저자 작성.

2019년 현재,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되었거나 2020년까지 창출 가능할 직접 일자리는 2,546개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사업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타 부처 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일자리는 688개로 집계되었다. 청주시 도시재생사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단위사업은 1)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2) 리츠 구성, 3)시설물 관리, 4)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5) 시민예술촌 건립, 6) 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 7) 첨단문화산업단지 입주 등 6개 카테고리로 구분 가능하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먼저 2014년 선도사업이 시작되면서 2015년에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이 고용되었다. 2019년 10월 현재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0명이 고용되어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은 2015년 사업이 시작되면서 바로 창출되었다.

(2) 리츠 구성

2017년 9월 리츠(REITs)²⁾ 설립을 통하여 LH 단장, 부장급 직원 5~6명이 업무를 추진 중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 3층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청주시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국내 제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용자 254억 원, 청주시 현물출자 55억 원, LH 출자 25억 원 등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한 최초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례이다.

(3) 시설물 관리

2014년 사업 선정 이후, 마을 안내소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의 하드웨어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이미 모두 추진되었으나, 인덕별 문화예술 특화거리 연계사업은 사업계획

2)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의미함

이 지연되어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광장 안내소에 상주할 활동가 및 안내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1~2인 고용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014~2018년을 통하여 청주시재생신탁업무센터 건물에 2017년 지역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소나무길 프리마켓,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청춘버스킹 페스티벌, 청주 소나무길 아트페어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선도지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하여 청소관리 근로자조합 직원 9인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일자리가 33인이 창출되었다.

(4)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청주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시설인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존에 수장고 기능을 갖춘 미술관 설립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 이 지역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생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현대미술관은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첫 수장형 미술관”으로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청주시청 담당자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수장고 관리인원, 큐레이터 등 미술 관련 인력이 약 100여 명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관 이전에는 개관 준비 차원에서 중앙부처 직원이 내려오고, 개관하면서 운영인력으로 직접고용이 100여 명이 이루어졌다. 고정 운영인원 이외의 인력은 예술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인력이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는 11,000여 점의 문화예술 작품을 보관 중인 수장보존센터가 있다. 앞으로 작품 보존처리, 관리 및 수리와 관련한 외주업체들이 주변지역에 입지하여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 육성될 경우, 민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5) 시민예술촌(동부창고) 건립

현대미술관 옆에 위치한 동부창고는 연초제조창에서 담뱃잎을 보관했던 곳으로 현재

7개 동 중 3개 동을 사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협업사업을 통하여 추진되는 본 사업은 동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 공연예술 연습공간, 커뮤니티 플랫폼 등의 시민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10월 현재 7개 창고 중 34, 36, 37동이 운영되고 있고, 2개 동이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이 중 1개 동은 카페로 운영 중으로 카페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채용되었다.

비엔날레를 포함하여 다양한 페스티벌과 음악회,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시민들의 흥미를 끄는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 중으로 매년 8만 여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이다. 다양한 공예, 디자인,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예술촌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관리는 2017년부터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에 입주한 충북콘텐츠클리야랩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예술촌의 운영관리 일자리는 공공부문의 기존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며, 예술촌을 이용하거나 입주하는 단기 또는 중장기의 문화예술팀이 20~30여 팀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협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공예비엔날레 및 공예페어 기간 중에는 예술작가, 공예작가들이 페어를 진행하면서 판매부스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용되는 시설 설치 인력, 행사관리 인력 등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2017년과 2019년 등 2회의 공예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발판으로 향후 공예분야 전시 및 기획자 육성, 외부 큐레이터 등을 통한 인재양성 등 선순환할 수 있는 산업을 구상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될 것이다.

(6) 비즈니스복합단지 조성

민간참여사업으로 구상한 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 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민간사업 공모를 시작하였으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업무 및 숙박시설 수요 확보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여러 번 사업이 유찰되었다. 유찰 이후 2017년 3개의 민간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나로 변경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2개 동 건물 중 총 사업비 1,020억 원이 계획된 리모델링동의 경우, 2017년 9월 민간사업자가 유치되어 리츠를 설립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 2019년 10월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공예 비엔날레 기간 중에 오픈을 계획하였다. 리모델링동은 복합문화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 50%(본관 3·4층 및 5층 일부), 쇼핑몰 등 판매시설(본관 1·2층 및 5층 일부)이 50% 등 문화와 상업 복합화시설로 계획하였다. 이 중 문화시설은 특히 비엔날레 행사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청주시가 준공 후 임대하여 전시장, 공예 관련 체험 교육, 수장고 지원시설, ICT 센터, 공연장 등 문화체험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업 시설은 유통업체 마스터리스가 10년 동안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임대료를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100여 개의 상점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은 매장의 경우 1~2인, 큰 매장의 경우 10~20인 이상의 고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0여 명의 고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전시장, ICT 체험관, 국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도서관 관리운영자 등 공공기관 시설 운영관리 20여 명, 시설 유지관리 업체, 미화, 경비 서비스 등 60~70명 등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게는 1000여명 많게는 1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경우 민간분야 일자리는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신축동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생의 핵심적인 사업인데 반해, 문화를 주제로 왜 건물을 신축해야 하느냐는 거부감과 함께 민간의 수요확보 어려움으로 현재 보류 중인 사업이다. 경제기반형에서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본 사업을 통해서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데 반하여 사업의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7) 첨단문화산업단지 입주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한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 내에 입지한 첨단문화산업단지는 2019년 기준 입주기업 74곳, 고용인원 546명³⁾으로, 현재 단지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입주하여 선도지역 내의 시민예술

촌 사업, 비엔날레 행사 지원, 문화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업무를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산업단지 1층에는 2017년부터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코리아컨텐츠랩 사업 공모가 이루어져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이 입주하여 문화콘텐츠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 서울 창신·송인4)

서울시 창신·송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2014년 사업 시작 후 2017년 서울시 선도지역 내 모든 시설사업을 완공하였다.

표 3-15 | 서울시 창신·송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현황

구 분	재생부문	세부 일자리	인원 (명)	비 고
직접 일자리	공공 분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회복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현장지원센터 운영
			현장지원센터 마을활동가	
			서울시 뉴딜일자리 청년활동가	
	지역특성화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직원, 주민 도슨트	15	* 시설 운영 관리
		산마루 놀이터 운영 직원	5	* 시설 운영 관리 (종로구 직접 운영)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회복	창신·송인 CRC 직원	* 서울시 뉴딜일자리파견
			창신·송인 CRC 도시재생 해설사	
		지역 특성화	백남준 기념관 카페	* 재생사업의 영향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창작단	
			종로청년콘텐츠랩	
			단지스토리	
	총 창출 고용		119	

주: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 현황은 저자 직접조사 결과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가능한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기간 및 자료 구축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CRC) 내부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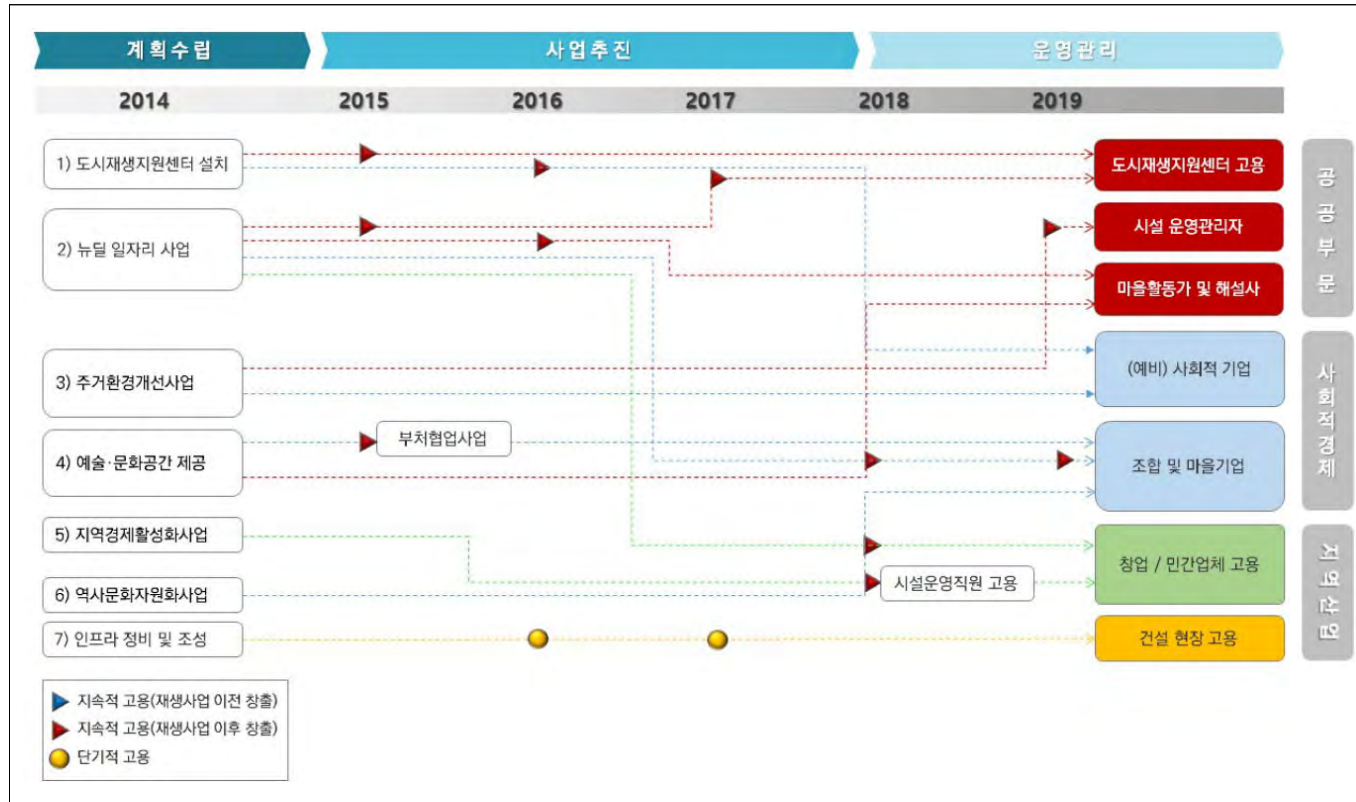
- 3) 첨단문화산업단지는 2002년 입주업체 9개, 종사자 58명, 매출액 17억에서 출발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http://www.cjculture.org/home/sub.php?menukey=500> (2019년 10월 13일 검색)
- 4) 창신·송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일자리 창출 현황은 실제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인 손경주 상임이사(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에게 의뢰한 전문가 원고 내용을 기초로, 해당지역 담당자 인터뷰 및 저자 직접조사를 통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따라서 본 절에 제시된 표, 사진, 구상도의 출처는 원내외 연구진 직접 조사 자료, 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 내부 자료 등임

표 3-16 | 서울 창신·송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별 일자리 창출

유 형	사업명	내 용	H/S	일자리	
				투입	산출
마중물 사업	주거환경개선	-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HW	주거환경 개선사업	② 시설운영관리자 ③ (예비)사회적기업 ⑦ 건설 현장 고용
		- 자투리땅 쉼터(누리공간) 조성			
		- 공동이용시설			
	봉제재생	- 공공작업장 조성	HW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② 시설운영관리자 ⑤ 조합 및 마을기업 ⑦ 건설 현장 고용
		- 일자리 지원	SW		
		- 봉제박물관 조성	HW		
	역사문화자원화	- 채석장 관광화	HW	역사문화 자원사업	⑤ 조합 및 마을기업 ⑦ 건설 현장 고용
		- 마을탐방로 기반조성	HW		
		- 백남준 기념공간 조성	HW		
	주제공모	- 채석장 활용방안	SW	역사문화 자원사업	⑤ 조합 및 마을기업
		- 오토바이 친환경화 방안	SW		
부처 협업 사업	마을배움터	- 공통, 주민협의체,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 연계 프로그램 등	SW	예술·문화 공간 제공	④ 마을활동가 및 해설사 ⑤ 조합 및 마을기업
	주차장 및 청소년문화시설 (여가부, 문체부)	- 주차장, 도서관 등 설치	HW	주거환경 개선사업	② 시설운영관리자 ⑦ 건설 현장 고용
	예술문화 + 지역재생 (문체부)	- 공작소 및 예술거리 조성	HW	예술·문화 공간 제공	③ 마을활동가 및 해설사
		- 지역주민 예술활동 지원	SW		
	공중선정비 (미래부)	- 전선, 통신, 방송케이블 등 공중선 정비	H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⑦ 건설 현장 고용
민간 사업	창신골목시장 활성화 (산자부, 중기청)	- 창신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수립, 상인역량강화 등	SW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⑤ 조합 및 마을기업 ⑥ 창업/민간업체 고용
	희망의 집수리사업	-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HW	주거환경 개선사업	③ (예비)사회적기업 ⑦ 건설 현장 고용
지자체 사업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 녹화·정비사업 - 쉼터 등 조성	HW	주거환경 개선사업	⑦ 건설 현장 고용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차도로 개선 등	H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⑦ 건설 현장 고용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 상수관 교체 - 음수대 설치	H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⑦ 건설 현장 고용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 하수관 교체 및 보수	H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⑦ 건설 현장 고용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정비	- 무질서한 간판 개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로 유도	H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⑦ 건설 현장 고용
	서울가꿈주택	- 20년 이상 노후주택 정비비용보조	HW	주거환경 개선사업	⑦ 건설 현장 고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 백남준~박수근가 안내를 위한 환경디자인 조성	SW	역사문화 자원사업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효율화 등	SW	인프라 정비 및 조성	-

자료: 서울시 종로구 창신·송인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 | 사업단계 및 분야별 서울 창신·송인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 구조



자료: 저자 작성.

2018년부터 창신·송인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조직으로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이후 CRC)”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을 통해 발굴된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들을 활용하여 마을재생에 기여하는 비즈니스들을 실현하여 주민들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 역량 강화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도시재생사업에의 직접적 참여를 통하여 총119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창신·송인 재생사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단위사업은 1)도시재생지원센터, 2)뉴딜 일자리 사업, 3)주거환경개선사업, 4)예술·문화환경 제공, 5)지역경제활성화 사업, 6)역사문화자원화 사업, 7)인프라 정비 및 조성의 7개 카테고리 구분이 가능하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2014년 5월 창신·송인지역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장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사업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하고, 7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2017년 12월 현장지원센터의 업무도 종료되었다.

표 3-17 |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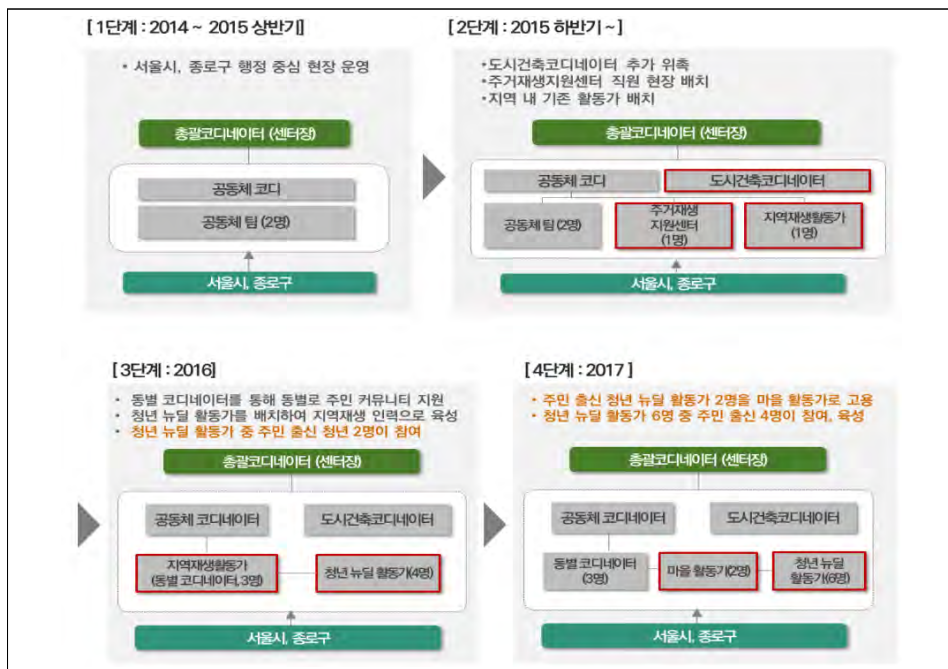
일 시	운영 내용
14년 5월 7일	창신·송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14년 6월 25일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위촉
14년 7월 29일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창신동 237번지 6층)
15년 10월 8일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지정 (공구대여 및 집수리지원사업 연계 기능)
15년 11월 2일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동일 건물 3층으로 확장 이전)
17년 12월 31일	도시재생 지원센터 종료

자료: 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CRC) 내부 자료.

창신·송인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고용인력 변화는 크게 4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단계(2014~2015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행정인력과 용역사 파견인력을 활

용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실제 센터로 인한 고용인력은 공동체 코디네이터 1인과 공동체팀(용역사 파견인력) 2인으로 총 3인이다. 2단계(2015 하반기)에는 지역 주민을 코디네이터(지역재생 활동가)로 추가 고용하였으며,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인력 1인을 코디네이터로 추가 파견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다르게 도시건축코디네이터가 별도로 위촉되었다. 2단계 기간 동안 실제로 고용된 인력은 코디네이터 2인, 공동체팀 2인으로 총 4인이다. 3단계(2016년)에서는 기존 용역사 파견인력 2인을 현장센터의 공동체 코디네이터와 동별 코디네이터로 고용하고, 동별 코디네이터 1인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총 4명이 고용되었다. 4단계(2017년 하반기)에서는 전년도 뉴딜일자리 인력 중 주민 2인을 마을활동가로 연속 고용하였다. 실제로 고용된 인력은 코디네이터 4인(공동체 코디네이터/동별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2인, 청년 뉴딜활동가 6인 등 총 12인이다.

그림 3-6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단계별 고용 인력 변화



자료: 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CRC) 내부 자료.

사업 이후 고용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창신·송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종료된 후에도 대부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이 연계되고 있다.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던 인력 중 5명은 현장 센터의 경험을 활용하여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인,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이후 CRC) 1인, 건축사사무소 창업 1인, 소셜벤처 1인으로 총 5명이 관련분야에 현재 고용 중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CRC, 건축사사무소 창업의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과 직접 연계된 분야에서 활동하며 창신·송인과 타 지역에 도시재생의 경험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센터에서 수행해온 사업들은 대부분 프로젝트성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2013년부터 추진된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가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참여자에게 근무 경험과 다음 일자리로의 디딤돌 역할을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다. 특히 성장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현장성 있는 훈련과 구체적인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표 3-18 |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한 연간 고용 인력

연도	분야	고용 인원수
2015	선택리지 사업	9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도우미 육성사업	4
	젊은 봉제장인 유입사업	12
2016	도시재생리더 양성	6
2017	도시재생리더 양성	10
2018~2019	CRC	5
총 합		46

자료: 저자 직접 조사.

연도별로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한 고용을 살펴보면, 2015년 청년 활동가로 선택리지 9인,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도우미 육성사업 4인, 젊은 봉제장인 유입사업 12인 등

총 25인을 고용하였다. 신태리지 청년활동가 9인은 현장센터의 인력으로 활용하여 창신·송인의 역사문화를 정리한 「동대문 밖 성곽마을 이야기-창신·송인 신태리지 보고서」 출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외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도우미 육성사업 4인, 젊은 봉제장인 유입사업을 통해 12인이 고용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고용 연계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6년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도시재생리더양성과정 6인이 고용되었으며, 직무교육을 거친 뒤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현장센터에 투입하였다. 6인 중 2인은 지역주민으로, 2017년 현장센터의 마을 활동가로 연속 고용되었다.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도시재생리더양성과정 6인이 고용되었으며, 이들은 직무교육을 거쳐 현장센터에서 「사람과 장소 중심-신태리지 II」 출간 작업을 진행했다. 지역주민 4인을 포함한 청년 6인이 신규 고용되었으며, 이중 지역 청년 1인은 CRC의 상근자로서 지속 고용 중이다. 2018년에는 CRC 도시재생 리더 양성과정으로 약 10개월 동안 5인을 고용하였으며, 이들은 직무교육을 거쳐 CRC 사업지원에 투입되었다. 현재 5인 중 2인은 2019년까지 고용이 연장되었으며, 나머지 2인은 타 분야에 취업하였다. 전년도로부터 고용 연장된 2인으로 포함하여 CRC 도시재생리더 양성과정으로 5인이 고용되었으며, 직무교육을 거쳐 CRC 사업지원을 맡고 있다.

사업 이후 고용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사업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다른 분야로 고용이 연계되었는데, 뉴딜 일자리 출신 중 3인은 사업 이후 도시재생과 연계된 분야(건축사사무소, 현장 코디네이터, 도시재생활동가 등)로 고용되었으며, 특히 지역 청년 1인은 사업 이후에도 CRC로 지속 고용 중이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생사업에 포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주민공동이용 시설 조성(토월, 회오리마당, 지봉서관, 수수헌), 산마루 놀이터 등이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단기 건설 현장 고용을 제외하면 총 8인의 일자리가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창출되었다.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은 창신·송인 지역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보다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2016년 이후 고용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단기 건설 현장 고용 형태이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하나인 수수헌은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시간제로 3인이 고용되어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일자리(CRC)로 구분 가능하다. 산마루 놀이터는 지역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놀이 공간으로 2019년 5월 개장하였으며, 종로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설운영직원은 총 5인(운영팀장 1, 프로그램 기획 1, 청소 2, 시설관리 1)으로 공공부문에 고용이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기간제로 안정성이나 처우 측면⁵⁾에서 한계가 있다. CRC 등 지역에도 운영 역량을 가진 조직이 있고 이들에게 위탁한다면 재생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 창출이 가능하나⁶⁾ 현재는 지자체 직영 운영 중이다.

(4) 예술문화공간 제공

재생사업에 포함된 예술문화공간(창신소통공작소) 제공을 통해 2015년부터 고용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종로문화재단의 운영인력(무기계약직) 1인,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코디네이터 1인, 예술강사 4인 등 총 6인이 고용되어 있다. 창신소통공작소의 경우 마을의 공적 공간을 공공의 지원(종로문화재단의 인력 1인과 공과금, 홍보 지원)과 주민 운영위원회가 파트너로서 운영하는 모델로 의의가 있다.

(5)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재생사업에 포함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은 봉제장인으로서 자긍심을 증대하고 창신·송인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지역 경제 거점 공간의 조성을 목표로 2017년 4월 개관하여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와 (주)베리준이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중이다. 현재(2019.8월 기준) 봉제역사관을 통해 총 4인의 고용이 발생했으며 이 중 1/2 은 사회적 경제 부문(패션봉제아카데미),

5) 산마루놀이터 운영 인력의 경우 모두 종로구 기간제 채용을 통해 고용되었으며 일당으로 산정하여 지급됨

6) 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손경주 상임이사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함 (2019.09.10.)

나머지 1/2은 민간 기업(베리준오)에서 발생했다. 주민과 봉제인 출신 도슨트 10인이 안내데스크와 도슨트를 전담하고 있으며 각 1인씩 1일 2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봉제강사 3인이 철릭 한복, 코트 만들기 등의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처럼 창신·송인 지역은 위탁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전업주부나 은퇴한 봉제인 등이 파트타임으로 참여하고 있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외부단체 위탁 운영이라는 특성상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6) 역사문화자원화 사업

재생사업에 포함된 역사문화자원화 사업으로 백남준기념관 및 카페, 채석장 전망대 카페(예정) 등이 있다. 백남준 기념관 카페와 전망대 카페(예정)는 현재 창신·송인 CR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백남준 기념관의 경우 현재 10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모두 시간제다. 전망대 카페의 경우 아직 운영 예정이지만 운영시 시간제 4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백남준 기념관 카페의 경우 일자리보다 ‘일거리’ (파트타임)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니어, 전업주부 등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일자리를 통한 수입 또한 월 매출에 따라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 기준으로 본다면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나, 시니어나 전업주부의 경우 정규 고용보다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거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⁷⁾.

(7) 인프라 정비 및 조성

창신·송인 도시재생 선도사업 내용 중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노후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및 청소년 문화시설 조성,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토목사업,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사업 추진과정에서 매년 단기 건설 현장 고용이 발생하였다. IO 분석을 통해 건설단계에서 파생된 일자리는 177명으로 나타났다(김갑성 외 2017).

7) 백남준 카페 대표 이종화 이사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함 (2019년 9월 10일)

3) 천안8)

천안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2014년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마중물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민간사업인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부처협업의 경우 중기부와 문광부의 사업을 추가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명목적으로 계획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직접일자리는 대략 580여명이 창출되었으나 반드시 도시재생사업만에 국한된 인원은 아니고 타 부처사업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도심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한 기관들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온 경우이거나 기존 조직에서 분리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규 고용된 인원 또한 공간제공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하였으나 인건비는 해당 조직의 재단 운영비에서 받거나 타 부처 사업비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일자리로 명확히 분리할 수는 없다. 또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향후 창출될 직접일자리는 인터뷰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있으나 건설단계에서 파생된 고용은 별도로 산출해놓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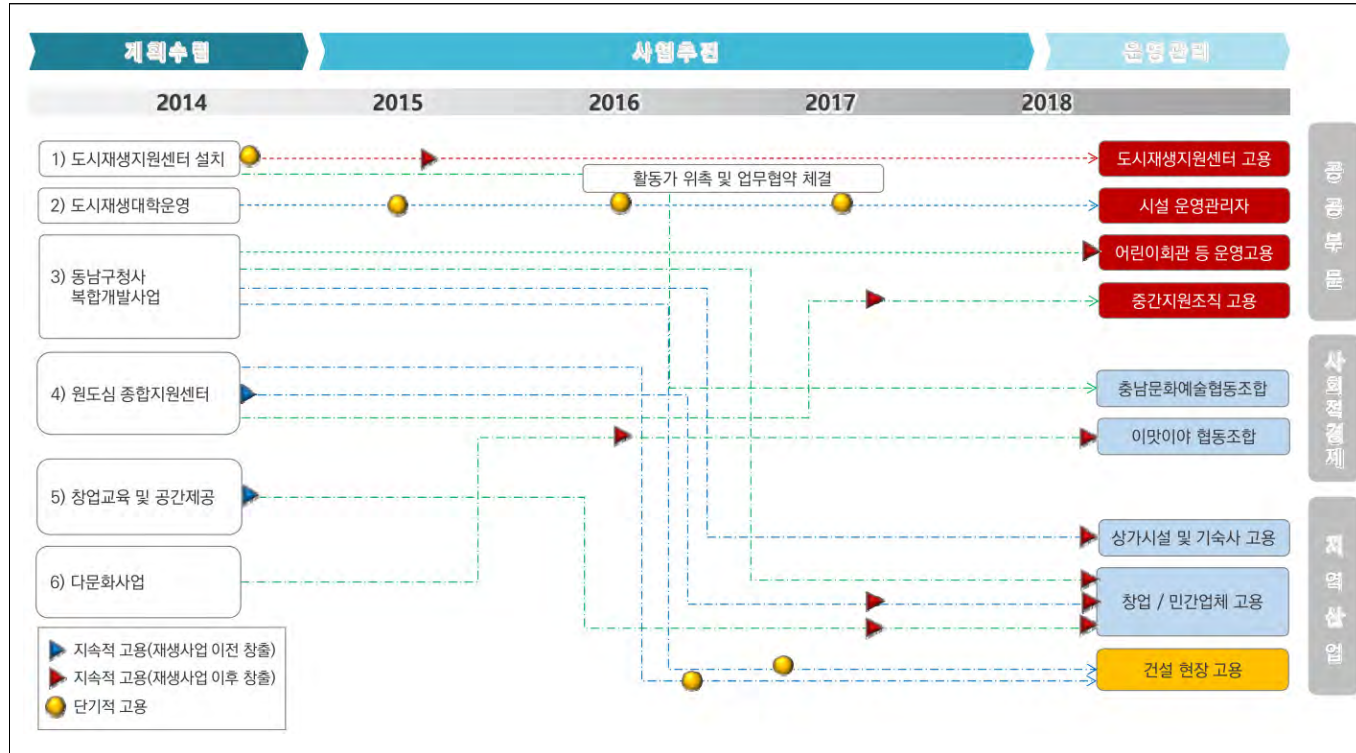
표 3-19 | 천안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현황

구 분	재생부문	세부 일자리	인원(명)	비 고	
직접 일자리	공공 분야	역량 강화 및 시설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	5	* 재생센터 운영
			도시재생현장활동가	11	* 위촉형태
			도시재생대학운영	3	* 위촉형태
			어린이회관 등 시설운영	57	* 2020년 이후 예정
			원도심 종합지원센터	76	* 기 고용인원 포함
	사회적 경제	공동체 회복	다문화관련 사업	6	* 협동조합 설립
	지역 산업 · 경제	지역 활성화	지하상가공간개선	30	* 부처협업사업 포함
			청년상인창업지원	9	
			문화플랫폼 및 창작지원	227	
			청년활동공간조성사업	156	
직접 일자리 소계			580		

자료: 천안시청, 컨텐츠코리아랩 내부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2019.8.20.)를 토대로 저자 작성.

8) 본 절에 제시된 표, 사진, 구상도는 저자 직접 조사 자료, 인터뷰 내용, 천안시 내부자료 등을 통해 구성함

그림 3-7 | 사업단계 및 분야별 천안시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 구조



자료: 저자 작성.

(1)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천안시는 2014년 3월 18일 센터장 1명, 현장활동가 5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시적인 형태로 설치한 것이었다. 같은 해 2014년 7월에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 운영 방침을 세웠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듬해 12월 1일에 LH에 공기업 위탁의 형태로 새롭게 설치되었다. 2015년 12월 당시의 규모는 센터장 1명, 교육기획팀 3명, 사업지원팀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10월 현재는 센터장 1명, 사업별 담당자 3명, 총무관리자 1명으로 구성⁹⁾되어 선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2015년 천안시로부터 현장활동가로 위촉받았고 2016년 당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 원도심 내 예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충남 문화예술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도심 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¹⁰⁾.

(2) 도시재생대학 운영

천안시의 경우 2014년 3회, 2015년 3회, 2016년 1회, 2017년 2회, 2018년 1회 등 매년 1~3회씩 도시재생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천안시, 2019). 이 중 선도지역에서 시행된 도시재생대학은 8회이고 2017년 1회(8기)는 병천마을에서, 2018년 1회(10기)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성항마을에서 개최하였다. 최근 개최된 도시재생대학 11기의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남산마을에서 열리는 등 지속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재생사업 지역 주민의 역량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도시재생대학 강의를 위해서 매 회마다 학장과 총괄책임교수, 각 수업별 지도교수와 조교를 위촉하였으나 대학 교수,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초빙한 것이기 때문에 창출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

9)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www.cheonanurc.or.kr) (2019년 10월 11일 검색)

10) 충남투데이, 2016년 2월 14일자,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 원도심 활성화 업무협약 (<http://www.cn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7>) (2019년 10월 10일 검색)

(3)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천안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사업부지 내에 있던 동남구청사 부지에 민간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천안시가 소유한 기존 동남구청사 부지에 주상복합 및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청사건물, 어린이회관 등을 건설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2016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16년 10월 리츠인 (주) 천안미드힐타운위탁관리가 설립되었으며, 천안시는 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리츠로부터 동남구청사 등 공공용도 부지를 매입하는 매입확약을 체결하였다(박소영 외, 2018).

현재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라 주민 45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박소영 외, 2018). 현재는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단기건설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어린이회관 및 지식산업센터 등이 문을 열면 어린이회관 42명, 지식산업센터 537명, 기숙사 15명, 주상복합상가시설 126명 등의 직접고용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¹⁾

(4) 원도심 종합지원센터 조성

천안시 선도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가지는 원도심 내에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고 이를 원도심 재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원도심 종합지원센터(현재 천안시도시창조두드림센터)는 총 46.2억원을 들여 그 중 50% 수준인 20억원을 부지매입비로, 나머지를 각종 리모델링 비로 지출하고 해당 공간 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연관된 기관들을 입주시켰다. 이 때문에 공간조성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였지만, 실제 입주기관들은 문화관광과,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등 타 부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11) 천안시 도시재생팀 이경열 팀장 인터뷰 자료 (2019년 8월 30일)

종합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창출된 단기 건설일자리이다. 둘째, 기존에 타 지역에 입주하고 있던 기관들이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인 공간확보를 통해 기관이 확장되면서 추가적으로 고용한 일자리이다.

표 3-20 | 천안시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입주단체 및 직원 현황

층별	내용	관련부서	직원수	용도
계	5개 입주단체	5개 과	76명	사무실 등
10층	(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창작스튜디오)	문화관광과	1명	문화창작공간
9층	(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문화관광과	5명	키움마루 (기업입주공간)
8층				숨씨마루 (메이커창작실)
7층				비빔마루 (미디어스튜디오 및 교육장)
6층				소통마루 (커뮤니티공간)
5층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과	6명	사무실
	공동체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	5명	
	(주)천안미드힐타운위탁관리	도시재생과	6명	
4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소년과	23명	
3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과	16명	연습실, 녹음실
2층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음악창작소)	문화관광과	2명	
1층	(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문화관광과	5명	전시실
	관리사무실, 현장지원센터, 현장활동가 사무실		5명	사무실
지1	창고	도시재생과	-	
지2	(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문화관광과	2명	공연장

자료: 천안시, 2018, 천안시 내부자료.

이러한 입주기관들의 공간확보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종합지원센터 6층~9층에 입주한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의 경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20억 원(국비10억, 지방비10억)씩 5년 동안의 지원을 기반으로 2017년 5월 23일에 개소하였다¹²⁾. 인터뷰 결과 당시 공모사업 지원 시 도시재생을 통한 공간확보가 사업선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³⁾. 특히 천안시의 경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국비지원사업인 ‘음악창작소’, ‘웹툰창작소’ 등에 함께 선정되었으며, 해당 결과물을 모두 원도심 종합지원센터에 입주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2019년 6월 현재 원도심 종합지원센터에 고용된 상시인원은 76명이다. 셋째, 해당 기관들이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면서 청년, 문화예술인 등이 입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유희공간에서 창업한 일자리이다. 종합지원센터에 문을 연 음악창작소에서는 음악가들이 각종 공연을 개최하고 음원제작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뮤지션 5팀을 새롭게 발굴하였다(천안시, 2018). 또한 창작스튜디오 등에는 메이커활동을 지원하는 3D 프린터와 각종 시제품 제작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 가능한 공간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5) 창업교육 및 공간 제공

천안시 선도사업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에 주목했다는 사실이다. 천안시 선도사업은 소규모 근린재생형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격 상 이후 일반사업의 중심시가지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천안시 선도사업에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청년 중심의 창업과 상권활성화에 사업의 주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충남신문, 2016년 5월 10일자, 천안시 100억원규모 ‘충남콘텐츠코리아랩’사업 선정
<http://www.ccsimin.com/87536> (2019년 10월 11일 검색)

13) 충남콘텐츠코리아랩 김동규 본부장 인터뷰 자료 (2019년 9월 24일)

천안시의 청년 창업 관련 사업은 1)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및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은 청년활동공간조성사업과 2) 충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문화거점플랫폼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청년활동공간조성사업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이어져온 사업이며 주된 사업내용은 1) 청년창업임대료 지원, 2) 사업활동 및 아이템 개발지원, 2) 푸드트럭 및 원도심 인근 명동거리 등의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4) 빈공간 리모델링비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창업임대료는 월임대료의 60%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아이템개발 지원도 최대 월 70만원까지, 리모델링비는 전체의 60%(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임대료는 19팀, 사업활동 및 아이템 지원은 5팀, 청년야시장 참여 및 천안청년몰인 흥흥발전소 등 창업공간지원은 66팀, 빈공간 리모델링은 10팀, 청년 마을닥터를 이용한 방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는 16팀이 지원을 받았다(천안시, 2018). 특히 흥흥발전소의 경우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억원의 지원을 받았고 현재 14개 점포가 운영중(2018년 8월 현재)이다¹⁴⁾. 천안시의 청년활동공간조성사업은 부처협업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총 116팀, 15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¹⁵⁾.

문화플랫폼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당 사업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창의인력 양성프로그램과 콘텐츠 특강으로서 상상마라톤즈, 상상브릿지, 상상클라우드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R&D 개발사업 지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박람회 참가지원, 음원콘텐츠 및 웹툰 창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 활용가능한 수준으로 다듬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최종 투자유치 이후 실제 창업에 성공할 수 있

14) 한국일보, 2018년 8월 14일, 천안청년몰 ‘흥흥발전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808141418346773> (2019년 10월 11일 검색)

15) 천안시 도시재생팀 이경열 팀장 인터뷰 자료(2019년 8월 30일)

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인력양성 172명, 창업지원 23명, 제작지원 32명의 성과를 거두었다(천안시, 2018). 해당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 실제로 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경우 이미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처 간 개별 사업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3-8 |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지역과 문화산업진흥지구 구역 경계도 및 사업 비교



자료: 충남문화산업진흥원(http://www.ctia.kr/html/kr/business/business_0103.html) (2019년 10월 10일 검색)

청년창업 및 교육 지원을 통한 천안시 일자리 창출관련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도시재생에서는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부처협업이 필수적이며, 콘텐츠를 개발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 상 공간조성이나 지원 등의 하드웨어 부문에 대한 사업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콘텐츠 개발 등은 창업지원자들의 컨설팅이나 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력도 없을뿐더러 노하우도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재생활동가들 또한 근린형의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교육 등에 강점이 있지만 창업콘텐츠 개발은 전문분야가 아니다. 실제로 천안시의 경우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중기부 사업과 문화부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선정됨으로써 재원의 확보와 더불어 관련 조직들의 지원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당 조직은 문화부의 사업을 주로 담당하지만 창업 과정에서의 콘텐츠 개발이나 컨설팅 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림 3-9 | 천안시 창업실태 지원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료: 충남콘텐츠코리아랩

<http://cckl.or.kr/0601/board/notice/?mode=V&pageIndex=1&idx=555415077186576100>
(2019년 10월 11일 검색)

둘째, 정부정책의 가이드가 명확할수록 현장에서의 운용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에서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신규창업에만 지원대상이 한정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임대료나 리모델링비 지원 또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선도지역 내에 사업장을 등록하거고 신축건물이 아닌 빈 공간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지원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다. 꾸준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의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떨어진 창업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인 ‘고실고실카페’를 개설하여 다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¹⁶⁾.

(6) 다문화 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원도심 종합지원센터에 입주시키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편, 한마음 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지원 과정에서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취업 및 한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맛이야(I’m Asia)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 내 이주여성 6명을 고용하였으며(국토교통부, 2018), 식재료를 인근 시장에서 조달함으로써 주변 상인과의 협업 관계도 형성하였다.

16) 충남콘텐츠코리아랩 김동규 본부장 인터뷰 (2019년 9월 24일)

4) 순천¹⁷⁾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2014년 사업 시작 후 2017년 선도지역 내 모든 시설사업이 완공되었으며, 특히 주민 역량 강화사업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과 시설물 사후관리 운영 등에 주력하였다. 2019년 현재 사업이 완료된 후 직접 일자리 156명, 간접일자리 1,218명(예상)이 창출되었다.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몇 개의 단위사업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7>에서 볼 수 있듯이 순천시 재생사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단위사업은 1)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2) 시설물 관리, 3) 도시재생대학 운영, 4) 주거정비사업, 5) 지역문화사업 지원, 6) 창업 공간 제공, 7) 인프라 계획의 7개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표 3-21 |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현황

구 분	재생부문		세부 일자리	인원(명)	비 고
직접 일자리	공공 분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회복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	10	* 재생센터 운영
			서문 안내소	24	* 시설물 사후관리
			영동 1번지	7	
	사회적 경제	물리적·환경적 정비	빈집 리모델링	12	* 하드웨어 사업
	지역 산업·경제	지역 특성화	청년문화 기획자	11	* 소프트웨어 사업
			창작 예술촌 운영	9	
			청년 점포 운영	53	
			청년 챌린지숍 운영	27	
			청년 웨어하우스 운영	3	
	직접 일자리 소계				156
간접 일자리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고용		46	*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설립 및 운영 지원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고용		63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고용		107	
		소 계		216	
	건설 단계에서 파생된 고용			165	*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서 단기적 발생
	종사자 수 증가			837	* 376 사업체 증가
	간접 일자리 소계			1,218	

자료: 순천시청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2019.6.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17) 본 절에 제시된 표, 사진, 구상도는 저자 직접 조사 자료, 인터뷰 내용, 순천시 내부자료 등을 통해 구성함

표 3-22 |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별 창출 일자리(마중물 사업)

사업명	내 용	H/S	일자리 창출	
			투입	산출
주민역량 강화사업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 주민공모사업 - 역량강화 교육	SW	도시재생 대학 운영	③ 마을활동가 및 해설사 ④ (예비) 사회적 기업 ⑤ 조합 및 마을기업 ⑥ 창업/민간업체 고용
	-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①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 거점공간 설치			
금곡 에코지오 마을만들기	- 옥상 및 벽면 녹화	HW	주거 정비 사업	④ (예비) 사회적 기업 ⑦ 건설 현장 고용
	- 에너지효율 집수리			
	- 골목길 정비, 정원 조성			
	- 생태주차장 조성			
옥천 수변공간 개선	- 옥천 수변 경관디자인	SW	지역 문화 사업	④ (예비) 사회적 기업 ⑥ 창업/민간업체 고용
	- 옥천 진입로 개선	HW		
	- 편의시설 보강	HW		
	- 야간 경관조성	HW		
에코지오 창작예술촌	- 시민 창작 시범공간	SW	지역 문화 사업	④ (예비) 사회적 기업 ⑥ 창업/민간업체 고용
	- 문화예술 프로젝트	SW		
	- 지역문화사업 지원	SW		
	- 물길 조성	HW		
	-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SW		
무지개 테마거리 만들기	- 청춘 패션 거리, 별미거리 조성	HW	지역 문화 사업	④ (예비) 사회적 기업 ⑥ 창업/민간업체 고용
	- 700년 동네길, 정원거리 조성			
	- 향교 문화거리, 청수골 달빛거리 조성			
순천부읍성 상징화 사업	- 연자루 건립	HW	시설물 관리	② 시설물 운영관리자
	- 상징공간 + 상징거리 등 조성	HW		
	- 사이버 순천부읍성	SW		
도시재생사업 창업교육 및 지원	- 창업컨설팅 및 맞춤형교육	SW	창업 공간 지원	⑥ 창업/민간업체 고용
	- 창업점포 지원	SW		
	- 빈점포 활용	H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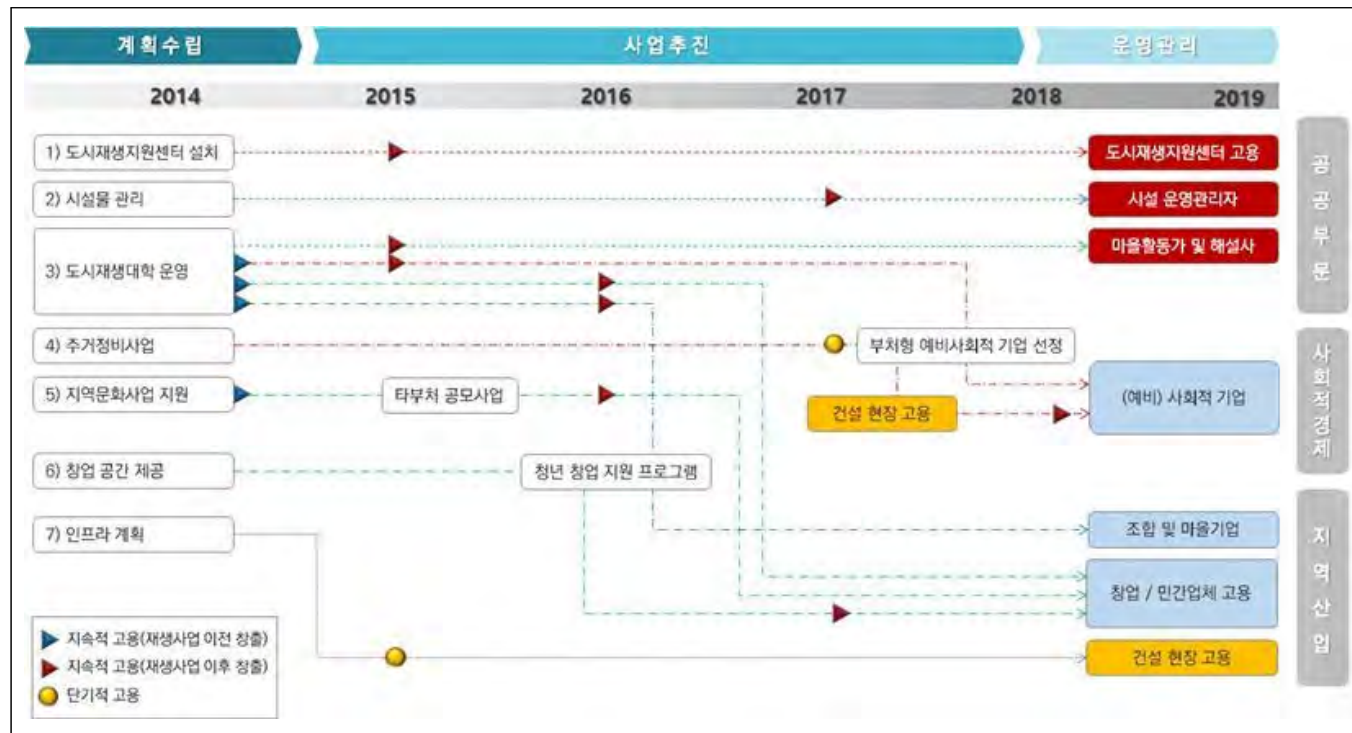
자료: 순천시청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2019.6.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23 |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단위사업별 창출 일자리(지자체·부처협업·민간사업)

유형	사업명	내 용	H/S	일자리	
				시작	일자리 창출
지 자 체	도시가스 주택공급 지원사업	- 주공급관로 설치 공사	HW	인프라 계획	⑦ 건설 현장 고용
	동천 야간 경관사업	- 교량 및 산책로 야간 경관 보완등 체계 개선	HW	인프라 계획	⑦ 건설 현장 고용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 부지 631㎡ / 연면적 460㎡	HW	인프라 계획	⑦ 건설 현장 고용
	푸드앤티트 페스티벌	- 관련 전시, 판매, 체험 공연 등	SW	-	
	문화재 야록 프로그램 운영	- 야간에 볼수 있는 지역문화 유산 탐방 및 체험 등 인프라	SW	-	
	원도심 마을 대중교 통 운행	- 55번 / 1회 8회 운행 / 8.6km	SW	-	
부 처 협 업	순천부음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문체부)	- 시민광장 조성 - 창조관광센터 건립 - 지하주차장 조성 - 사료관, 광장, 정원 등 조성	HW	시설물 관리	② 시설물 운영관리자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지발회/국토부)	- 주민공동체 회복 - 기초인프라 개선 - 노후주거 집수리	SW HW HW	주거 정비 사업	④ (예비) 사회적 기업 ⑦ 건설 현장 고용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상권통합브랜드 구축 - 신활력 증진 사업 - 지역 마케팅 등	SW SW SW	-	
	순천만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 전시, 공연장, 녹음실, 연습장 등 조성	HW	-	⑦ 건설 현장 고용
	중앙동 상가 지중화 사업	- 쇼핑길 패션·청춘공간 L=1.40km	HW	인프라 계획	⑦ 건설 현장 고용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 오폐수 분리 관로 교체 - 마을 하수처리 시설 22개소	HW HW	인프라 계획	⑦ 건설 현장 고용

자료: 순천시청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2019.6.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10 | 사업단계 및 분야별 순천시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창출 구조



자료: 저자 작성.

(1)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먼저 2014년 선도사업이 시작되면서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이 고용되었다. 2019년 6월 현재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포함 10명이 고용되어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은 2014년 사업이 시작되면서 바로 창출되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은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확실한 고용 창출 유형이나 그 규모가 작고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재생사업 종료 후 지속적 센터 운영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화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2) 시설물 관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같은 마중물 사업 중, 시설물 관리 사업 역시 공공부문 일 자리를 창출하였다. 사업 마무리 단계인 2017년부터 순천시 내 거점시설 6개의 관리직원을 고용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2019년 6월 현재 서문안내소, 영동1번지 등 시설물 사후관리 직원 31명이 고용되어 있다. 시설물 관리 관련 마중물 사업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부처협업사업(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에 따른 추가 고용 역시 발생하였다.

시설물 관리 관련 사업체는 대부분 자영업이고, 마을 안내소의 경우에만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처음 입찰 시, 순천시에서는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하여 업무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해당 사업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협동조합에 참여했던 주민들 중, 2~3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대한 다른 사업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별도의 사업을 통하여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재생대학 운영

2015년부터 운영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공공부문과 사회적 경제, 지역산업의 전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되었다. 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2016년부터 도시재생대학 수강생이 마을활동가나 해설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었다. 순천시에서는 재생사업과 관련된 마을 활동가분들에게 도시재생대학 수강 6개월 후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업 추진단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소규모 마을사업(공모사업)을 진행하게끔 유도하였다. 2019년 6월 현재 순천시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40개 중, 재생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기업은 9개 정도이다.

또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기운영중에 있는 주민들도 도시재생대학 수업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 및 마을기업, 창업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도시재생대학과 함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선정을 통하여 고용이 확대된 사례도 목격된다. 순천시청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재생사업 과정에서 약 320명 정도가 도시재생대학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현재 약 32명의 마을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참여 등의 지역 기반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되었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활동가 및 기획자 양성 과정에서 순천시에서 집중한 부분은 주민 공모사업에 있었다. 특히 재생사업을 통한 공동체 교육의 경우 3인 이상 참여 시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공동체 사업이나 별도 법인을 조성, 수익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공모사업은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로 구분되는데, 순천시에서는 일반공모는 200만 원에서 500만원 정도, 기획공모는 연속성을 가지는 사업에 대하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예술·문화기획 부분의 경우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순천시에서 합동 행사축제 계획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공모사업의 중요성은 위탁계약 없이 시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심 사업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순천시 재생사업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공모사업에 참여한 사업체 중 20내지 30% 정도가 최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순천시 선도사업의 경우 도시재생대학과 주민 공모사업을 연계하는 경로를 통하여 2018년 한해 약

10개의 사업체에서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천시의 경우 공모사업은 일자리 창출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설립된 사업체가 확장·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순천시 내 사회적기업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조성에도 일조를 하였다¹⁸⁾.

표 3-24 | 순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연 도	내 용	사업비	참여단체
2015	- 일반공모: 선도지역 내 소재 기관·단체 등(단체 또는 법인등록) - 기획공모: 순천시에 소재지를 둔 정원, 생태 관련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	6
2016	- 동네가게-예술가 협업을 통한 공공미술/디자인 - 도시역사-문화공간연계 원도심 문화투어 프로그램 - 청년문화교류 및 거점화령화 프로그램	총 8천만 원	9
2017	일반공모: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자유주제)	팀 별 600만 원 이내 (자부담 10% 이내)	12
	기획공모: 2016년 도시재생 주민공동체사업 발굴 교육을 통해 제안된 의제 실행사업		14
2018	2017년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환경디자인 제안을 활용하여 중앙시장 건너편 옥천변 옹벽 개선	팀 별 2억 1천 만 원 이내 (자부담 5% 이상)	-
	옥천변 활성화를 위한 옥천변 옹벽경관 개선 공모사업	팀 별 2억 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4
	도시재생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골목가게 마케팅 지원 공모사업	점포당 250만 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7
2019	장천동 당구 동호회, 새마을 지도자 장천동협의회, 수제맥주 개발교육, 예그린(메이크업, 네일아트 진행), 장천축제학교	장천축제학교 건 1천 오십만 원 (자부담 5%이상) 수제맥주 교육 건 382만 원 (자부담 13%이상) 그 외 사업 3백만 원 (자부담 5%이상)	5
	일반공모: 공동체활성화 모임지원, 저전동 알리기, 생태마을 만들기, 돌봄마을 만들기, 안심마을 만들기, 기타 등	건 당 3백만 원 내외 (자부담 5%이상)	5
	기획공모: 에너지저감주택 만들기	건당 1천만 원 내외 (자부담 5%이상)	

자료: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http://urc.sc.go.kr/web/bbs/content.php?co_id=sub042_05, 2019년 10월 15일 검색)를 토대로 저자 작성.

18) 순천시 내 중앙센터에 사회적기업 양성프로그램 기획서를 계획, 순천형 사업에는 2천만원 지원, 전라남도 사업에는 3천만원 지원, 행정안전부 사업에는 5천만원의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음

(4) 주거정비사업

마중물 사업과 부처협업 사업을 통해서 진행된 주거정비사업은 단기 고용과 함께 지속적 고용을 함께 창출하였다. 마중물 사업인 금곡 에코지오 마을만들기와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지원의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 현장 단기 고용이 발생했으며, 사업이 완료된 2018년부터는 빈집 리모델링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어 2019년 6월 현재 12명이 고용되어 있다.

순천시 재생사업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전체 단위사업 중 시설사업이 32건, 프로그램 사업이 27건이었으며 이 중 프로그램 사업과 노후 집수리 등을 포함한 주거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 사업체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도록 순천시에서 지원을 하였는데, 2018년 4개 사업체가 선정되었고, 2019년 현재 3개 사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한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가능성은 확보하기 어렵다.

(5) 지역문화사업 지원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된 지역문화사업은 신규 창업과 함께 기창업한 기업의 고용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신규 창업은 대부분 2016년 사업이 안정화된 단계부터 발생하였으며, 2019년 6월 현재 약 76명이 고용되어 있다. 재생사업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재생사업 과정에서 여러 주민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었다. 지역문화사업 지원의 경우, 특히 앞선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 공모사업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순천시에서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던 주민이 도시재생대학을 수강하고, 이후 옥천 수변공간 개선, 창작예술촌, 무지개 테마거리 조성과 같은 지역문화사업을 통해 공간이나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체를 확장하여 고용 증가 효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창작예술촌 조성사업의 경우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시에서 주관하는 다양

한 행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현재 100여 개의 개인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16명이 고용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앨리스의 경우 재생사업 추진 이전인 2013년 10년 그림을 그리던 세 명의 작가들이 순천시 문화의 거리에 작업실을 마련하면서 시작한 기업이다. 문화기획에 관심이 있었던 현재 앨리스의 대표는 이후 2013년 12년 재생사업을 준비하던 순천시에서 운영한 도시재생대학을 수강한 후, 2014년 10월 사회적기업 창업팀에 들어가 법인 인가를 받게 되었다.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6년 5명, 2017년 8명을 신규 고용하였으며, 2018년에는 14명이 고용되어 2019년 6월 현재 대표를 포함하여 총 17명이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사업 초기 도시재생 단위사업 중 청년문화기획자 양성학교 용역에 참여하였고, 이후 노하우가 쌓이면서 재생사업 관련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이나 문화재단 사업, 지자체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보조금 사업이나 기타 디자인 출판 사업 등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였다. 최근에는 순천시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순천시 외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 중에는 재생사업의 청년문화기획자 양성학교를 수강한 사람도 있고, 근무 이후 타 지역의 재생지원센터로 이직을 하거나 문화기획 관련 신규 창업을 한 사람도 있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신용기금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지역문화사업을 통하여 신규 창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확장한 경우, 대부분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지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 기간이 끝날 경우, 기업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사회적기업 앨리스의 경우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이 2020년까지로 현재 인증 이후의 자립을 위해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이나 포털사이트 카페 입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익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다.

(6) 창업 공간 제공

청년 창업의 경우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하여 발생한 사례가 목격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2017년부터 신규 창업이 확인되었다. 창업 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 챌린지숍 운영은 마중물 사업이 아닌 「전통시장 활성화법」을 통하여 지방비를 사용 청년 창업 시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마중물 사업을 통한 지원의 경우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판이나 리플렛과 같은 홍보물이나 사인물 작성 지원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경우 2018년 부터는 상권 확대에 따라 자발적인 창업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순천시 서문로 일대에 일명 옥단길이라는 상권이 확대되면서 자생적인 청년 창업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진흥법」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순천시 내 청년 창업이 성공한 이유로 순천시 재생사업 담당 공무원은 좋은 위치에 창업 공간을 제공한 것을 꼽았다. 타지역 사례에서 재래시장 지하나 방문객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청년몰 등의 청년 창업 공간을 지원한 것과 달리 순천시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의 지역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 자연발생적 창업이 증가하였다고 평가 된다. 또한 순천시 자체 사업 중 공방지원사업을 통해 월 20 ~ 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이 재생사업과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7) 인프라 계획

마지막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된 인프라 확충 사업(중앙동 상가 지중화 사업,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사업 초기인 2015년부터 단기 건설 현장 고용이 발생하였다. IO 분석을 통해 확인된 건설 단계에서 파생된 일자리는 약 165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순천시청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재생사업을 통한 인프라 확충 사업의 경우 지역 내 고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4. 도시재생 일자리 속성 및 정책 과제

1) 도시재생 분야 취업자 대상 설문조사

(1) 응답자 일반 현황

도시재생 분야 취업자 대상 설문조사는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차 조사기간(2019. 10. 1. ~10. 15) 중 설문 회수율이 저조하여, 2차 조사(2019. 10. 16~10. 31)에 추가조사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방법은 1:1 면접 조사와 웹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최종 설문응답자는 총 235명이다.

표 3-25 | 일반인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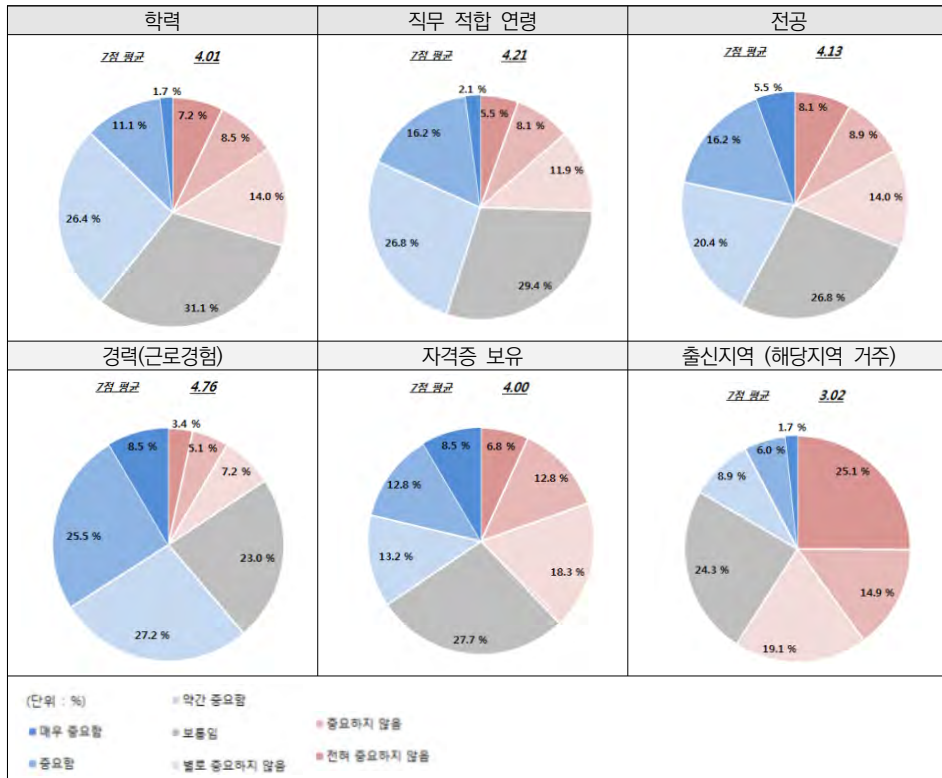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83)	77.9
	자영업주	(52)	22.1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150)	82.0
	임시근로자	(30)	16.4
	일용근로자	(3)	1.6
대표 지위	자영자	(33)	63.5
	고용주	(19)	36.5
종사 분야	공공 분야	(70)	29.8
	사회적경제 분야	(73)	31.1
	지역산업/민간 분야	(92)	39.1
성별	남성	(118)	50.2
	여성	(117)	49.8
연령	20대 이하	(50)	21.3
	30대	(80)	34.0
	40대	(57)	24.3
	50대	(33)	14.0
	60대 이상	(15)	6.4
전체		235	100.0

자료: 저자 작성.

(2) 도시재생사업 분야별 고용 기회 및 개방성의 중요도

현 업무를 위한 고용 조건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현 업무를 위한 학력 중요도는 평균 4.01점으로 보통 수준, 직무 적합 연령 중요도는 평균 4.21점으로 보통 수준, 전공 중요도는 '평균 4.13점으로 보통 수준, 경력(근로 경험) 중요도는 평균 4.76점으로 다소 양호한 수준, 자격증 보유 중요도는 평균 4.00점으로 보통 수준, 출신 지역(해당지역 거주) 중요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의 비율이 19.1%로 가장 높으며, 평균 3.02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고용조건 중 경력(근로 경험)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인 반면, 출신지역(해당지역 거주)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림 3-11 | 현 업무를 위한 조건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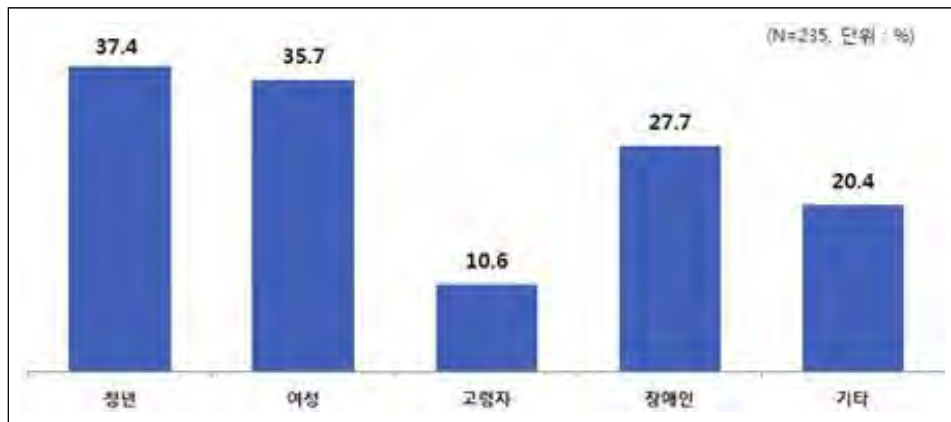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취약계층 고용 조건 유무

현 근무 직장 채용 시 배려가 있는 조건은 '청년'의 비율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성' 35.7%, '장애인' 2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비율이 54.3%로 가장 높으며, 사회적 경제 분야는 '청년' 46.6%, 지역산업/민간 분야는 '여성'의 비율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는 '여성', 60대 이상에서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여 응답자 특성에 따라 응답 내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12 | 현 근무 직장 채용 시 배려가 있는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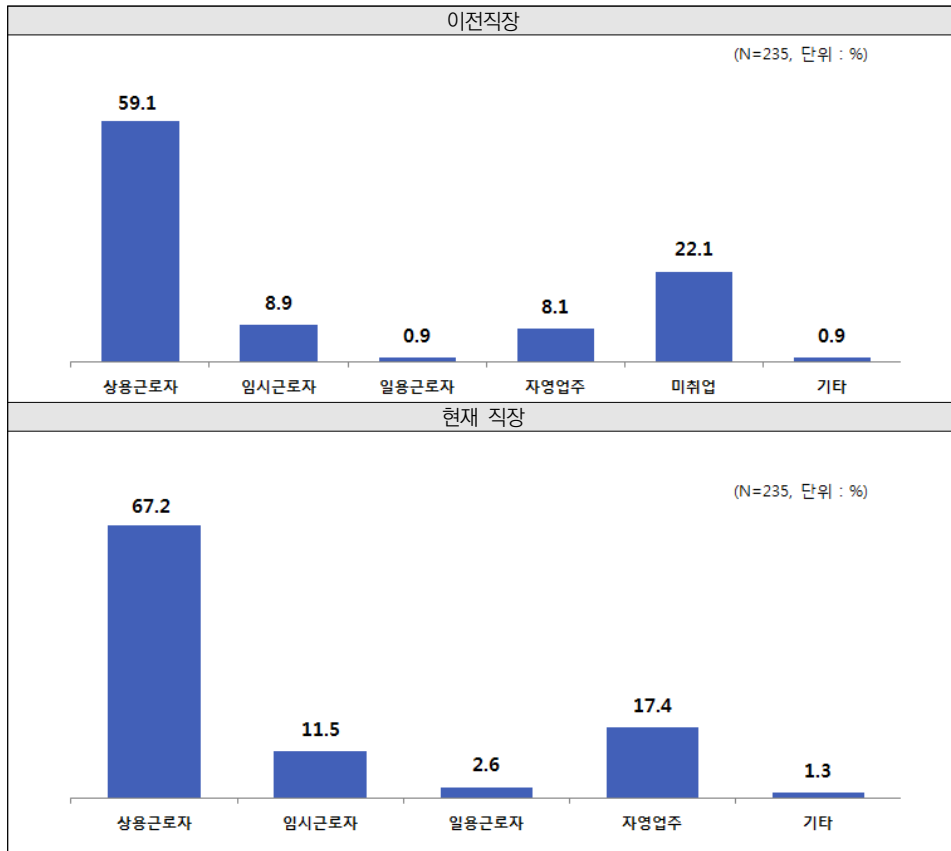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이전 직장과의 현재직장의 고용 여건 차이

첫째, 주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전 직장 고용 형태'는 '상용 근로자'의 비율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취업' 22.1%, '임시 근로자' 8.9%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현재 직장 고용 형태는 '상용 근로자'의 비율이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주' 17.4%, '임시 근로자'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전 직장에서의 미취업 상태였던 이들이 현재 고용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 비교



자료: 저자 작성.

둘째, 이전 직장 주간 근무일수는 '5일 이상'의 비율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당 없음' 22.1%, '기타' 0.4%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현재 직장 주간 근무일수는 '5일 이상'의 비율이 9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4일' 2.1%, '1~2일'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 근무시간은 이전 직장 일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의 비율이 60.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해당 없음' 22.1%,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현재 직장 일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의 비율이 79.6%로 가

장 높으며, 다음으로 ‘4이상 이상 8시간 미만’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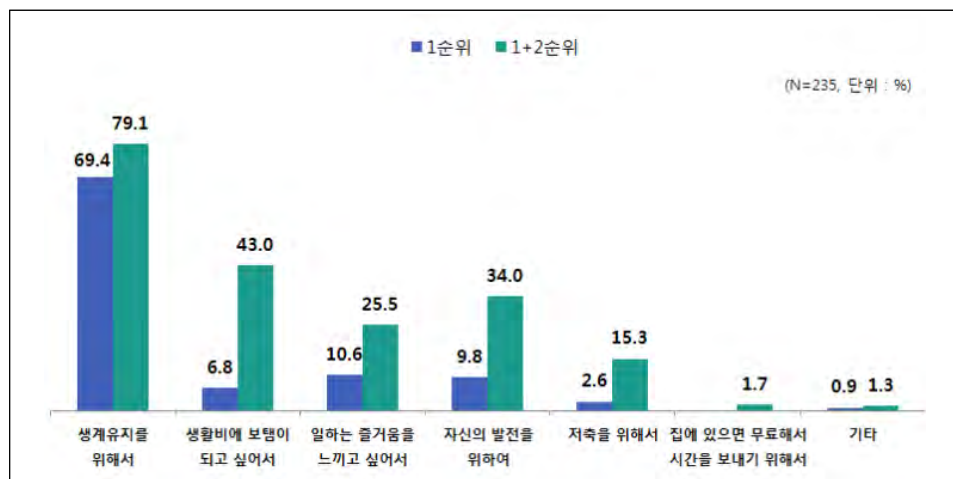
넷째, 4대 보험 가입여부는 이전 직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가입’의 비율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직장은 ‘가입’의 비율이 8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가입’ 11.9%, ‘기타’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장은 종사 분야별로 보면 지역산업/민간 분야가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인 반면, 현재 직장은 공공분야가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임금 수급기간은 전 직장의 임금 수급기간은 ‘월급’의 비율이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직장 역시 ‘월급’의 비율이 9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이유 1순위로는 ‘생계유지를 위해서’의 비율이 69.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10.6%,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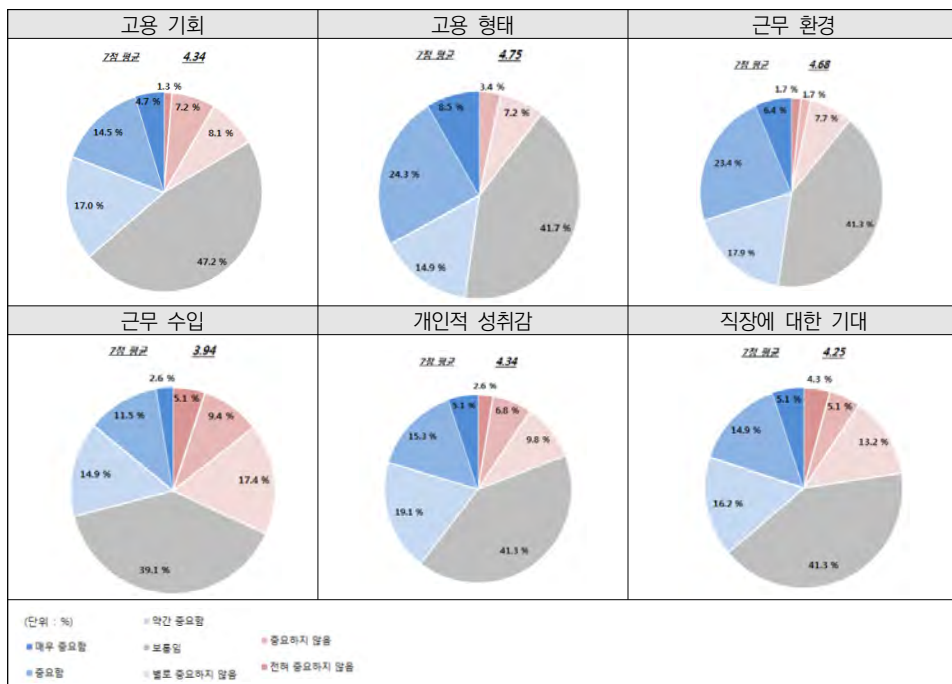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5) 일자리 만족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일자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용기회(고용기회 제공, 취업 및 창업 정보의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활용) 만족도는 평균 4.34점으로 보통 수준,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 고용안정, 계약기간, 보험가입 여부) 만족도는 평균 4.75점으로 다소 양호한 수준, 근무 환경(작업 환경, 직장 내·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평균 4.68점으로 다소 양호한 수준, 근무 수입(급여 수준, 복리후생 수준) 만족도는 평균 3.94점으로 보통 수준, 개인적 성취감(업무를 통한 성취감, 전공·적성·미래에 대한 만족) 만족도는 평균 4.34점으로 보통 수준, 직장에 대한 기대(직장의 성장 가능성) 만족도는 평균 4.25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3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 현재 근무 직장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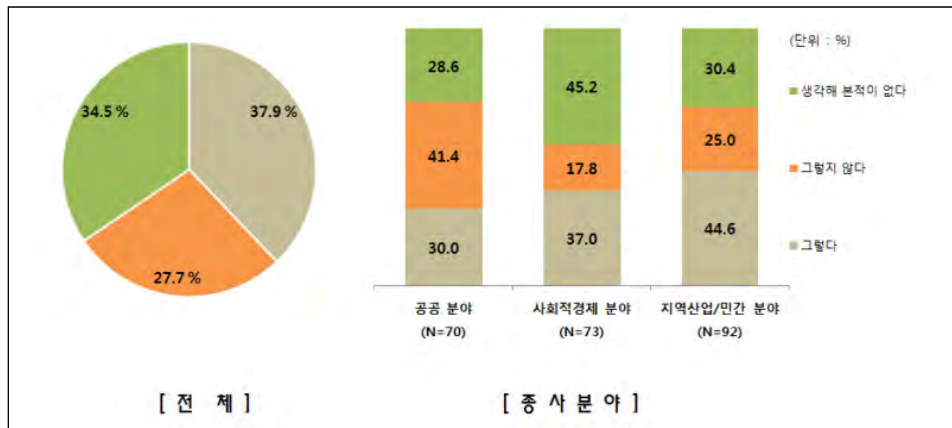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6) 이직 고려 여부 및 이유

향후 3년 이내 이직 고려 여부로는 ‘그렇다’가 37.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4.5%, ‘그렇지 않다’ 2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 분야 별로 살펴보면, 공공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41.4%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 분야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5.2%, 지역산업/민간 분야는 ‘그렇다’가 44.6%로 높게 나타나 종사분야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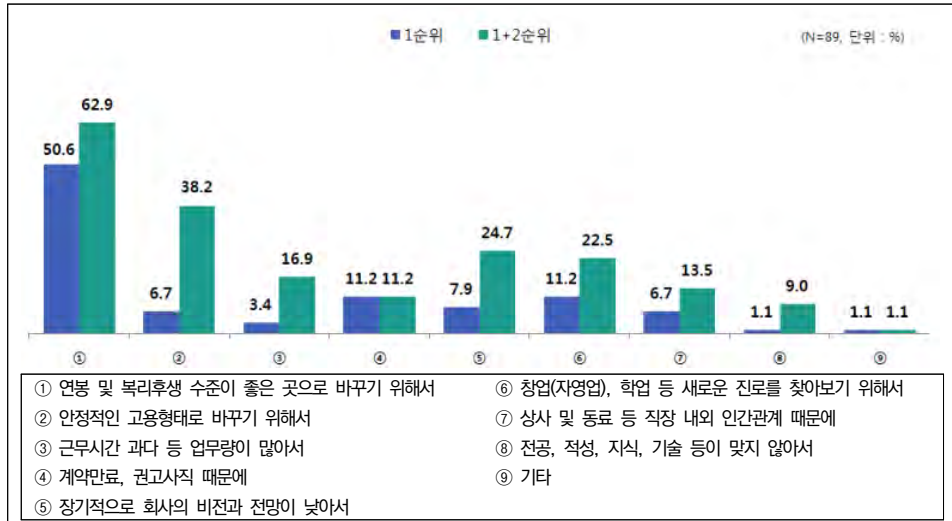
그림 3-16 | 향후 3년 이내 이직 고려 여부



자료: 저자 작성.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 1순위로는 ‘연봉 및 복리후생 수준이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의 비율이 50.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때문에’·‘창업(자영업), 학업 등 새로운 진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11.2%, ‘장기적으로 회사의 비전과 전망이 낮아서’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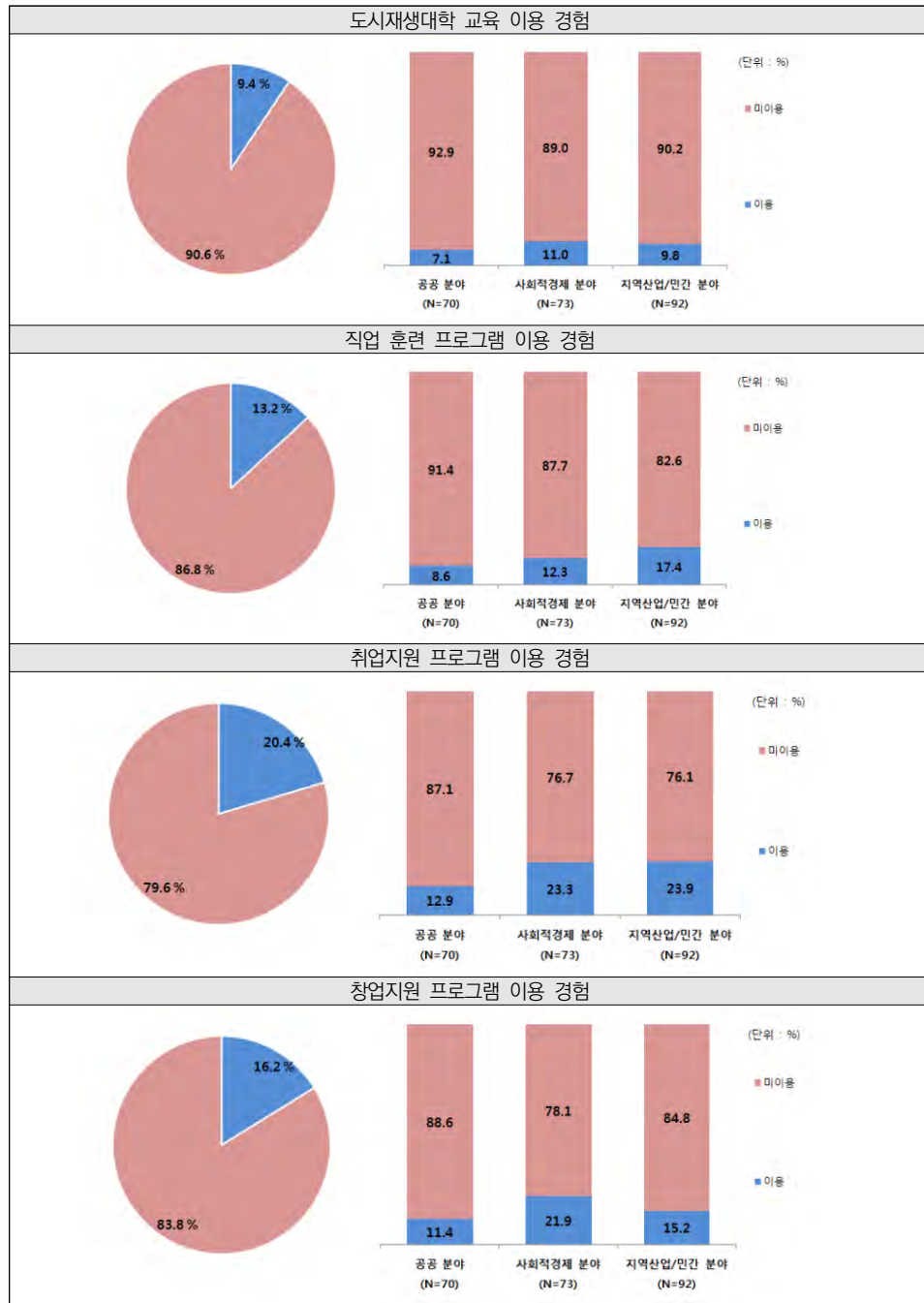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7) 취업 및 창업 관련 제공 프로그램 이용 경험

첫째, 도시재생대학 교육 이용 경험으로는 ‘미이용’이 90.6%로 ‘이용’ 9.4%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용 경험으로는 ‘미이용’이 86.8%로 ‘이용’ 1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산업/민간 분야에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7.4%로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으로는 ‘미이용’이 79.6%로 ‘이용’ 2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산업/민간 분야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3.9%로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2.2%로 남성 18.6%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다. 넷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으로는 ‘미이용’이 83.8%로 ‘이용’ 1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1.9%로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7.8%로 여성 14.5%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다.

그림 3-18 | 취업 및 창업 관련 제공 프로그램 이용 경험 비교



자료: 저자 작성.

(8) 취업 및 창업 관련 제공 프로그램 도움 여부

도시재생대학 교육 도움 여부를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로는 4.0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분야가 4.75점으로 가장 높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4.55점으로 남성 3.6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 교육 도움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보통'의 비율이 51.6%로 가장 높으며, 평균 점수로는 3.9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분야가 4.56점으로 가장 높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4.08점으로 여성 3.8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 도움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보통'의 비율이 31.3%로 가장 높으며, 평균 점수로는 4.0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 분야가 4.56점으로 가장 높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4.12점으로 남성 3.9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4.55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40대 4.10점, 30대 4.0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 도움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보통'의 비율이 31.6%로 가장 높으며, 평균 점수로는 4.3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 분야가 4.88점으로 가장 높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4.47점으로 남성 4.2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4.90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0대 4.38점, 20대 이하 4.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 취업 및 창업 관련 제공 프로그램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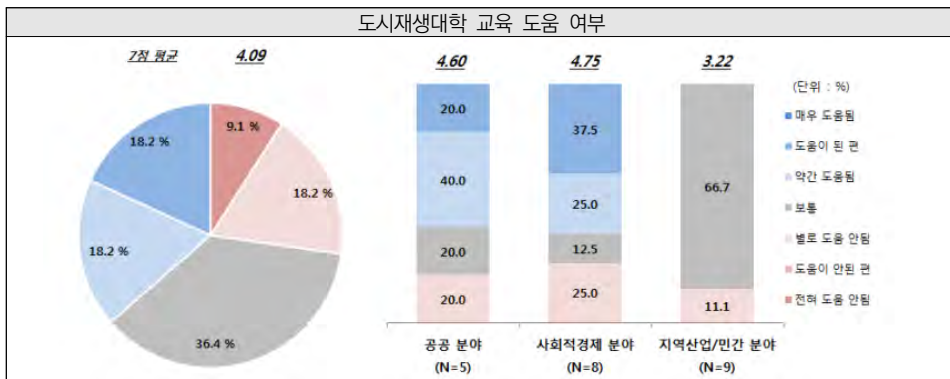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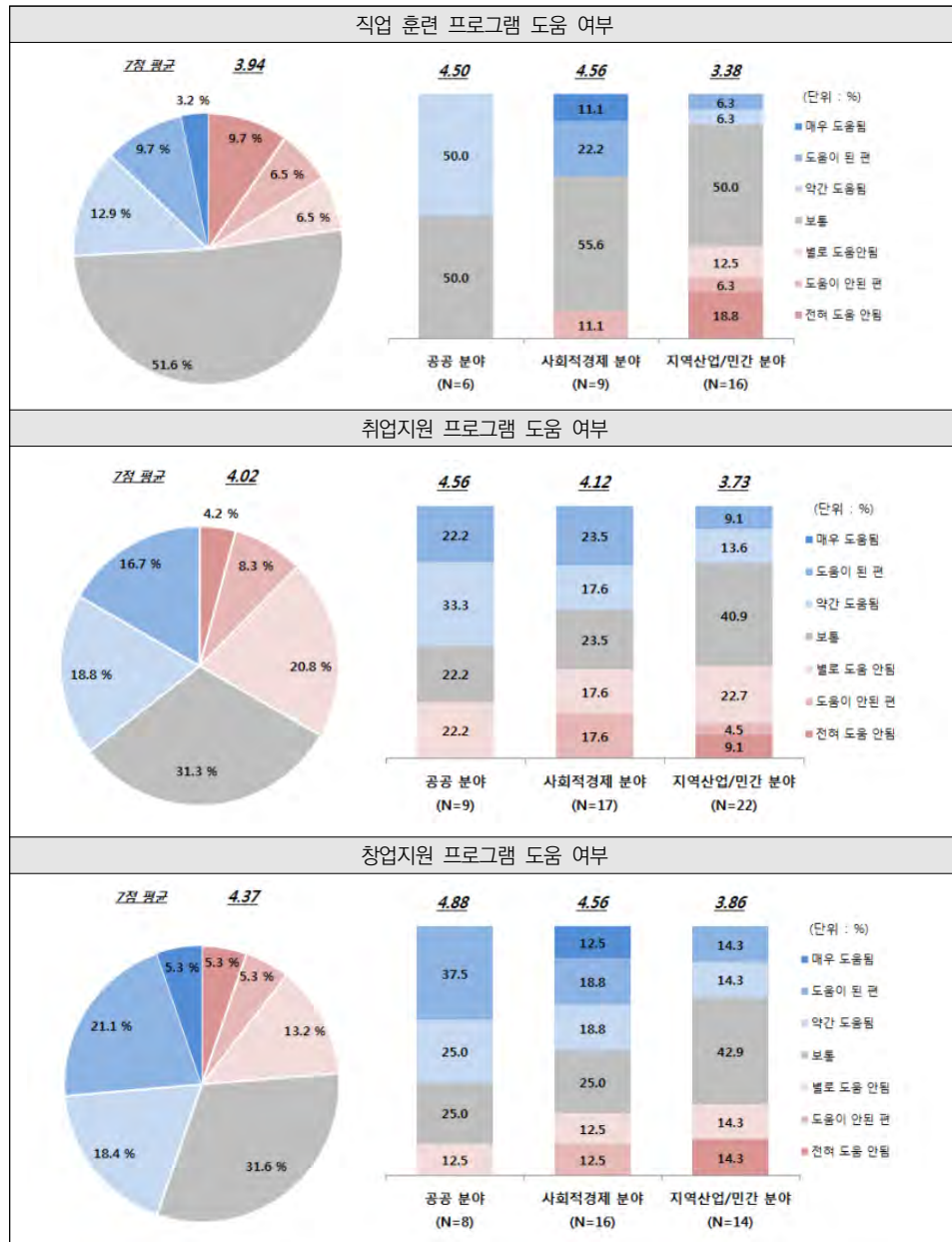


그림 3-19 | 취업 및 창업 관련 제공 프로그램 도움 여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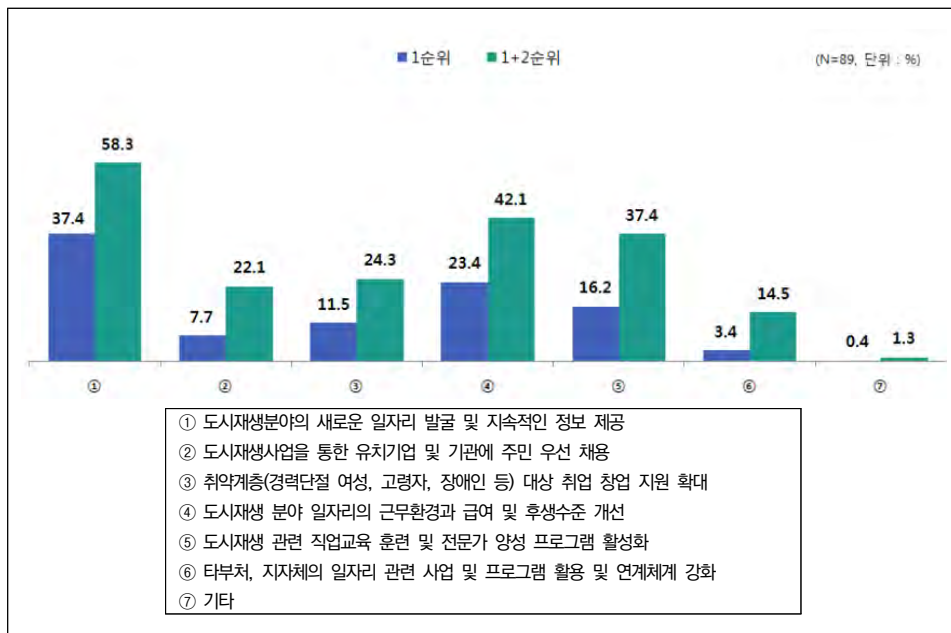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9) 도시재생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 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 과제 1순위를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의 비율이 37.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 23.4%, ‘도시재생 관련 직업교육 훈련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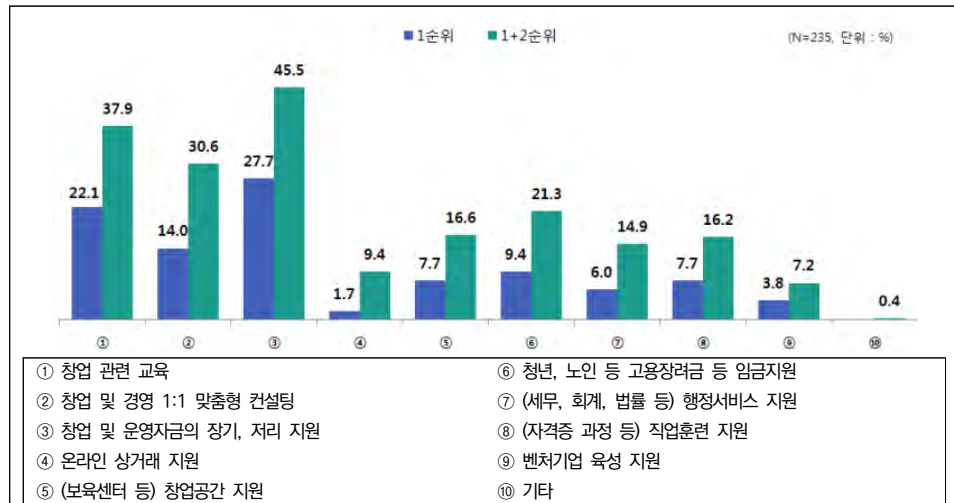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10) 자영업(창업) 활동을 위한 필요 자원

자영업(창업) 활동을 위한 필요 자원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창업 및 운영자금의 장기, 저리 지원’의 비율이 27.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창업 관련 교육’ 22.1%, ‘창업 및 경영 1:1 맞춤형 컨설팅’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 자영업(창업) 활동을 위한 필요 자원



자료: 저자 작성.

2)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1) 응답자 일반 현황

전문가 설문조사는 1차 조사기간(2019. 10. 1. ~10. 15) 중 전국 50인의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합을 완료하였다.

표 3-26 | 전문가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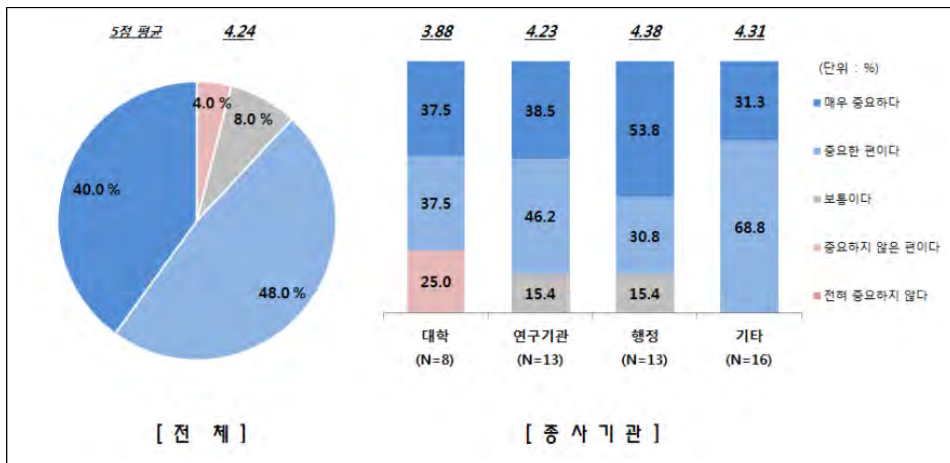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조사기관	대학	8	16.0
	연구기관	13	26.0
	행정	13	26.0
	기타	16	32.0
전문분야	도시계획 및 설계	30	60.0
	도시지역경제	3	6.0
	교통 및 인프라	1	2.0
	주택 및 토지정책	8	16.0
	환경정책 및 계획	1	2.0
	기타	7	14.0
전체		50	100.0

자료: 저자 작성.

(2) 일자리 창출 목표의 중요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44인)가 도시재생 목표로서 일자리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크거나 높다고 응답하였다. 현 정부의 정책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지역일자리라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로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평균 4.24점으로 나타났다으며, '중요함(중요한 편이다 + 매우 중요하다)'이 88.0%로 '중요하지 않음(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전혀 중요하지 않다)'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사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은 4.38점, 기타는 4.31점, 연구기관은 4.23점, 대학은 3.8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 |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중 일자리 창출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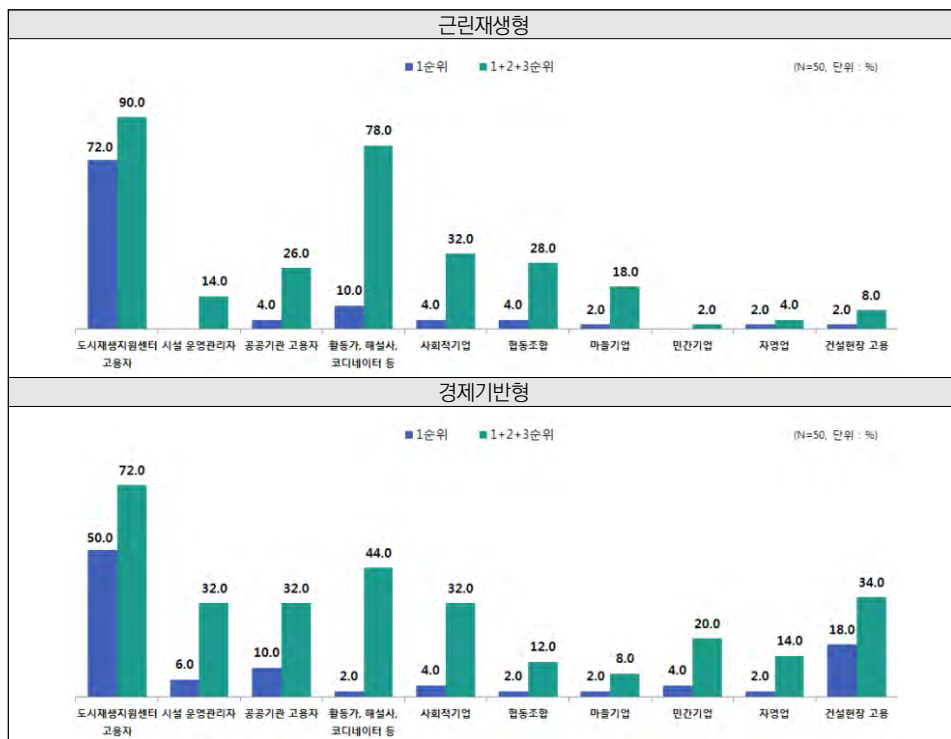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일자리 창출 현황과 기대

이에 반해 일자리가 순조롭게 창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간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되었던 유형별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구분하였을 때, 근린재생형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이 72%, 활동가, 해설사, 코디네이터가 4%로 공공분야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기반형은 도시재생지원센터 50%, 공공기관 10%, 건설현장 19%로, 하드웨어 시설 건설에 따른 일시적인 고용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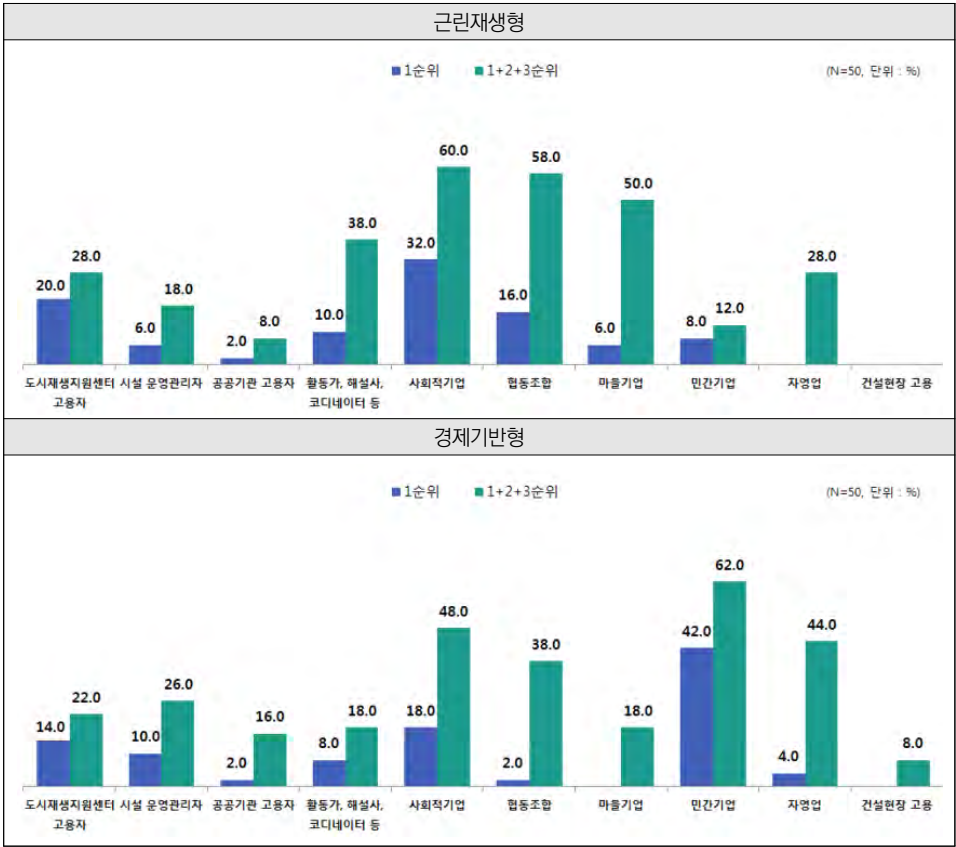
그림 3-23 |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많은 분야



자료: 저자 작성.

향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분야는 근린재생형의 경우, 사회적기업(32%), 도시재생지원센터(20%), 협동조합(16%), 해설사(10%), 민간기업(9%) 순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기반형은 민간기업 42%, 사회적기업 19% 순으로 나타나 사례조사에서와 같이,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분야에 대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 |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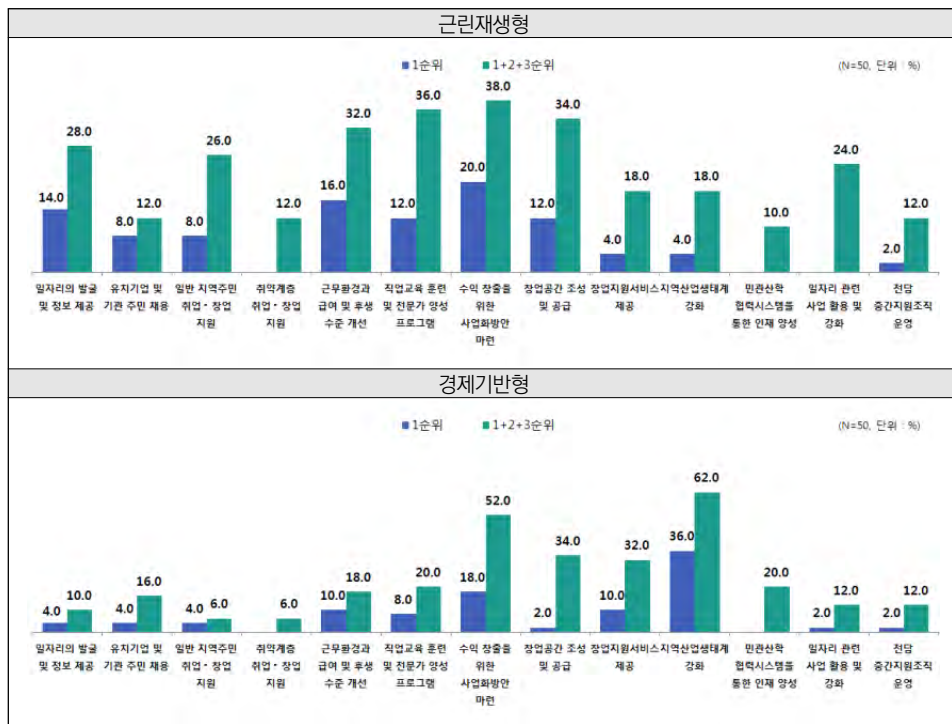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4) 사업유형별 일자리 지원정책의 중요도

사업유형별로는 근린재생형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지원정책은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20%),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16%),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14%) 순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 기업유치/지역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강화(36%),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10%) 순으로 지역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5 | 사업유형별 중요 일자리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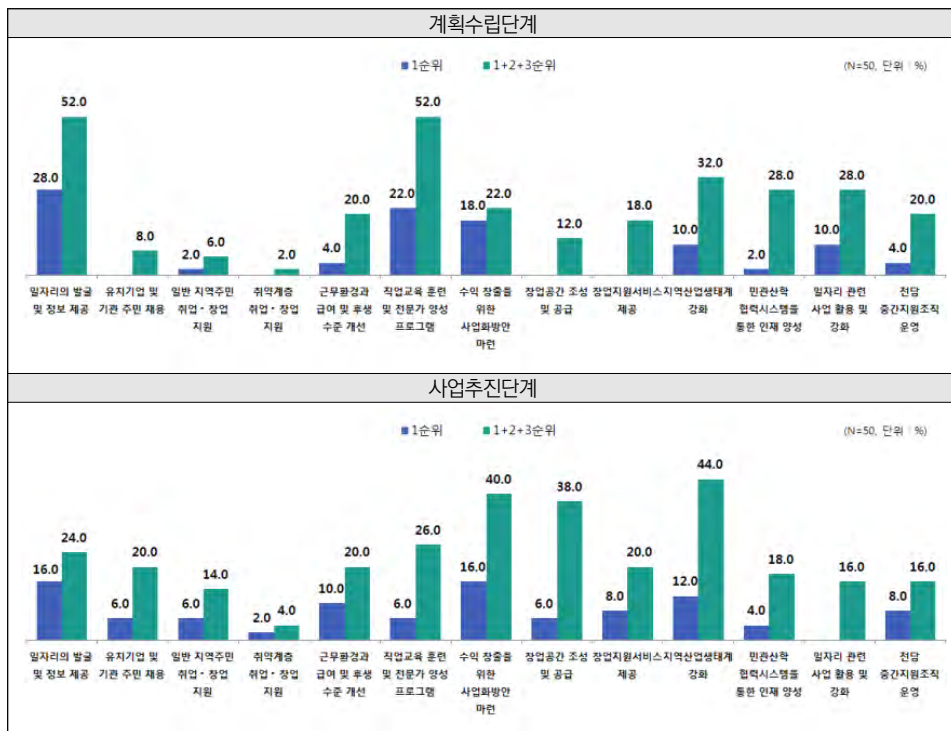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5) 사업단계별 일자리 지원정책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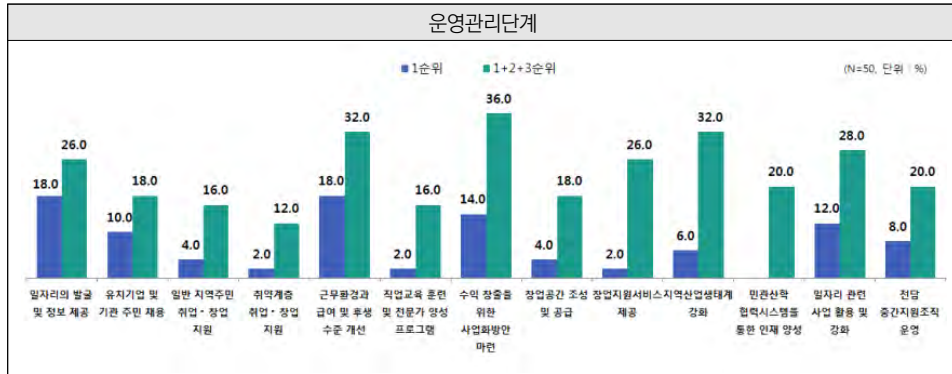
사업단계별로는 계획수립단계의 경우,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29%), 도시재생 관련 직업교육 훈련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22%),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19%)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16%),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16%), 기업유치/지역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강화(12%) 순으로 나타났고, 운영관리단계에서는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19%)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6 | 사업단계별 중요 일자리 지원정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6 | 사업단계별 중요 일자리 지원정책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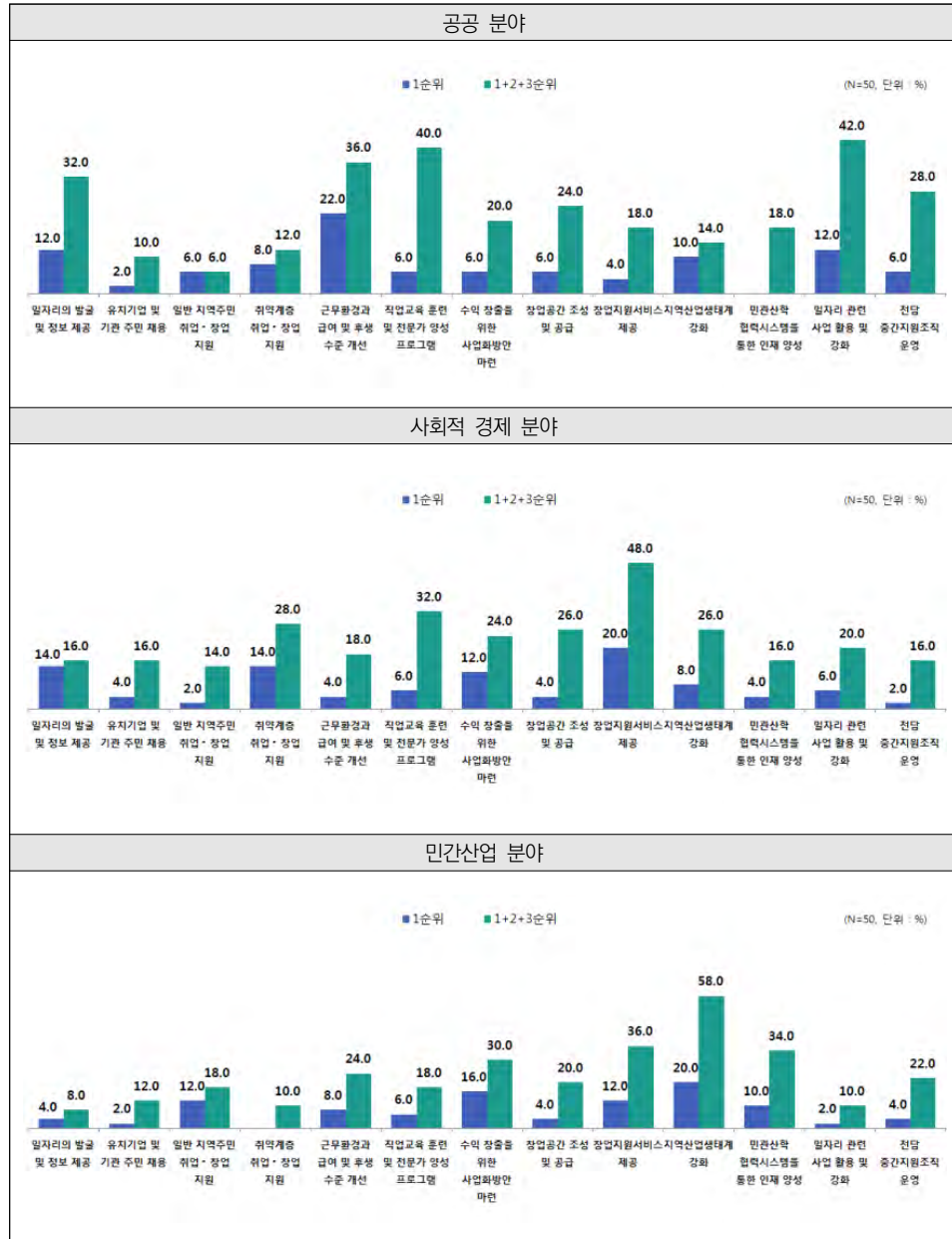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19%),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14%), 부처/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활용 및 연계체계 강화(12%) 등으로 나타났다.

(6) 일자리 분야별 일자리 지원정책의 중요도

일자리 분야별 지원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공공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22%),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12%), 도시재생과 타 부처/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활용 및 연계체계 강화(12%)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민간/청년기업 등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20%),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12%),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14%)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분야에서는 기업유치/지역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강화(20%),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16%)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 분야별 중요 일자리 지원정책



자료: 저자 작성.

5. 시사점

본 장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4곳에서의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한 심층 조사,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일반인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 창출 현황의 전반적인 특징과 성과,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3-27 | 사례분석 결과 종합

사례지	일자리 창출 성과	과제 및 한계
충북 청주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협업사업, 지자체 문화도시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향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장 가능성 높음	- 경제기반형의 사업 특성상 민간부문 일자리, 주변지역 일자리 파급효과 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간 필요 -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광역 차원에서의 산업정책과의 연계 등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서울 종로구 (창신·송인)	- 창출된 일자리 수는 많지 않지만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지역과 청년을 연계한 창업사례 등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이 많음 - 공공시설 관리, 시설 운영 등 위탁 운영을 통해 지속적 고용을 창출하는 특성이 있음	- 사업 이후까지 지속되는 일자리의 양적 한계 -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인한 직접 고용의 한계 - 지속성 이외의 측면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 필요 - 지역 주민 고용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충남 천안시	- 마중물사업으로 공간 제공, 부처협업으로 문화콘텐츠 등을 공급하여 직접일자리 580여개 창출 -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가 유치 시 중간지원조직(충남콘텐츠코리아랩)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원 - 원도심 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연관 중간지원조직과의 접근성 확보	- 청년 창업의 경우 정부재정 투입에 따른 사업추진의 경직성으로 인해 창업의 성공가능성이 낮음 - 지원이 단기성과중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컨설팅 및 관리요구가 있으나 이를 수행할만한 중간지원조직의 여건이나 역량 부족 - 주변 상인 등과의 마찰로 인해 사업추진 어려움
전남 순천시	- 대부분의 일자리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건설 현장 고용 이외에 창업 등은 지속가능성이 높았음 - 기존 주민의 창업은 지자체 위탁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시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후 지자체 사업의 위탁계약을 한 것이 큰 계기가 됨	-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지역문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신규 창업이나 기존 사업체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많은 고용이 창출되었으나, 재생사업 완료 후 수익모델을 마련하지 못한 사업체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재생사업이나 지자체 공모의 경우 지역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우선 도시재생 선도지역 4개 사례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일자리 창출 성과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협업사업, 지자체 문화도시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향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산업·민간분야 일자리의 경우, 원더플레이스와 같은 상업시설 매장의 경우 앞으로 지역 사람 위주로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늘리려고 자체적으로 노력 중이다 다만, 본 연구의 사례지역 중 유일한 경제기반형 사업으로써 지역산업·민간분야 일자리의 중요성이 큰 사업임과 동시에 민간기업 및 상업시설의 유치는 시장 상황, 민간 수요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 및 사회적경제 분야에 비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기반형의 사업 특성상 민간부문 일자리, 주변지역 일자리 파급효과 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광역 차원에서의 산업정책과의 연계 등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종로구 창신·송인은 4개 사례지역 중 사업 종료 후 일자리 연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주로 지역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청년 중심으로 나타나면 현재까지 창출된 일자리 수가 많지는 않지만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수요를 파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자리 관련 훈련, 기회제공을 통하여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 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으로 지역과 청년을 연계한 창업이 지속적으로 확장(ex: 구미호, 단지스토리, 창작단 등)되고, 지역주민의 역량 제고를 통하여 서울시와 종로구,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관리, 시설 운영 등 위탁운업을 요청받아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창신·송인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양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분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경우도 사회적경제, 지역산업·민간분야 일자리에 비하여 안정적인 반면 프로젝트성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경우 여전히 시간제, 일용직 일자리 등이 많아 향후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천안시는 마중물사업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부처협업사업으로 문화콘텐츠 등을 공급하여 직접일자리 580여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가들을 유치할 때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창업 및 문화예술 일자리의 확산과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하여 천안시 원도심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연관 중간지원조직과의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천안시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을 살펴보면 청년 창업의 경우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사업 추진은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은 편이고, 정부 지원 역시 단기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컨설팅 및 관리가 초기 지원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수행할 만한 중간지원조직의 여건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창업,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상인 등과의 마찰문제 등이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순천시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건설 현장 고용 이외에 창업 등은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재생사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분야는 사회적기업과 청년 창업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지역문화사업 지원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기존 주민의 창업은 지자체 위탁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시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후 지자체 사업의 위탁계약을 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기존 사업체 확장 과정에서는 지자체 공모나 타부처 공모 사업에의 참여가 좋은 발판이 되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의 경우 1년 단위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낮으며, 이직률 역시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단기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지역문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신규 창업이나 기존 사업체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많은 고용이 창출되었으나, 재생사업 완료 후 수익모델을 마련하지 못한 사업체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생사업이나 지자체 공모의 경우 지역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서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재생 일자리 속성 및 정책과제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 과제를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의 비율이 37.4%로 가장 높으며,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 23.4%, ‘도시재생 관련 직업교육 훈련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1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 유형별 일자리 지원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유형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 과제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근린재생형은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20%),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16%),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기반형은 기업유치/지역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강화(36%),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10%)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재생 일자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취업자 모두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조달방안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도시재생 일자리와 주변에 창출된 수익이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를 적절하게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CHAPTER

해외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 1. 해외사례 분석 개요 | 129
- 2. 미국 프라미스 존 사업 | 130
- 3. 일본 IT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재생 사례 | 139
- 4. 시사점 | 148

해외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본 장에서는 도시재생과 유사한 공공정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먼저 빈곤 근린의 장소기반형 재생 사례인 미국의 프라미스 존을 살펴보았다. 프라미스 존 사업은 중앙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여러 중앙 부처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적은 지역에 청년 고용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주체인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거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살펴본 일본 사례는 인구 소멸 문제를 직면한 지방도시에서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IT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지역재생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지원에 관한 함의를 제공한다.

1. 해외사례 분석 개요

3장에서 국내 도시재생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 사회적경제, 지역산업·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의 양과 질적 수준에서 여러 한계 역시 드러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해외사례는 없지만, 인구·산업·경제적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중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사업 목표인 정책 사례들을 선정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 선정한 미국과 일본 사례는 모두 빈곤율이 높거나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경쟁력이 약한 지역이 어떻게 지역 재생과 동시에 고용 증가를 달성하였는가를 보여준다.

미국 프라미스 존 사업 사례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여러 중앙 부처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적은 지역에 청년 고용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빈곤한 근린 대상의 장소기반형 활성화 및 재생 사업으로 5대 목표 중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과 유사하게 개별 사업지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사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일본 사례는 인구 소멸 문제를 직면한 지방도시에서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IT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을 재생한 사례이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적인 지역창생정책 추진과 동시에 지자체별 노력이 이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이미 널리 소개된 지역창생정책이 아닌 IT 기업 유치를 통한 두 개 지자체의 지역재생사업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참고하였다.

본 장에서 다룬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모두 빈곤하거나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한계를 내포한 지역에서 추진된 사례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일자리 창출의 과정이나 목표, 성과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사례가 국내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2. 미국 프라미스 존 사업

1) 개념과 목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빈곤한 근린을 대상으로 한 장소기반형 활성화·재생 사업인 프라미스 존(Promise Zone)¹⁾의 추진을 공표하였다. 연방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해오고 있는 다른 장소기반형 사업들(place-based Initiatives)²⁾과 유사하게 프라미

1) HUD Exchange, Promise Zone Overview [<https://www.hudexchange.info/programs/promise-zones/promise-zones-overview/>] (2019년 10월 10일 검색)

2) 연방정부 주도의 장소기반형 사업으로는 임파워먼트 존(Empowerment Zones), 프라미스 근린(Promise Neighborhoods), 초이스 근린(Choice Neighborhoods), 스트롱 시티(Strong Cities), 스트롱 커뮤니티(Strong Communities),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ies) 등이 있음

스 존 사업 역시 ‘아이들의 미래가 유년기 거주지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프라미스 존 사업의 목표는 크게 다음의 5가지로 구분된다: 1) 일자리 창출, 2) 주민의 경제적 기회 확대, 3) 교육 기회 확대, 4) 범죄 감소, 5) 지역 내 민간자본 투자 확대. 이렇듯 프라미스 존 사업은 5가지 정책적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장소기반형 사업이므로 개별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별로 특화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³⁾. 예를 들어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목표로 주택 부담 가능성 확대, 주민 건강과 복지 증대, 근린 기반시설 확대, 인터넷 보급 확대 등이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라미스 존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최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기회 확대라 할 수 있다.

2)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정책

2019년 9월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총 22개 프라미스 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프라미스 존 사업은 도시형(urban), 농촌형(rural) 및 전통마을형(tribal)의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2014년 5개소(제1기), 2015년 8개소(제2기), 2016년 9개소(제3기) 순으로 3년에 걸쳐 총 22개 사업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전체 22개 사업 중 도시형은 14개소, 농촌형 4개소, 그리고 전통마을형 4개소로 구분된다. 프라미스 존 사업은 사업 당 최대 10년 간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4년 1월에 시작된 제1기 사업은 2023년 말, 2015년 1월에 시작된 제2기 사업은 2024년 말, 2016년 1월에 시작된 제3기 사업은 2025년 말 종료될 계획이다.

3)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2015. Promise Zones: Supporting Community Change, An Interview with Margeaux Akazawa. HUD's PD&R Edge [<https://www.huduser.gov/portal/pdredge/pdr-edge-trending-121415.html>] (2019년 10월 8일 검색)

그림 4-1 | 미국 프라미스 존 사업지역 22개소



자료: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Image/Promise-Zone-Communities.png] (2019년 10월 8일 검색)

프라미스 존 내에서의 혜택은 세금 감면 이외에도 연방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의 자금 및 기술지원이 있다. 참여 부처로는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등이 있다⁴⁾. 각 부처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정책 변동 등에 의해 바뀔 수 있다.

4)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programs/promise-zones/federal-partner-funding

3) 프라미스 존 사업 사례 및 성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라미스 존 사업은 도시형, 농촌형, 전통마을형으로 구분된다.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도시형 사업 중 2014년에 시작하여 일정한 성과가 창출된 제1기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배경과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1) 로스앤젤레스 프라미스 존(Los Angeles Promise Zone)

로스앤젤레스 프라미스 존은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할리우드, 이스트 할리우드, 코리아타운, 피코 유니온, 웨스트레이크 지역들을 포함하여 구획되었다⁵⁾. 해당 지역 내 인구는 대략 16만 명 정도이나 전체 가구의 약 1/4 정도가 연봉 1만 5천불 이하를 받고 있어 빈곤율이 35%에 이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25세 이상 성인 인구도 35%나 되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은 프라미스 존 사업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1기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다⁶⁾.

로스앤젤레스 사업의 목표는 앞서 프라미스 존의 정책 목표와 같이 1)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활성화, 2) 교육기회 확대, 3) 근린 안전 제고, 4) 지속가능하고 활기찬 환경 조성이다. 사업은 2014년 1월 착수되어 2019년 9월 현재 추진 중이며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본적인 사업 주체는 로스앤젤레스시(市)이나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중시된다. 따라서 아동정책연구소(Youth Policy Institute) 외 30여개의 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⁷⁾ 사업 예산으로 연방정부로부터 2014~2015년에 걸쳐 약 100백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은 교육부문(87%)과 경제활동 부문(7%)에 편성되었다.

-and-technical-assistance-opportunities/#us-department-of-agriculture] (2019년 10월 11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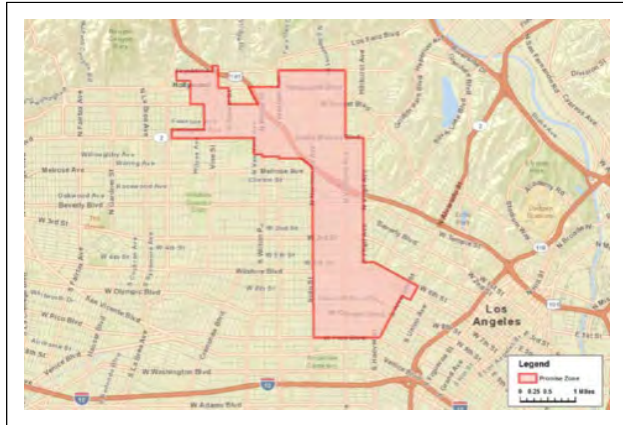
5)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romise-Zones-Designee-Los-Angeles.pdf] (2019년 10월 11일 검색)

6)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romise-Zones-Designee-Los-Angeles.pdf] (2019년 10월 11일 검색)

7)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romise-Zones-Designee-Los-Angeles.pdf] (2019년 10월 11일 검색)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2014~2015년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우선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리더십 위원회 및 5대 분과위원회(① 경제활동 분과, ② 교육 분과, ③ 근린 분과, ④ 공공안전 분과, ⑤ 시민참여 및 운영 분과)를 발족하면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였다. 뿐만

그림 4-2 | 로스앤젤레스 사업지역 (프라미스 존 1기)



자료: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Los-Angeles-Promise-Plan.pdf>] (2019년 10월 8일 검색)

아니라 프라미스 존 전체 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봉사단체인 아메리코프스 비스타(AmeriCorps VISTA) 회원 5명이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과 경제활동 부문에 투입되면서 교육과 경제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프라미스 존에 거주하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매년 여름마다 약 2천 명의 청년을 민간기업 여름 인턴에 알선, 고용을 촉진하였다. 이 외에도 프라미스 코프스 튜터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고3 학생 중 10%를 2016년 UCLA 합격에 성공시키기도 하였다. 공공안전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의 10대 청소년 혼전 임신 예방 프로그램 지원금,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의 일반 가정 내 납 성분 관련 유해환경 교육 지원금을 통해 교육·홍보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농림부로부터 받은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내 토종 음식 섭취 장려 지원금을 통해 6개의 근린 농지 조성 및 관련 농업직·일용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파머스 마켓 활성화 지원금을 통해 할리우드 동부 파머스 마켓 활성화 및 관련 유통직·판매직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8)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programs/promise-zones/promise-zones-urban-designees/#los-angeles>] (2019년 10월 11일 검색)

로스앤젤레스 프라미스 존의 일자리 창출은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할리우드 녹지 미화 프로그램을 통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약 4만 개의 직간접적 신규 일자리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기어 업 포 로스앤젤레스 프로그램, 유스 커리어 커넥트 프로그램 지원금, 아메리코프스 운영 지원금 등을 통해서 교육직 및 관리직 일자리도 창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남캘리포니아대학과 협업한 연구직 일자리, 지역주민 중심의 청년일자리 등의 창출이 기대된다.

(2) 서부 필라델피아 프라미스 존(West Philadelphia Promise Zone)

서부 필라델피아 프라미스 존은 동쪽으로는 스컬킬 강, 북쪽으로는 지라드 애비뉴, 서쪽으로는 48번가, 남쪽으로는 샌숨 가로 둘러싸인 약 5.2㎢ 규모의 지역이다. 해당 지역 인구는 대략 3만 5천여명 정도로 빈곤율이 51%에 달하는 쇠퇴지역이며, 빈 집의 증가, 높은 범죄율,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상실된 지역이었다. 서부 필라델피아의 사업목표는 1) 일자리 창출, 2) 경제활성화, 3) 교육기회 확대, 4) 민간투자 확대, 5) 중범죄 감소, 6) 빈곤 감소 등 지역 발전에 있다. 사업은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로 2014년 1월에 착수하여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다. 사업 주체는 필라델피아 시장실 소속의 커뮤니티 발전실(Community Empowerment and Opportunity)이며, 드렉셀 대학교, 필라델피아 LISC, CDC 응급센터, 팬 프레시테리안 의료센터, 필라델피아 경찰부, 상무부, 주택청, 공공보건부 등과 협업하고 있다. 별도의 상세한 예산자료는 없으나 2014-2015년 사이 대략 3천만 달러의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민간투자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예측된다⁹⁾.

필라델피아 서부 사업지역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정리하면 로스앤젤레스 사업과 유사하게 거버넌스 부문, 교육부문, 서비스직 부문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사업운영을 위하여 프라미스 존 총괄부장 1인 및 프라미스 존 전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할 아메리코프스 비스타 회원 5인을 고용하였다. 또한 6대 위원회(① 교육 분과, ② 주택 분과,

9) HUD Exchange (2019년 10월 11일 검색)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romise-Zones-Designee-West-Philadelphia.pdf>]

③ 경제발전 분과, ④ 건강 및 복지 분과, ⑤ 공공안전 분과, ⑥ 시민참여 분과)와 3대 분과위원회(① 소기업 및 창업 지원, ② 노동력 개발, ③ 일상 건강 증진)를 발족하여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2015년 10월경 아메리코프스의 대학 및 진로 준비 프로그램 착수를 통해

그림 4-3 | 서부 필라델피아 사업지역 (프라이스 존 17기)



자료: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hiladelphia-Promise-Plan.pdf>] (2019년 10월 8일 검색)

프라이스 존 내부 4개의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생 상담 및 진로 지원을 위해 아메리코프스 비스타 회원 25인을 고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회에 걸쳐 주택 교육 워크숍 개최, 범죄 전과 기록을 가진 청년층의 순조로운 사회 적응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위한 교육직 일자리를 만들었다. 어린이집 및 어린이 문화센터 투자를 통해서도 관련 교육직·서비스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프라이스 존 내 위치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멘토링, 튜터링, 대학 진로 상담 및 등록금 지원 등 유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직 일자리 역시 발생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일자리로는 보건복지부의 프라이스 존 내부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직·서비스직 일자리, 마운튼 버논 매노 인근 비영리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역의 주택 48채 개보수를 통한 건설직 일자리, 식음료 업종 창업 대출을 통한 일자리 등이 만들어졌다. 향후 계획 역시 교육직 일자리와 단기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부터 약 170여 채의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통해 건설직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향후 3회에 걸쳐 추가로 주택 교육 워크숍 개최를 통해 교육직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필라델피아 소재 대학교, 병원,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프라이스 존 거주민 채용을 장려하여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를 창출, 주민의 경제적 소득과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3) 동부 샌안토니오 프라미스 존(San Antonio Eastside Promise Zone)

동부 샌안토니오 사업지역은 샌안토니오에서 손꼽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밀집지역이다. 인구는 대략 6만 4천 명(1만 9천 가구)이 거주하고 있으며 빈곤율은 35.2%, 실업률은 11%가 넘는다. 이러한 특성상 투자가 매우 부족하여 지속적인 빈곤과 교육기회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동부 샌안토니오 사업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 이외에 경제활성화, 교육기회 확대, 민간투자 확대, 중범죄 감소, 빈곤 감소 등으로 필라델

그림 4-4 | 동부 샌안토니오 사업지역 (프라미스 존 1기)



자료: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Image/Promise-Zone-Map-San-Antonio.jpg>] (2019년 10월 8일 검색)

피아의 사업목표와 거의 동일하다. 샌안토니오시(市)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다양한 기관¹⁰⁾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협업 기관들은 연방 정부의 기금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총괄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실행파트너(Implementation Team),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3단계(three-tier)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¹¹⁾.

2014년 1월부터 2016년 초까지 약 2년간 동부 샌안토니오 프라미스 존에서 창출된

10) 협업 기관으로는 SAHA, 맥콜맥 배런 살라자, 어반 스트레이티지, 프라미스/유나이티드 웨이, SAGE, 이스트포인트, 시티 센터 개발, 샌안토니오시 경제발전부, SAISD, 샌안토니오 경찰부, 동물 보호 서비스 단체, SA2020, 주드슨 독립 학교, 성 필립 대학교, 액시온 텍사스 등이 있음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romise-Zones-Designee-San-Antonio.pdf>] (2019년 10월 11일 검색))

11)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romise-Zones-Designee-San-Antonio.pdf>] (2019년 10월 11일 검색)

일자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버넌스 측면에서 프라미스 존 총괄실 및 3단계 조직체에 관련 전문가 및 사무직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민간고용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주한 75만 달러를 통해 프라미스 존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3개 업체를 지원하여 데이터 관리 및 유통업, 숙박업, 헬스케어 업종과 관련된 저소득층 일자리 47개를 창출하였다. 또한 60여 기업체와 1천 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레디 셋 워크 (Ready, Set, Work!)’ 라는 고용박람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약 20여명의 구직자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채용되었다. 이 외에도 기업 지원을 위해 프라미스 존 내부 소기업 창업자금 대출¹²⁾을 활용, 소기업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PRIME 지원금을 저소득 라틴계의 기업 활동에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였다. 한편 노동부로부터 받은 6백만 달러의 예산을 활용하여 정보통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통신업종 기술직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동부 샌안토니오 사례에서는 건설직·서비스직 일자리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먼저 노동부로부터의 유스 빌드 지원금과 직무교육 지원금을 통해 64명의 청년에게 간호직·건설직 일자리를 알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무부 산하 경제발전 행정처로부터 수령한 50만 달러의 지원금을 통해 프라미스 존 내부 상업가로 주변으로 혼합용도지역 및 대중교통중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건설직·판매직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프라미스 존 기초 정보 101 컨퍼런스를 행사 개최를 위한 일용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 과정에서도 건설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향후에는 알라모 전문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교생 등 취학 아동을 위한 직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12) 예산은 국가발전위원회 아메리카 발전 기금 및 은행 기금을 통해 조성함

3. 일본 IT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재생 사례

1) 니치난시 아부라츠 상점가 재생

미야자키현 니치난시(日南市)는 미야자키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인구 약 5만 3천 명의 지방 중소도시로, 2016년에는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의 ‘빛나는 상점가 30선’에 아부라츠(油津) 상점가가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지역이다(송준환, 2018). 본 연구에서는 니치난시 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지방 중소도시의 상권 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1)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고용

니치난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중심시까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외부에서 민간 전문가를 높은 임금에 고용¹³⁾,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이뤄낸 상권 재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니치난시에서 고용된 사업 간 연계 전문관(Project Linkage Manager)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의 5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조정(행정 내의 서로 다른 부서·소속 간의 연결), ② 관계자 간(행정·민간) 연계를 위한 조정(현장과 행정의 연결), ③ 행정 직원의 의식함양을 위한 대화형 회의의 기획·실시(지자체의 긍정적 분위기 형성), ④ 사업 지속을 위한 체제의 구축 지원(사회성과 사업성이 있는 조직 구성), ⑤ 앞의 각 업무에 대한 정보발신(지역 내의 재미있는 사건과 이벤트, 뉴스 등 알리기). 이러한 민간 전문가들은 항상 각 사업에 관련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갔다. 특히 각 사업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쉽게 의견

13) 니치난시에서는 테넌트 믹스 및 지원 매니저 고용을 위한 전국 공모를 실시함. 해당 직종은 4년 임기로 니치난시에 거주하면서 상점가 내 신규 20개의 점포를 유치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 출장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포함, 월 90만 엔(약 900만원)이라는 고액의 임금을 조건으로 333명이 응모한 결과 후쿠오카(福岡)시의 마을(마치즈쿠리) 컨설팅 회사에서 20년간 근무한 민간 전문가가 선정됨. 이후 경제학을 전공하고 도쿄 및 중국 상하이 등의 IT계 회사에서 근무한 전문가가 마케팅 전문관으로 고용됨.

교환이 가능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과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의식을 넓혀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활동 경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민간 전문가들은 지역 활동의 장으로 마을 기업인 주식회사 아부라츠 응원단을 설립하였다. 일반적으로 마을 기업(마치즈쿠리 회사) 설립 시 예산이 공공에서 출자되는 것과 달리 아부라츠 응원단은 공공 지원 없이 지역 주민의 출자(1인당 약 30만 엔, 50명)를 바탕으로 자본금 1천 600만 엔을 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2) 창업 지원을 통한 상권 재생

재생 사업을 통하여 아부라츠 상점가는 단순히 개인 점포들이 모여드는 지역 상권이 아닌 창업을 지원하는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2014년 4월에 아부라츠 카페를 열고, 같은 해 12월에 고령자들을 위한 두부점을 개업하여 상점가의 재생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아부라츠 카페를 개업할 당시 단순한 점포의 유치가 아닌 지역 자체 브랜드 구축의 육성 단계로 지역 자원인 오래된 건물을 새로운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2015년 4월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공공공간을 포함한 다세대 교류 쇼핑물로 전환하면서 질 높은 공간을 창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해당 쇼핑물의 10개 점포를 동시에 유치하여 지역 분위기를 한 번에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아부라츠 응원단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상점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상점이 아닌 IT계 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고, 2016년 4월에 첫 IT기업이 개업하여 현재까지 약 13사의 IT계 기업 유치에 성공하였다. 상점가에 진출한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지방 사무소가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동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고용 개혁과 인재 육성 등의 지역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1년 동안 4개의 기업이 동시에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상점가의 새로운 움직임을 통한 지자체의 열의와 신뢰를 기업 유치의 성공 요인으로

뽑았다. 아부라츠 상점가는 새로운 IT집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국 벤처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벤처 행정으로의 변화

지방의 중소도시인 니치난시가 기업 유치에 성공한 과정에는 지자체장의 열정과 함께 마케팅 연계 전문관의 역할이 컸다. 마케팅 연계 전문관은 영향력 있는 기업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일본 제일의 기업으로 협동하기 쉬운 니치난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이들의 추진력과 유연성은 '벤처 행정'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불린다. 니치난시 마케팅 연계 전문가는 지자체와 기업이 서로 연계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하였다. 지자체는 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기업을 지역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활용하여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념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니치난시로 진출하고 있다. 니치난시로 이주한 기업은 대부분 니치난시로의 진출을 결정한 이유로 '지자체와의 상담 및 이주 절차상 편의'를 꼽았다. 특히 니치난시 지자체장은 기업과의 면담에서 광역 지자체의 기업 유치제도와 함께 니치난시만의 문제와 IT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모두 설명하여 기업과 함께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공동 목표를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빠른 답변과 정책에의 반영, 지자체의 열정이 기업 유치의 성공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주 기업 사례로 2016년 4월에 가장 먼저 위성 사무실(satellite office)을 설립한 포트 주식회사(ポート株式会社)는 고용창출과 인재양성에 의한 '민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방창생'을 하나의 테마로 하고 있다.¹⁴⁾ 이에 기업에서는 지역의 중고생에게 IT란 무엇인가라는 강습을 개최하면서 새로운 직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주변 직업훈련법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젊은이들 정착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고용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포트 주식회사는 지방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업무 내용이

14) 포트 주식회사(ポート株式会社) 홈페이지
<https://www.theport.jp/nichinan/> (2019년 12월 11일 검색)

도쿄와 동일하다는 점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어 지역 내 취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한 상점가의 고령자로나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무료 컴퓨터 활용 강의를 진행하고 사무실 내부 견학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의 유대 관계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6년 5월에 위성 사무실을 낸 주식회사 리토르클라우드(リトルクラウド, Little Cloud)는 시찰하는 단계에서 지방도시에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니치난시 진출을 바로 결정하였다.¹⁵⁾ 특히 니치난시 출신인 거점장은 지역의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지방도시에서 위치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쿄 본사와의 연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니치난시 진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식회사 리토르클라우드 니치난 사무소는 거점장과 아이턴(I-Turn)¹⁶⁾ 직원 1명, 지역 고용 4명으로 시작하였고 향후 5년간 48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과의 연대 형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 벽에 칠을 하는 등 개업 전부터 주민과 계속 교류하고 있다. 개업식에서는 주민이 직접 방문하여 어떠한 기업인지 이해를 높이고 대도시와는 다른 지방도시만의 정겨운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미야자키현에 첫 사업소를 설립한 게임 회사인 주식회사 캐리어 이노베이션(株式会社キャリアイノベーション)은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¹⁷⁾ 개업 전 회사 설명회에 70여 명이 넘는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캐리어 이노베이션이 니치난시에 진출한 이유로 지방도시의 고용 환경에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기업의 이념을 들 수 있다. 이미 지방도시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15) 리토르클라우드 채용 홈페이지

<https://en-gage.net/little-cloud/> (2019년 12월 11일 검색)

16) “이턴 현상”은 도시 토박이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으로, 일본에서 본래 고향이 도시인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이 출신지와 무관한 시골에 정착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에서 시작되었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479&cid=43667&categoryId=43667> (2019년 12월 11일 검색)

17) 미야자키 사업소의 정식명칭은 ‘캐리어 이노베이션 니치난 G&G 센터 Calau’로, 카라우(Calau, 미야자키 방언: 背負う, 한국어: 짊어지다)는 지역 또는 미래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각오의 표현임

지방전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활기를 되찾는데 기여하고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니치난시에서의 독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캐리어 이노베이션에는 여성 2명을 포함해 4명의 지역 고용을 실시하였고, 반년간의 연수를 통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앞으로 5년간 약 2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쵸 SOHO형 재생사업

도쿠시마현(徳島県) 중산간지에 있는 가미야마쵸(神山町)는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하였으나, 최근 들어 대도시에 본사를 둔 IT기업이 위성 사무실을 설립하면서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쇠퇴지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 문제를 경험한 일본 지방도시가 어떻게 지역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1) 가미야마쵸 창생전략·인구비전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쵸는 시코쿠 산맥의 동부에 위치한 전체 면적의 약 83%가 산지로 이루어진 농지와 취락이 밀집한 지역이다. 전체 인구는 2016년 6월 현재 5,185명으로, 일본에서도 소멸가능성이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지역 특성상 주요 산업은 임업과 농업이며 비교적 재정 상황은 건전한 편이지만 평균 재정력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급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 25일 ‘가미야마쵸 창생전략·인구비전(神山町創生戦略・人口ビジョン)¹⁸⁾’을 발표하였다. 본 비전에서는 2060년 기준 3천 명을 밑도는 인구 규모의 유지, 초·중학교 각 학급 인원수 2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어린이 44명 전입 등의 구체적 목표를

18) 神山町 2018. 神山町地方創生戦略v.1.2.

<http://www.town.kamiyama.lg.jp/office/soumu/kikaku/tsunapro.html>

(2019년 12월 20일 검색)

제시하고 있다(谷垣雅之·加藤真也 2017, 458).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표 4-1>과 같은 7개의 제부 목표와 전략을 구상하였다.

표 4-1 | 가미야마초 창생전략·인구비전의 기본 목표 및 주요 시책

기본 목표	주요 시책
(1) 삶 만들기	① 육아세대를 축으로 한 집합주택 개발 ② 오래된 민가 리노베이션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 ③ 지역의 장래를 만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住宅ローン) 정비 ④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전입지원체제(転入支援体制) 만들기
(2) 사람 만들기	① 다양한 인적 자원을 살리는 “가미야마초에서 배우고 연계하는 계획” ② “유아·초중고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코디네이터 배치 ③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린 집락수선사업(集落修繕事業) 손자 프로(孫プロ) 추진 ④ 학습효과와 공익성이 높고 지역 내외를 아우르는 “스터디 프로그램” ⑤ 지역의 관계자본을 살린 중고교생의 국제교류 프로젝트
(3) 일 만들기	① 창업(起業) 지원 a. 사업의 계속성과 확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획 지원 b. 면대면 용자 및 조성제도 중개 c. 창업시 부담을 경감하는 인재확보 지원 ② 지역에 필요한 인재와 연계하는 “워크 인 레지던스(「ワークインレジデンス」) 진화
(4) 순환시스템 만들기	① 행정에서 시작하는 “지역 내 경제순환” ② “차세대 지역 공무환경(工務環境) 만들기”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 활용 ③ 목질 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산지소(地産地消) ④ 워크 인 레지던스를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상점의 지속 ⑤ 지역의 영농과 식문화를 진화시키는 “농업생산법인·푸드허브(フードハブ)” 설립
(5)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만들기	① 비상시에 갖추면 효과적인 “식량비축” 시스템화 ② 고령자의 주택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③ 실적과 지역인재를 활용한 IT·IOT×조류 등의 야생동물 피해대책
(6) 관계 만들기	① 지역의 상황을 지역 내외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지역 발표회 ② 지역 외의 사람들을 불러 최근의 상황을 접할 수 있는 체류 프로그램
(7) 가시화	① 마을의 가능성을 매일 발신하는 가미야마 퍼블리싱(かみやまパブリッシング) ② 도시부에서 워크 인 가미야마·모집 이벤트(「ワークイン神山・募集イベント」) 개최

자료: 神山町 2018. 神山町地方創生戦略v.1.2.

<http://www.town.kamiyama.lg.jp/office/soumu/kikaku/tsunapro.html>
(2019년 12월 20일 검색)

(2) 가미야마초 위성 사무실 사업

인구 규모 유지 측면에서 가미야마초의 위성 사무실 사업(Satellite Office Project, SOP)은 지역 내 새로운 인구 유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사업이다. 위성 사무실은 도시부로부터 농·산촌으로의 이주에 관한 3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수단으로 최근 고용 흡수력이 없는 지자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가미야마초 위성 사무실 사업은 빈집을 IT기업을 위한 사무실로 개조하여 제공하는 ‘워크인 레지던스 사업¹⁹⁾’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²⁰⁾

가미야마초 위성 사무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5년에는 소비자청이 기능 일부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총무성은 ‘시험 위성 사무실(お試しサテライトオフィス)’ 사업을 2016년 도입하였다.²¹⁾ 가미야마초에서는 지역 내 NPO 법인이 마을의 빈집 및 점포를 빌려 개보수한 후 웹사이트를 통해 이주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IT벤처, 영상, 디자인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14년 8월 현재 11개의 위성 사무소가 개설되어 30여 명을 채용하였고, 3년 내에 새롭게 30여 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부수적으로는 기업의 진출과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지금까지 산간 마을에 존재하지 않았던 카페와 피자 가게, 숙박시설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谷垣雅之·加藤真也 2017, 459).

19) 본 사업은 고용 흡수력이 부족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외부로부터 전문직종 고용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미야마초에서는 생산 거점과 고용 확보를 위하여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업, 즉 IT기업을 지역에서 스스로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 徳島県 神山町. 2014. 平成26年度版 地域ICT活用事業事: 神山ワーク・イン・レジデンス.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top/local_support/ict/data/494/f098804_jirei_h26.pdf (2019년 12월 11일 검색)

21) 総務省. 2017. お試しサテライトオフィス「モデル事業(平成 28 年度) 調査報告書.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自立応援課.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19998.pdf (2019년 12월 11일 검색)

(3) 지자체와 NPO 법인, 건축가의 역할

가미야마초에 지속적으로 IT기업 등의 위성 사무실이 진출하고 이주자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1) IT 관련 인프라의 활발한 구축, 2) NPO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재생, 3) 건축가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IT 인프라 구축에는 광역지자체가 큰 역할을 하였다. 도쿠야마현은 2000년대부터 광케이블 망을 현 내의 전역에 정비하여 도심부와 맞먹을 수준의 네트워크 환경을 정비하였고, 케이블망 보급률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모든 가구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면서 일을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빈집으로 이주해 올 수 있도록 ‘워크 인 레지던스’라는 이주 지원정책을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각 시정촌에 이주 교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초로 설치된 8개소의 교류지원센터 중 7개소가 시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가미야마초에서는 NPO 법인인 그린바레(グリーンバレー)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네모토 마사쓰구 2013, 60-61). 그린바레는 가미야마초 재생사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지역의 미래를 ‘창조적 과소(過疎)’라고 명명하고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고 외부로부터 창조적인 인재를 유치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谷垣雅之·加藤真也 2017, 458). 가미야마초의 이주 촉진책은 이주자를 역으로 지명하는 것이 특징으로 그린바레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그린바레는 관련 정보를 모아서 ‘이 장소에는 음식점을’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이주자 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린바레는 빈집과 이주 희망자를 연결을 지원하지만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하여 계약은 별도의 대가 없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다. 첫 번째 이주 기업인 벤처기업 산산(Sansan株式会社)의 진출 이후 가미야마초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구글과 야후 등 대형 IT기업 직원들이 가미야마초에 단기 체류하면서 기획 회의와 연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린바레는 위성 사무실 유치 외에도 이주 및 정주지원, 취업과 창업지원, 예술 중심의 마을만들기 추진, 빈집 재생, 예술가 작품 제작지원, 인재양성, 도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에는 가미야마초와 그린바레가 공동 출자로 폐쇄된 섬유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위성 사무실 복합공

간(satellite office complex)'을 제공하였다. 복합공간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웹 디자인 등 IT 관련 분야 전문기업으로 2016년 8월 현재 12개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다 (NIKKEI ARCHITECTURE 2014, 45).

가미야마초의 지역 재생에는 민간 건축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건축가들의 참여는 그린바레에서 2010년에 건축가를 초빙하여 워크숍 형태로 빈집의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1개월에 걸친 워크숍에는 도쿄대 학생 약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워크숍의 성과로 개보수를 통하여 빈집이 가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 퍼졌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빈집 대여나 자체적 리모델링이 확대되었다. 이후 건축가들은 매 년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그린바레의 요청으로 위성 사무실 복합공간을 설계하였다. 지역 주민과 건축가들의 지속적 접촉은 연쇄 반응을 통해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4) 위성 사무실 사업의 성과

위성 사무실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는 크게 위성 사무실의 연간 판매액과 방문자의 지출액으로 구분된다. 가미야마초 세무과에 따르면 위성 사무실 복합공간에 입주한 12개 기업의 법인세 총액은 가미야마초 법인세수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4년 위성 사무실의 연간 판매액은 법인세액을 토대로 역산한 결과 약 4,019만 엔으로 산출되었다.²²⁾ 2014년도 가미야마초 위성 사무실 복합공간에는 2,207명이 시찰을 위하여 방문하였고, 이들이 지출한 음식료, 숙박비, 연수비 등의 총액은 약 800만 엔 정도로 예측된다.²³⁾ 따라서 판매액과 지출액을 합산한 직접적 경제효과는 약 4,800만 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800만 엔 정도로 추정된다(谷垣雅之·加藤真也 2017, 458-460).²⁴⁾

22) 판매액은 법인세액에 실패세율, 정보서비스 산업협회 '2014년판 정보서비스 산업 기본통계조사'의 매상고영업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함

23) 지출액은 관광청의 '2014년 여행·관광소비동향조사연보'를 토대로 계산함

24) 경제적파급효과는 산업 관련표를 토대로 추정함

6천만 엔 이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금전적으로는 지역의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지역 내 유치한 IT업종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그 특성상 가미야마초의 다른 사업, 농업과 임업 등과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음식료품의 판매와 3D 프린터 등의 IT기술을 활용한 목제품 제조 등 가미야마초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과 임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농업에서는 농가의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한 농업생산법인 푸드허브가 설립될 예정이고, 임업에 대해서는 기설립된 임업활성화 협의회가 위성 사무실로 운영 중이다. 한 IT기업에서는 임업에 적용가능한 기술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IT기술과 음식료품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판매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특히 유기농 야채 사업의 고도화를 통한 농업 재생이 이주자 유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5~10년 내 가미야마초 지역 경제의 주요 컨셉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여러 기업이 유치되면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늘어나는 등 지역 활성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시사점

미국 연방 정부의 프라미스 존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다음의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프라미스 존은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주체인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거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고유한 특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로스앤젤레스와 서부 필라델피아, 동부 샌안토니오 사례지역은 비슷한 쇠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이 당면한 과제, 지역 경제, 도시 환경, 지자체 역량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정책 목표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 목표에 맞춘 개별 사업 목표를 수립하였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의 경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4대 목표 5

개 전략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별 사업지에서는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춰 활성화계획 작성 시 세부 사업 목표를 제시하였고, 중앙 정부의 예산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 내 여러 기관과의 협업이 아직은 미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양한 단체와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프라미스 존 사업은 10년이라는 사업기간을 확정하고 시작하여 예산을 확보·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중앙의 자금과 인력을 통하여 빈곤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빈곤율 하락이나 학력수준 향상 등의 상위 목표 달성을 주민 교육수준 향상과 고교생의 성공적 대학 진학 지원이라는 세부 목표를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직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진로 상담이나 교육 및 인턴 프로그램 참여, 단편적인 고용 발생 등의 성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학력수준 향상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즉 프라미스 존 사업은 지역 차원에서 단기적인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민의 교육수준 향상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역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도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의 수는 적을 수 있으나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추진과 기업과 지역 주민의 연결, 지역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프라미스 존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 또는 향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다양한 직군에 걸쳐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또는 인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3개의 사례에서는 모두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단기 건

설직 일자리나 행사 개최 등에 고용되는 일용직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었다. 사업지역의 낮은 교육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지역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지속성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고용측면에서도 각종 서비스직 일자리 창출에 기금이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의 낮은 서비스직의 임금을 고려하면 단기고용자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통한 재고용 선순환이 요구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물리적 환경 조성 과정에서 여러 단기 건설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도시재생의 경우 건설직 일자리가 지역의 고용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사례와 같이 단기 고용 이후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교육·재고용 시스템의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라미스 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일부 매우 변화하고 활성화된 지역도 해당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재활성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빈곤한 주(州) 또는 지역에 연방 정부의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 전역에 걸쳐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사업지역 안배가 이루어졌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도 쇠퇴지역 재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 지역 등에 대한 사업지역 선정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활성화되었던 지역이 재쇠퇴하거나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보유한 지역의 경우, 중앙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재생 및 재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재생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 안배나 선정 기준 등을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는 미국과 달리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고용을 발생한 사례이다. 지역 주도의 IT기업 유치를 통한 일본 지역재생 및 일자리 창출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역량 강화와 민간 전문가 위촉 및 권한 위임이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니치난시의 경우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한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 내·외부와 민간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을 지원하고 신뢰 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제학, 마케팅 등 전문가를 고용하여 지방도시의

재생 과정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해당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사업간 연계 전문관이라 불리는 이들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행정조직 내 부서간 연계, 현장과 행정의 연계, 조직 구성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면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 재생을 위해 도시 및 건축 관련 전문가가 초빙되어 사업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목표와 지역 특성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문가, 예를 들어 의료·보건·복지나 IT기술, 농업, 문화·예술 등 사업에 적합한 전문가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독특한 지역 특성을 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니치난시 사례와 같이 행정이나 마케팅 등 사업 추진 과정을 담당할 전문가가 일회성이 아닌 지역에 상시 거주하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지역 내 비영리단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가미야마초 사례의 경우 지역의 NPO 법인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사업의 중요한 업무를 위임 받아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신뢰를 구축하고 외부로부터 창조적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 특성과 이주 기업 및 이주자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계획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이주 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해당 단체가 지역에 대한 애착과 많은 정보를 토대로 사업에 참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지역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신뢰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협력을 통하여 단편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역의 경제 구조 고도화가 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두 사례 모두 산업 기반이 미흡한 지방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 기업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지방도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산업, 즉 IT에 집중하였기에 가능하였다. IT산업은 기술적 기반만 마련되면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가미야마초가 위치한

도쿠야마현은 광케이블 망에 집중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하여 IT기업의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니치난시에서도 이주를 희망하는 IT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여 전국의 벤처기업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후 서로 다른 IT기업이 한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기업간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더욱 많은 기업의 이주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두 사례 모두 기업의 이주로 인하여 상권이 활성화되고 음식점과 휴게시설 등이 증가하면서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스마트시티형’이라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적화된 사업 유형이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기술에의 집중 투자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중 기술에의 투자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IT기업의 유치에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와 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자체는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이주와 기업 운영이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업과의 지속적 면담을 통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주한 기업에게 끊임없이 지역의 과제와 이의 해결을 위하여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해를 구해 기업이 이주한 지역에 대하여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두 사례 지역에 이주한 기업은 기업의 성장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는 생각 아래 지역의 과제, 즉 인구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 역시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주한 기업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답과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국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주자 및 신규 창업자와 기존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CHAPTER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방안

- 1. 기본 방향 | 155
- 2. 일자리 유형별 지원방안 | 159
- 3. 도시재생 성과관리 방안 | 164
- 4.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 169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방안

본 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근린재생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집중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 단계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적 속성이 모두 상이하여, 사업단계별로 개별 일자리들의 창출 구조와 흐름의 파악을 통하여 과제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일자리 유형별 지원방안, 도시재생 성과관리 방안, 장단기적인 시각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1. 기본 방향

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은 주로 근린재생형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도시재생지역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들은 취약지역의 개선,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의 고용에 집중하다보니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민간 자원을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실제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앞서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방안, 범부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정책현황 분석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크게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두 유형간 일자리 창출 특성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근린재생형의 경우 정주환경의 개선과 지역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라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자리의 범위와 수준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경제기반형의 경우 사정이 매우 달라진다. 청주시의 사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기반형 사업은 주변 지역에서 파급되는 일자리,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지역기반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 운영 및 관리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경제기반형에서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일자리의 성과를 파악할 경우 경제기반형의 사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대 이하의 효과가 파악되고, 그렇다고 모니터링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이것이 실제 사업의 효과인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실무 차원에서는 직접조사와 데이터의 관리에 어려움이 야기된다. 따라서 실제 사업구역 또는 사업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창출되는 일자리 등에 대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경제기반형 사업의 잠재적 일자리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중앙정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 사업추진조직의 전문성 강화, 민간일자리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력 등을 통해 공공,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민간분야 일자리의 탄력적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

2) 일자리 창출 구조를 통한 과제 도출

(1) 도시재생사업 단계와 일자리 속성에 대한 고려

본 연구의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 일자리는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창

출 시기와 특성, 발전과정이 모두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단계를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단계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적 속성이 모두 상이하여, 사업단계별로 개별 일자리들의 창출 구조와 흐름의 파악을 통한 과제 도출이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단기 건설부문 일자리와 공공분야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일자리 등이 창출되는 것이 모든 사례, 모든 사업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주민들이 단순한 사업 참여 - 활동가, 코디네이터 등으로 전환 -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 -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개인 창업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 연계 구조가 형성되고, 청년 창업자들이 정부 지원(공간제공, 컨설팅/교육, 사업비 지원 등)을 받아 개별을 시도하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관리 단계에 이르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CRC(도시재생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거나 이직, 창업자들의 경우 창업 열기가 떨어지면 폐업하거나, 오히려 재생사업으로 지역분위기가 좋아져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창업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경우, 국비지원이 종료되어 마중물사업과 지자체 사업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2차, 3차의 파급효과로 시장원리의 효과에 따라 창업이 늘어나거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가 일자리 창출에는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단계에서의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자체나 전문가도 IO 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는 고용유발효과의 수치가 정확하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비 대비 또는 지자체간 일자리 창출의 양적 수치에 대한 목표치 설정과 비교 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생성되는 일자리의 양적 수치와 함께 일자리의 수준, 질적 속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도시재생 일자리가 양적·질적으로 나아지도록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일자리 유형별 지원방안 고려

일자리 창출 분야와 유형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분야 일자리는 사업이 선정되는 단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영관리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 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처우 개선 문제로 지적된 것처럼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정책 과제이므로 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 부문의 일자리는 순천, 서울 창신·송인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의 주요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마을문화 기획,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등 매우 핵심적인 분야에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는 민간분야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민간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 업무위탁, 부처협업을 통한 지원, 자구적인 비즈니스 모델 마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확보가 관건이다. 다행히 사회적경제진흥원이 도시재생지원기구에 포함이 되었고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기관 인증제도 및 공모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각 기업에 대한 지속적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지역산업·민간부문의 일자리는 천안의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가 유치, 서울 창신·송인, 순천과 같은 주민과 주민 창업에서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준 자원이 모두 달랐다. 천안이 충남코리아콘텐츠랩을 통해서 청년창업부터 사업단계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통해 실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창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창신·송인과 순천시는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과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자체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내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변 민간기업이나 상인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일자리 유형별 지원방안

1) (공공분야)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국도교통 일자리 로드맵에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하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자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에서 우를 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공부문의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일자리를 바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실제 해당 일자리의 지속성과 전문성의 확보, 처우 개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공공분야의 대표적인 일자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코디네이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도시재생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 다양한 도시재생 인재양성 사업 이후, 창출된 전문인력들이 어떤 분야에 투입되고 이직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연구 결과(임상연 외, 2018)에 따르면,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중 정규직은 30% 미만이며, 이 중 처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과정에서도 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아 2014년 선도지역부터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지는 매우 드물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인재 육성과 유지 차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고용 여건 개선, 재생교육을 통한 인재 이력 관리제도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재생지원기구의 도시재생 인재양성과정 교육, 광역·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상 도시재생 교육 과정 이수 후 지속적으로 교육생 이력관리를 통해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매칭, 리쿠르팅에 활용해야 한다.

2) (사회적경제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사업화 모델 발굴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도시재생사업은 공간제공, 컨설팅제공 등을 통해 지역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유지할 수 있는 담당자를 육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는 민간분야에 비하여 경제적 효용이 작지만 반드시 지역사회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분야의 부분적인 지원과 함께 자생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공간제공이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많이 알려진 도시재생 협동조합(CRC)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중요하고 이것이 주민조직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하여, 실제로 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어떠한 일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 확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CRC 직원들의 일자리 속성에 대한 파악 후 이에 대한 정책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CRC 설립을 고민하는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사업화모델의 경우, 서울시의 CRC 모델 시범사업과 같이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을 통하여 초기 조직화와 중후기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효과적인 프로그램 등을 제안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부터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관리형과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 25곳을 선정하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간 및 조성,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지원, 경영컨설팅, 사업연계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9, 8). 서울시 이외에도 기초 지자체 등에서 추진 중인 CRC 모델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CRC 육성이 필요하다.

표 5-1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유형별 세부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앵커 운영 시 추가 지원 사항 • 총 3인(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인 +전문인력 1인 월 250만원)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 (나머지는 자부담) •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 (5인 이하 사업장은 3인,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년	-
공간 및 조성	• 앵커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나, 준공 연기 등으로 해당 공간 사용이 어려울 시 임대료 지원 (월 12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회, 최대 2천만원 지원	• 앵커시설 공간 무상 사용 우선 지원 (최대 3년) •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회,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 신사업 개발,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 회계·사무·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 자부담 20%	• 신사업 개발,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 회계·사무·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 자부담 20%
경영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업종 별·지역 별 멘토링 지원	-
사업 연계	• 앵커시설 운영관리사업 우선 수행 자격 부여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사업 연계지원	-

자료: 서울특별시, 2019. 8.

3) (민간 분야) 지역산업 및 민간기업 유입방안 마련

(1)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경제기반형에서는 산업·경제기반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기존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유치, 문화산업과 창업, 청년주거 등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차원에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매력도 제고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주자 및 신규 창업자와 기존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선정 중인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적화된 사업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기술에의 집중 투자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중 기술에의 투자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창업공간 조성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천안시 선도지역 청년몰 사업의 경우, 공간 조성 후 대부분의 실제 사업 추진이 중기부의 상권활성화 연계형 청년상인 지원 및 문화관광부의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모니터링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의 개별 사업들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과 어떻게 협업 중이며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창업이 단기적인 푸드코트, 커피숍, 공방 등의 사업 등에 한정하여 있는데, 세운상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사업의 경우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관련 기업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IT기업을 유치할 때, ‘사업간 연계 전문관’이라 불리는 이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행정조직 내 부서간 연계, 현장과 행정의 연계, 조직 구성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면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 재생을

위해 도시 및 건축 관련 전문가가 초빙되어 사업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목표와 지역 특성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문가, 예를 들어 의료·보건·복지나 IT기술, 농업, 문화·예술 등 사업에 적합한 전문가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관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 도시재생 성과관리 방안

1) 도시재생 일자리 지표 발굴 및 적용

(1) 도시재생 평가체계에 일자리 지표 도입

향후 본 연구에서 마련된 도시재생분야 일자리 유형 및 일자리 창출 현황 등을 근거로, “도시재생 일자리 지표(가칭)” 등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종합성과평가, 재생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표 5-2 |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평가 배점 및 주요 고려사항

평가분야	구분	초기(1년차)	중기(2~3년차)	후기(4년차 이후)
거버넌스	배점	120점	100점	60점
	주요 고려사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적절성	·거버넌스 운영의 지속성	·거버넌스 운영의 지속성
세부사업	배점	80점	100점	140점
	주요 고려사항	·연차별 진도(예산집행) ·세부사업추진 노력	·세부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적절성 ·연차별 진도(예산집행) ·세부사업추진 노력	·세부사업별 거버넌스 지속성 ·연차별 진도(예산집행) ·세부사업추진 노력

도시 재생 일자리 모니 터링	배점	가점 부여	가점 부여	가점 부여
	도시재생 일자리 지표 (예시)	·지표 조사계획 수립 ·지표 수집 노력	·지표 수집 노력 ·지표 개선 정도	·지표 개선 정도

자료: 국토교통부, 2019 (진행중) 참고하여 저자 작성.

현재 법정평가로 매년 추진 중인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시 도시재생 일자리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추가하여 조사계획 수립, 지표 수집 노력, 개선정도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정량적인 일자리 창출 수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일자리 만족도 개선비율,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일자리 확보 비율, 창업공간의 사업자 유치, 스타트업의 성장기반 마련 등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정책의 취지에 적합한 일자리 관련 지표가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량·정성적 특성이 보완된 지표를 적용한다면, 기존 양적 일자리 창출 위주의 정책 및 제도 하에서 인력 처우 개선, 창업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노력 증대 및 도시재생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2) 일자리 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기존 도시재생 전략·활성화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선정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건설단계의 일자리는 기준을 적용하여 활용하되, 운영관리 단계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선언적인 내용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를 공공분야, 사회적경제분야, 민간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유형과 시계열적인 구조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선정 및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일자리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의 양적 창출 수준에 대한 판단 근거 마련, 근린재생형·경제기반형 등 사업유형에 따른 일자리의 양과 발생 시기 등의 확인, 시간이 지남에 따른 일자리의 구조 변화, 양과 질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가능할 것이다.

(3) 일자리 통계 DB와 연계방안 마련

현재까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지역이 계획단계 및 사업추

진 초기단계로, 사업 초기단계의 일자리 창출 현황 파악만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지역·뉴딜사업지역의 경우 계획 수립 중이거나 사업 착수단계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지금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고용효과 예측 차원에서만 일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직접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조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도시재생 일자리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 사업지역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 일자리 DB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국가도시재생사업 관련 통합 플랫폼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일자리 관련 현황 DB를 구축하여 쌍방향으로 DB 확인과 점검,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에서 구축하는 양질의 일자리 통계체계와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제도와 지역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정책에 도시재생 사업지역도 관리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처럼 도시재생 일자리를 일자리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도시재생 일자리 관리체계 마련

(1) 도시재생 일자리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선도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난 6년간의 일자리의 변화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담당자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사업 운영관리 체계가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 1~2인,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몇 명이 일자리 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한 업무를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담당자가 매우 드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규 사업의 선정 등 다수의 사업을 운영·관리하다 보니 일자리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지원이 중요 업무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가 되므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도시재생 지표(진단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방안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④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⑥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⑦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⑧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⑨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개선안]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④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	
⑥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⑦ 도시재생사업 홍보(마을신문·소식지 등 제작·배포, 마을방송·미디어 등 운영)	
⑧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지표(진단지표,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⑨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자료: 국토교통부, 2017.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8.

도시재생의 일자리는 한 시점에서의 양적 수치와 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계열적인 구조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일관된 일자리 관리 체계 및 지표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추적·조사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필요시 2020년도 이후부터 실시되는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부터 해당 지표들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부터 조사 결과가 누적될 필요가 있다. 다

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운영여건이 매우 취약하고 업무가 과다한 현실에서 추가적인 모니터링, 조사 등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정량·정성적 일자리 조사체계 마련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은 정량적인 지표가 대부분으로 정성적인 지표가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마다 상황이 매우 제각각이고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는 점을 항상 감안하여 정량적 자료와 함께 정성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특히 근린재생형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며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정도만이라도 보유한다면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오히려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지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소수의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이 일자리들의 질적 속성 즉 “지속가능성”, “만족도” 등을 정성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일자리 분야별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설문조사(안)을 제공하고 지자체 사업별로 특이성이 있는 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판단하여 재량껏 일자리 유형 및 구조를 마련하도록 유연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3) 일자리 관련 부처·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현황을 분석해보니, 실제 예산이 집행된 부서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성과는 해당 부서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이 물리, 환경, 문화, 사회적으로 복합된 다수의 사

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실제 국토교통부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 이외에도 부처협업, 민간, 지자체사업 등 복수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공간이나 하드웨어 인프라만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부처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서는 타부처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현황 공유가 필수적이다.

4.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1) 단기 개선방향

첫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도시재생 일자리 관리계획’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일자리 목표를 수립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중심시가지·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19.7)
○ (사업 종료 후 관리운영 계획 수립) 사업이 종료된 후 시설 등의 운영·관리 및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생활편의시설의 사용·위탁관리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마을관리협동조합,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
↓↓↓
[개선안]
○ (사업 종료 후 관리운영 계획 수립) 사업이 종료된 후 시설 등의 운영·관리 및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등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생활편의시설의 사용·위탁관리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마을관리협동조합,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 (추가) ○ (도시재생 일자리 관리계획 수립) 계획수립단계에 공공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지역산업·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 유형과 목표치를 제시하고 정기적인 자료수집과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지자체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및 종합성과평가에 제시할 것을 권장

자료: 국토교통부, 2019. 도시재생 중심시가지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

둘째, 공공분야 도시재생 일자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무교육 지원, 인재관리계획 마련 방안 등도 가이드라인에 추가해야 한다.

[기존] 중심시가지·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19.7)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필수) ☐ (근무여건) 최소 주2일(15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근 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 - 지자체장은 센터 근무자의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일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순차적인 전환을 추진하여야 함
↓↓↓
[개선안]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필수) ☐ (근무여건) 최소 주2일(15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근 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 - (수정) 지자체장은 센터 근무자의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전문성 제고를 의무 교육 지원, 인재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9. 도시재생 중심시가지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

2) 중·장기 개선방향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연차별 추진실적평가를 통해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기간 동안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대상계획, 제출자료,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계획을 통지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비지원이 종료된 이후 중앙정부의 후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국비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 목표이자 성과가 실제 국비지원 종료 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후에 가시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국비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

사,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에 “국비지원 종료 후 모니터링 및 평가”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 일자리 지표 일자리 지표 DB 구축 및 모니터링 방안 추가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1. 28.] [대통령령 제30217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 계획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0991&chrClsCd=010202&ancYnChk=0>
(2019년 11월 30일 검색)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 주요 연구내용 | 17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80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내용과 제안된 정책방안들을 요약·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결과의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양과 질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성과 및 지속성,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직접 일자리로 정의하고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과 속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된 현황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 제시를 통해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주요 연구내용

1) 도시재생과 양질의 일자리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 및 고용의 질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고 현행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정책과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간 관계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도시재생 분야 고유의 일자리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양과 질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일자리 수준 평가 방법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의 양과 질적 속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으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지역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양질의 일자리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충족하는 괜찮은 일자리여야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기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통해 필요한 훈련과 고용 기회를 제공받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고용 기회, 적절한 임금, 고용 안정, 안전한 작업환경, 고용 평등 등의 공통적인 조건들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이 개인의 행복도, 조직의 업무성과와 긍정적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사업단계, 직·간접 일자리의 여부, 창출 분야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사업단계별로 살펴보면, 건설단계에서는 한시적 건설 관련 일자리, 직업훈련 시행 일자리가 있고, 사업추진·운영관리 단계에는 창업고용센터, 도시재생회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가, 마을안내자, 서포터즈 고용,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등이 있다. 일자리 속성별로 직접적 일자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일자리 등이며, 간접적 일자리는 시설의 개선에 따른 창업, 관광객 증가, 접근시간 단축, 물동량 증대 등이 유발하는 새로운 일자리이다. 창출 분야별로는 공공, 사회적경제, 지역산업·민간 분야로 분류하여, 공공 분야는 도시재생 활동가 및 전문가 양성, 지역산업·민간 분야는 도시재생 관련 지역기업 창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는 마을기업, 지역재생회사 등이다.

2)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정책 현황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관련 정책(2013년~2017년)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서 일자리 창출이 제시되어 있으나 일자리 창출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선도·일반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대개 재정투입을 토대로 공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과정에서 재정 활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설 부문 일자리 이외에 민간 비즈니스, 특히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2017년~현재)이 추진되며 수정·보완되었다.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선정 시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표 중 하나였으나 뉴딜 등장 이후 일자리 창출이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부각될 정도로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기존의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사회적경제조직을 강조하지만 청년과 창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이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담긴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과 기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책·제도화하고 있는 중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살펴본 결과, 도시재생 과정에서는 대부분 재정의 직접 활용 혹은 보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부문 중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조직체계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일자리의 양적 파급효과가 큰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저조하고 일자리의 창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로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방식이 강조됨에 따라 청년 이외의 중장년층이나 창업 이외의 고용이나 기존 사업자의 고도화, 첨단산업이 아닌 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민간부문 일자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재생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4곳(충북 청주시, 서울시 종로구 창신·송인,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을 사례로 심층면담조사를 통하

여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일자리의 창출 구조와 성격 변화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지역 취업자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취업자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의 수준과 만족도, 일자리 정책 개선과제 등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요컨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의 질은 일반적인 고용의 질 평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라는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는 일정 부분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일자리들이 창출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크게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두 유형간 일자리 창출 특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근린재생형의 경우 정주환경의 개선과 지역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라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자리의 범위와 수준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기반형은 가시적인 일자리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마중물 예산 지원 종료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유형에 따라라도 일자리 정책을 구분하여야 한다. 공공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지역산업·민간분야의 일자리 현황과 성과, 과제가 모두 상이하므로 각 분야의 일자리 성격에 맞는 일자리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4)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방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일자리 분야에 따른 일자리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경제기반형 일자리는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별도의 구조를 마련하여 근린재생형과는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사업추진단계에 따라서는 단계별 일자리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단계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적 속성이 모두 상이하므로, 사업단계별로 개별 일자리들의 창출 구조(흐름) 파악을 통하여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과제 도출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도시재생사업 일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도시재생 전략계획·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일자리 관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정책 제언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은 취약지역의 여건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 중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 분야 공공일자리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담론이 전개되어 왔고, 실제 조사에서도 근린재생사업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재생 중심의 일자리들은 대부분 취약지역의 여건개선사업, 미취업자·사회취약계층 고용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조건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공 부문과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현황과 구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반해 민간 자원을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실제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앞서 민자사업 추진, 범부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선정된 300여 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선정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일자리의 양적 확산과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표 6-1 | 주요 연구내용 요약

주체 사업유형	중앙정부		지자체	
	과제	정책 방향	과제	정책 방향
전 유형	- 도시재생 일자리 DB 구축 미흡 - 일자리와 질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정책수단 미흡	(단기) 도시재생 인재관리시스템 마련 (단기) 활성화계획, 평가·모니터링 체계에 일자리 지표 반영 (단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연동 (중장기)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중장기) 전국 일자리관리 DB 연동	- 도시재생 일자리 DB 구축 미흡 -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정책수단 미흡 - 도시재생 일자리 정보제공 부족	(단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단기) 민간분야 전문가 전문관 채용 (중장기) 지역 일자리관리 DB와 연동
근린재생	- 공공부문 및 재정의 존적 일자리 문제 - 공간제공 중심 일자리 정책 추진	(단기) 공공분야 일자리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단기) 부처연계사업 강화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부족	- 지방정부 역할 강화 - CRC 시범사업 추진
경제기반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 부족 - 지자체가 담당하지 못하는 대규모 민간사업 사업화 방안 마련 필요	-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단기) 경제기반형 사업의 협상력 강화, 사업화 방안 강화 (중장기) 타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도시재생, 민간산업 분야 전문성 취약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지역 정주환경 조성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국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지 10여 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과 속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2013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의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난 지자체 4곳을 선정하여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도시재생사업지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밝힌 일자리의 유형과 구조 이외에도 지자체 및 사업 특성별로 다양한 일자리 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일자리의 구조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진 반면, 보다 보편타당한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양적 질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향후 도시재생 일자리에 대한 DB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잠재적 도시재생 일자리 수요자 및 도시재생 분야 종사자 특성 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 육성 방안 마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구조 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인용문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도시재생 선도지역 2015년도 모니터링 종합결과 보고서.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고용노동부. 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9. 2019년 재정(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2018.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세종: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2014.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6. 도시재생선도사업, 주민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어르신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창업의 본격추진-. 10월 18일 보도자료.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8a. 2018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22호).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8b.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 4. 16. 발표).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8c.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 (경제기반형).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8d.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성과관리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8e.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 모니터링 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
- 국회예산정책처. 2018. 도시재생 뉴딜 분석. NABO 브리핑 제47호. 서울: 국회 예산정책처.
- 권규상. 2018.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 김갑성·유예진·서대현·노윤호·장승훈·박선영. 2017.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조사 분석. 서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륜희·윤정란. 2017.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역자산화를 중심으로-.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범식. 2014. “서울시의 관청은 일자리에 관한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정책리포트 181. 서울: 서울연구원.
- 김우영·권현지. 2008. 비정규 일자리 결정의 동태성과 성별 비정규직비중의 격차분석. 여성연구, 74(1), 5-43.
- 남진. 2018.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84. 세종: 국토연구원.
- 네모토 마사쓰구. 2013. “지역자원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일본 가미야마 정(神山町) 빈집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1). 51-64.
- 대한민국 정부.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성남·류수연·신희강·성은영·여혜잔·이은석·김신성·김민경. 2017. 도시재생 정책백서 2017 I.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박성남·성은영·여혜진·이은석·김신성·류수연·신희강. 2017. 도시재생 정책백서 2017 II.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박소영·이왕건·권규상·김태영·정유산·조현우·김성제. 2018.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사업화기법 개발(IV). 세종: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
- 박은하. 2011. “성별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결정요인 연구”. 한국여성학 27(3). 한국여성학회: 1-38.

-
- 박현정. 2011. “제4장 고용의 질 측정방법 연구”. 통계개발원 2010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 I 권. 236-290.
- 방하남·이상호. 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0(1): 93-126.
- 배민근. 2008. “고용의 길 아직 갈 길 멀다”. LG Business Insight 2008년 1월호.
- 부산광역시. 2016. 부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2018. 100년 서울, 함께하는 도시재생: 주요 업무보고 자료.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2017.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 서울특별시. 2019. 2019년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820호).
- 서종균. 2009.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월간국토. 안양: 국토연구원. 16-25.
- 송준환. 2018. “일본의 도시재생의 정책적 흐름과 도시 매니지먼트”. 2018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자료 (2018. 7. 9. 발표). 세종: 국토연구원.
- 송준환. 2018. “인구 5만 지방중소도시의 상점가 재생-미야자키(宮崎) 니치난시(日南市) 아부라츠(油津)상점가. 컬럼 589(1805). 월간건축사.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2017. 수원형 도시재생지표 개발. 수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영주시. 2018. 도시재생선도사업 종합운영체계 및 성과관리방안 연구.
- 윤주선·박성남. 2016.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삼수·김주잔·이상준·황규홍. 2018.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대전: 토지주택연구원.
- 이승재·안태훈. 2018. 도시재생 뉴딜 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이왕건. 2009.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월간국토. 안양: 국토연구원. 40-47.

-
- 이재완·백대현. 2018. “고용 안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 -일자리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3). 한국지방자치학회. 129-155.
- 이희찬. 2017. “관광산업에서의 고용의 질 제고 방안”. 한국관광정책 68. 15-25.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제3차 일자리위원회 (2017. 10. 18. 발표).
- 임상연·이왕건·김지현·정은진. 2018.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 (IV). 세종: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
- 천안시. 2019. 도시재생선도지역 성과 자료 (천안시청 내부자료).
- 청주시. 2015. 청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안) 요약자료 (2015. 11).
- 청주시. 2016.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변경(안).
- 청주시. 2019. “청주시 도시재생 사례: 이전적지를 활용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및 산업 활성화”.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자료 (2019. 4. 18. 발표).
- 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서울: 한국은행.
-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경기: 행정안전부.
- Anker, Richard, Igor Chernyshev, Philippe Egger, Farhad Mehran and Joseph Ritter(2002),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Working Paper No. 2 of ILO, Geneva.
- EU. 2001. Employmen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 EU. 2002. Employmen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 ILO. 1999. Decent Work: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eneva: ILO.
- ILO. 2001. Reducing the Decent Work Deficit: A Global Challenge, Geneva: ILO.
- OECD. 1994. The Jobs Study, Paris: OECD.
- ILO. 2013. Decent work indicators. Geneva: ILO.
-

OECD. 2003. OECD Employment Outlook: Towards More and Better Jobs. OECD.
UNECE. 2015. Handbook on measuring quality of job. Geneva: UNECE.
Roberts, P., Sykes, H. and Granger, R. 2017. Urban Regeneration.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谷垣雅之·加藤真也. 2017. “サテライトオフィス誘致による地域経済効果に関する考察
—徳島県神山町を事例として—”. 農村計画学会誌 36(3). 457-464.
NIKKEI ARCHITECTURE. 2014. “神山の奇跡に設計者の力”.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1035. 42-45.

【 법률 자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9. 법률 제16562호(8월27일 일부개정).

【 전자 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0991&chrClsCd=010202&ancYnChk=0> (2019년 11월 30일 검색)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https://dashboard.jobs.go.kr> (2019년 3월 15일 검색)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분석지표

<http://www.city.go.kr/portal/notice/opensys/contents02/link.do>
(2019년 3월 15일 검색)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www.city.go.kr> (2019년 3월 14일 검색)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7/03/58dcc6e9d6bce3.12266123.pdf>
(2019년 3월 15일 검색)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urc.sc.go.kr/web/bbs/content.php?co_id=sub042_05 (2019년 10월 15일 검색)

이투데이 기사 “서울시, “도시재생으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2025년까지 30만개 창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7760#csidx7ee7206cb01ae2db7156dfdb1740d6d> (2019년 3월 21일 검색)

일자리위원회. <https://www.jobs.go.kr> (2019년 3월 14일 검색)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www.cheonanurc.or.kr (2019년 10월 11일 검색)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cjculture.org/home/sub.php?menukey=500>
(2019년 10월 13일 검색)

충남문화산업진흥원

http://www.ctia.kr/html/kr/business/business_0103.html (2019년 10월 10일 검색)

충남신문. 2016년 5월 10일자, 천안시 100억원규모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사업 선정

<http://www.ccsimin.com/87536> (2019년 10월 11일 검색)

충남콘텐츠코리아랩

<http://cckl.or.kr/0601/board/notice/?mode=V&pageIndex=1&idx=555415077186576100> (2019년 10월 10일 검색)

충남투데이, 2016년 2월 14일자,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 원도
심 활성화 업무협약.

<http://www.cn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7>

(2019년 10월 10일 검색)

통계 설명자료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4&inputYear=](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4&inputYear=2019)

2019 (2019년 3월 15일 검색)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eia/contents.do?key=303> (2019년 3월 12일 검색)

한국일보, 2018년 8월 14일, 천안청년몰 ‘홍홍발전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808141418346773>

(2019년 10월 11일 검색)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hiladelphia-Promise-Plan.pdf> (2019년 10월 8일 검색)

HUD Exchange, Promise Zone Overview.

<https://www.hudexchange.info/programs/promise-zones/promise-zones-overview/> (2019년 10월 10일 검색)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Los-Angeles-Promise-Plan.pdf> (2019년 10월 8일 검색)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romise-Zones-Designee-Los-Angeles.pdf> (2019년 10월 11일 검색)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romise-Zones-Designee-Los-Angeles.pdf> (2019년 10월 11일 검색)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romise-Zones-Designee-Los-Angeles.pdf> (2019년 10월 8일 검색)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File/Promise-Zones-Designee-San-Antonio.pdf> (2019년 10월 11일 검색)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Image/Promise-Zone-Communities.png> (2019년 10월 8일 검색)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onecpd/assets/Image/Promise-Zone-Map-San-Antonio.jpg> (2019년 10월 8일 검색)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programs/promise-zones/federal-partner-funding-and-technical-assistance-opportunities/#us-department-of-agriculture> (2019년 10월 8일 검색)

HUD Exchange.

<https://www.hudexchange.info/programs/promise-zones/promise-zones-urban-designees/#los-angeles> (2019년 10월 11일 검색)

ILO.

<https://www.ilo.org/global/topics/decent-work/lang-en/index.htm>
(2019년 3월 14일 검색)

OECD.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jobs/> (2019년 3월 15일 검색)

OECD.

<https://www.oecd.org/employment/labour-stats/Job-quality-OECD.pdf>
(2019년 10월 1일 검색)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2015. Promise Zones: Supporting Community Change, An Interview with Margeaux Akazawa. HUD's PD&R Edge.

<https://www.huduser.gov/portal/pdredge/pdr-edge-trending-121415.html>
(2019년 10월 8일 검색)

ポート株式会社(포트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s://www.theport.jp/nichinan/> (2019년 12월 11일 검색)

神山町 2018. 神山町地方創生戦略v. 1. 2

<http://www.town.kaniyama.lg.jp/office/soumu/kikaku/tsunapro.html>
(2019년 12월 20일 검색)

神山町. 2014. 平成26年度版 地域ICT利活用事業事: 神山ワーク・イン・レジデンス.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top/local_support/ict/data/494/f098804_jirei_h26.pdf (2019년 12월 11일 검색)

株式会社リトルクラウド(리로트크라우드) 홈페이지

<https://en-gage.net/little-cloud/> (2019년 12월 11일 검색)

総務省. 2017. お試しサテライトオフィス」モデル事業(平成 28 年度) 調査報告書. 総務省地域力創造グループ地域自立応援課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19998.pdf
(2019년 12월 11일 검색)

【기타 자료】

천안시 도시재생팀 이경열 팀장 인터뷰 자료 (2019년 8월 30일).

순천시청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 자료 (2019년 6월 14일).

충남콘텐츠코리아랩 김동규 본부장 인터뷰 자료 (2019년 9월 24일).

천안시 내부자료 (2018).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내부 자료 (2019).

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손경주 상임이사 인터뷰 자료 (2019년 9월 10일).

청주시청·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 (2019년 7월 19일).

SUMMARY



A Research on Encourag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Job Creation

Lim Sangyon·Lee Jin Hui·Kwon Kyusang·Choi Jeongyoon·Son Kyoungju·Song Junhwan

Keyword: Urban Regeneration, Job Creation, Quality of Job, Sustainabilit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initially have focused on recovering and regenerating of declining areas. By spreading the related projects out nationally, however, discussions about creating employment in various categories including public, young generations and social economics are also increased. In the areas where the local declining intensified, job creation not only contributes to operating and managing the sustainable projects, but also functioning as a crucial role in regenerating local areas in long-term.

The purpose of the study can be organised in two aims. First, figuring out the limits of job conditions through the exis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alysing the jobs and their outcomes created by existing projects, this shall be utilized for database in political use to improv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job. Second,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to create high-quality job. By incorporating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n job creation result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s, the project support teams, social-economic organizations, private enterprise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policies on job creation through the public

projects are suggested to enhance normative values such as public concerns, social values, quality of job and etc.

Thus, employment policie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in Korea to the present are chronologically investigated. In case of the urban regeneration of pioneer general areas (2014-2016), focusing on urban regeneration itself was appeared rather emphasizing the job creation, whereas job creating was presented as one of objectives of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job creating in the projects was mostly involved with government based on financial input. With increased employment in construction sector during the environmental redevelopment, various policies were also developed to encourag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especially related in real estate investment. While job creation was one of the initial objectives in previous project, it has been emphasized as a primary goal after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2017-2019). In this project, concentrating young generation and start-up business is an important tactic to improve employment, with prompting social-economic organizations as it was in earlier projects. After New Deal project in 2017, projects to support job creation in various fields and related existing policies in New Deal road map are institutionalized. Through this policy enforcement survey, it can be deduced some implications. Most of created job dur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unsustainable after suspending support, as it is founded on direct financial assistant. Also, this approach is less advantaged for middle-aged class and people who are not interested in start-up business rather than young generation and start-up business companies.

In addition, job creation outcomes in urban regeneration areas are analysed. For this survey, four pioneer areas are suggested and in-depth analysis is undertaken. This investigates experts and employees and figures out the current job condition with its challenges. Even though quality of job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under-average in result, appropriate jobs are created and improved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social and economic vulnerability in the areas. Dividing two categori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neighborhood regeneration and financial foundation, differences between two categories are significantly shown. In case of neighborhood regeneration, scope and scale of created jobs are clearly established up such as improving settlement environment and local-social jobs that visually appear. In financial regeneration sector, on the other hand, it requires some times to present tangible employment outcomes after closing the budget support. From this perspective, employment policy would be sorted separately depending on types of jobs. Appropriate employment policy establishment is individually different in public, social-economic and private sector.

Through the research, three political implications are proposed. First, different employment policies are applied in terms of typ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its job sector. In financial regeneration, political job concerns in private sector need separate frames that is different from neighborhood. Second, phased employment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stage of the project. This is caused by different aspects of quality and quantity of job in planning-execution-monitoring and control stages. So assignments based on understanding individual job creation structure in different stages are significantly important. Third, job creation monitoring systems based on reasonable indicators need to be established to recognize the quality of job through the citizen-centr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부 록

APPENDIX



1.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현황

1) 중앙부처 관리 지표

부표 1 |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상 성과지표

사업 목표	성과·효과지표	단위	성과·효과지표	단위
거버 넌스	주민협의체 구성 건수	회	도시재생활성화협의회(TF) 운영 횟수	회
	주민협의체 회의 운영 횟수 및 평균 누적 인원	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고용 건수	인
	주민협의체 회의 정관 및 운영 규정 수립	건	도시재생대학 운영 프로그램 발굴 건수	건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구성 건수	회(인)	도시재생대학 운영 횟수	회(인)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 횟수	건	도시재생대학 참여 평균 누적 인원	건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참여 평균 누적 인원	건	주민주도(공모)사업 운영 건수	건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구성 건수	회	관련 부서 협의 및 협력 건수	회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인	유관기관(공기업 등) 협력 및 협약 건수	인
주거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참여 누적 인원	인	-	-
	주차장 보급	면	노후 상하수관 정비 건수	건
	빈 집 정비 건수	호	공중선 정비 건수	건
	빈 점포 정비 건수	호	CCTV 설치 대수	대
	노후·불량주택 정비 건수	건	보안등 설치 대수	대
	대수선 이상 리모델링 신고 건수	건	생활 문화 공간 조성 건수	건
	공공임대주택 제공 호수	호	지역 복지시설 조성 건수	건
	접도 조건 개선 필지 개수	개	지역 복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건수	건
	가로(보행)환경 개선 건수	건	지역 복지향상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인
	가로(보행)환경 조성 건수	건	생활안전시설 조성 건수	건
	도로 개설 건수	건	생활안전 프로그램 운영 건수	건
	도로 정비 건수	건	생활안전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인
	주거환경 만족도	-	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
	자율적 환경정비 건수	건	복지시설 연간 이용자 수 및 변화량	건, %
	범죄 불안도 감소율	%	지역 내 복지시설 개수 및 변화량	건, %
	연간 안전사고 건수 및 변화량	%	부동산 거래 건수 및 변화량	건, %
	마중물사업 예산 외 집수리 건수	건	유류 토지 포함 민간부문 자율적 환경정비 건수	건
	주차장 시설 만족도	-	도로 보급률	%
	보행자도로 보급률	%	노후/불량건축물 감소율	%
	문화시설 보급율	%	공공임대주택 제공률	%

주 1. 흰색 칸의 지표는 성과지표의 예시로서, 성과지표란 도시재생사업의 직접적 실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에 의해 마중물(국비)이 투입된 세부사업들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함

2. 회색 칸의 지표는 효과지표의 예시로서, 효과지표란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로 마중물(국비)이 투입되지 않고 활성화지역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업 혹은 외부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8.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세종: 국토교통부, 158-159.

부표 2 |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사업목표별 성과·효과지표 예시

사업 목표	성과·효과지표	단위	성과·효과지표	단위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회복	신축건물 허가(신고) 건수	건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원수	인
	신축건물 사용승인 허가 건수	건	일자리 창출 (기타 운영단계) 인원수	인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등) 프로그램 운영 건수	건	전시 및 공연, 축제 개최 건수	건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등) 지원 건수	건	공공공간 환경 개선 사업 및 조성 건수	건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등) 설립 건수	건	유휴토지 활용 건수	건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등) 지정 건수	건	상인/청년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건수	건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등) 컨설팅 건수	건	상인/청년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참가 인원수	인
	일자리 창출 (건설단계)	인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교육 건수	건
	일자리 창출 (창업고용센터, 도시재생회사 등)	인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 인원수	인
	일자리 창출 (활동가, 마을 안내자, SNS 서포터즈 등)	인	공공임대상가 제공 건수	건
	민간부분 신규 고용창출 건수	건	부동산 거래 건수 및 변화량	%
	공공부문 신규 고용창출 건수	건	공공공간 개수 및 변화량	%
	사업체 연간 총 매출액 변화량	%	유휴토지 개수 및 변화량	%
	상가지역 보행량 및 변화량	%	마중물 사업 외 공공부문 신규 고용창출 건수	건
	전체사업체 수 및 변화량	%	신규 영업신고 및 허가 건수	건
	세수증가를	%	상가 공실 감소율	%
	전입률 증가율	%	재생사업에 의해 파생되는 고용인구수	인
	고용인구 증가율	%	창업률	%
	유동인구 증가율	%	사업체수 증가율	%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지역브랜드 개발 건수	건	제도(조례, 가이드라인 등) 개선 건수	건
	상생 협약 체결 건수	건	지역공동체 발굴(신규) 건수	건
	경관 협정 체결 건수	건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건
	모니터링 운영 건수	건	민간 협력을 위한 협의 및 협력 건수	건
	기금조성 건수	건	(부동산시장영향) 지가 및 매매가상승률	%
	(부동산시장영향) 부동산가격실태 조사	-	(부동산시장영향) 임대료상승률	%
지자체 자체 지표	언론매체(보도자료) 홍보 건수	건	지역 역사 관련 시설 정비 및 조성 건수	건
	소식지 발간 건수	건	문화 예술 관련 시설 정비 및 조성 건수	건
	홈페이지 홍보 건수	건	관광 관련 시설 정비 및 조성 건수	건
	SNS 홍보 건수	건	지역 역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건수	건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설명회 등 홍보 건수	건	문화 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건수	건
	도시재생서포터즈 활용 건수	건	관광 관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건수	건
	() 시설 정비 및 조성 건수	건	()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건수	건
	문화예술관련 시설 연간 방문자 수 및 변화량	인, %	관광 관련 시설 연간 방문자 수 및 변화량	인, %
	역사관련 시설 연간 방문자 수 및 변화량	인, %	활성화계획 외의 문화예술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건수	건
	역사관련 콘텐츠 민간유지 실적 건수	건	관광 관련 콘텐츠 민간유지 실적 건수	건
	활성화계획 외의 역사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건수	건	활성화계획 외의 관광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건수	건
	문화예술관련 콘텐츠 민간유지 실적 건수	건		

주 1. 회색 칸의 지표는 성과지표의 예시로서, 성과지표란 도시재생사업의 직접적 실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에 의해 마중물(국비)이 투입된 세부사업들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함

2. 회색 칸의 지표는 효과지표의 예시로서, 효과지표란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로 마중물(국비)이 투입되지 않고 활성화지역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업 혹은 외부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8.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세종: 국토교통부, 158-159.

2)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 지표

부표 3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활성화계획 진단지표

구분	지표명	산출식	출처	구축년도	구축범위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인구사회	인구 감소율	과거 30년간 인구수 최고치 대비 감소율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8~'15 (5년단위)	●	●	
	인구 연속감소년도	최근5년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연수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08~'16	●	●	
산업경제	사업체감소율	과거 10년간 사업체수 최고치 대비 감소율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2~'14	●	●	
	사업체 연속감소년도	최근5년간 연속으로 사업체수가 감소한 연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7~'14	●	●	
물리환경	노후건축물 비율	$(\text{노후건축물수} / \text{총건축물수}) \times 100$	건축물대장 (세움터/국토교통부)	'16	●	●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분석지표

<http://www.city.go.kr/portal/notice/opensys/contents02/link.do> (2019년 3월 15일 검색)

부표 4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쇠퇴진단 지표

구분	지표명	산출식	출처	구축년도	구축범위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인구사회	노령화지수	$(65\text{세 이상 인구수} / 15\text{세미만 인구수}) \times 1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	●
		$(65\text{세 이상 인구수} / 15\text{세미만 인구수}) \times 100$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00~'14	●	●	
	순이동률	$(\text{총전입 인구수} - \text{총전출 인구수}) / \text{총 인구수} \times 100$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00~'14	●		
	인구변화율	$(\text{기준연도총인구수} - \text{비교연도총인구수}) / \text{비교연도총인구수} \times 1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5,'10	●	●	●
		$(\text{기준연도총인구수} - \text{비교연도총인구수}) / \text{비교연도총인구수} \times 100$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01~'14	●	●	
	평균 교육연수	국민의 총 교육연수 / (만 6세이상 인구수 - 재학생인구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독거노인 가구비율	$(65\text{세 이상 1인가구수} / \text{전체 가구수}) \times 1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기초생활수급자 (천인당)	$(\text{기초생활수급자수} / \text{총인구수}) \times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00~'14	●	● 10~14	

구분	지표명	산출식	출처	구축년도	구축범위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소년소녀가장 (천인당)	(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총인구수) × 1000	가정위탁국내입양 소년소녀가정현황 (보건복지부)	'00,'05,'10	●		
	고령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	●
		65세 이상 인구수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00~'14	●	●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구수/(15세이상 ~ 65세미만 인 구수)×1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	●
		65세 이상 인구수/(15세이상 ~ 65세미만 인 구수)×100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00~'14	●	●	
	세입자가구비율	세입자 가구수/총 가구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 65세 미만 인구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	●
		15세 이상 ~ 65세 미만 인구수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00~'14	●	●	
산업 경제	중사자수 (천명당)	(총중사자수/총인구수)× 1000	사업체노동실태 현황(고용노동부)	'00,'05,'10	●	●	
	사업체당 중사자 수	총중사자수/총사업체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0~'13	●	●	●
	제조업 중사자 비율	(제조업중사자수/전산업중 사자수) × 100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0~'13	●	●	●
	고차산업 중사자비율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중사자수/전산 업중사자수) × 100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0~'13	●	●	●
	제조업체 증감율	(기준년도제조업체수 -비교년도제조업체수) / 비교년도제조업체수 × 100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1~'13	●	●	●
	주요산업별 중사자수	시군구 기준 가장 많은 중사자수를 포함하는 산업의 중사자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0~'13	●	●	●
	재정자립도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재정고 (행정자치부)	'00~'14	●		
	지방세액 (1인당)	지방세총액/총인구수	지방세표작성보고 (행정자치부)	'00~'13	●		
	지가변동률 (주거)	지가변동률(주거)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한국감정원)	'00~'14	●		
	지가변동률 (상업)	지가변동률(상업)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한국감정원)	'00~'14	●		
	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보험료총액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06~'14	●		
	도소매업중사자 수(천명당)	(도소매업중사자수/총인구수)× 1000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0~'13	●	●	
	도소매업체 증감율	(기준연도 도소매업체수-비교연도 도소매업 체수)/비교연도 도소매업체수 × 100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1~'13	●	●	●

구분	지표명	산출식	출처	구축년도	구축범위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총 사업체수	총 사업체 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0~'13	●	●	●
	총 사업체수 증감율	(기준연도총사업체수-비교연도총사업체수)/ 비교연도 총사업체수×100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1~'13	●	●	●
	총 종사자수 증감율	(기준연도 총종사자수-비교연도총종사자수)/ 비교연도 총종사자수×100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01~'13	●	●	●
물리 환경	노후주택비율	(20년이상경과된주택수/총주택수) X 1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	●
	신규주택비율	(최근5년 안에 신축된 주택수/전체 주택 수)×1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	●
	소형주택비율	(전용면적19평이하주택수/전체 주택 수)×1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	●
	공가율	(공가수/전체 주택수)×1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부동산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단위면적당 가격(원/㎡))의 평균	부동산공시지가 (한국감정원)	'00,'05,'10	●	●	●
	노후건축물비율	20년경과 건축물수/총 건축물 수×100	세움터 (국토교통부)	'12,'13,'14	●	●	●
	주거면적(1인당)	거처의 연면적/거주민구수	인구총조사 (통계청)	'00,'05,'10	●		
	주택보급률	(총주택수 + 공가수)/보통가구수×100	인구총조사 (통계청)	'00,'05,'10	●		
	접도율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필지수/ 전체 필지수)×100: 공시지가 토지특성에 기 초하여 세로(8m) 까지만 구축 가능	부동산공시지가 (한국감정원)	'00,'05,'10, '12,'15	●	●	●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분석지표

<http://www.city.go.kr/portal/notice/opensys/contents02/link.do> (2019년 3월 15일 검색)

부표 5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잠재력 지표

구분	지표명	산출식	출처	구축년도	구축범위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인적 기반	대졸인구비율	대학교(4년제이상) 졸업자수/총인구수 × 10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여성중사자비율	여성중사자수/총중사자수 × 100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00,'05,'10	●		
	20세미만 인구성장률	(비교년도20세미만 인구 - 기준년도 20세미만 인구 / 기준년도 20세미만 인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00,'05,'10	●		
	투표율(지자체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최근 5년간 평균투표율 (지자체단체장/국회의원/대통령)	선거정보도서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0,'05,'10	●		
경제 기반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재정고 (행정자치부)	'00,'05,'10	●		
	경제활동인구대비 중사자수	총 중사자수 / 15세이상~65세미만 인구수	사업체노동실태 현황(고용노동부)	'00,'05,'10	●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총생산액/총인구수	시도 홈페이지	'00,'05,'10	●		
	특허출원건수	지역내 특허출원건수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05,'10	●		
	1인당 주민세	지역총주민세/총인구수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00,'05,'10	●		
생활 기반	1인당 공원면적	도시공원총면적/총인구수	통계연보 (시도, 시군구)	'00,'05,'10	●		
	도로밀도	총도로연장/총면적	통계연보 (시도, 시군구)	'00,'05,'10	●		
	1만인당 공무원수	(공무원수/총인구수) × 10000	통계연보 (시도, 시군구)	'00,'05,'10	●		
	건축허가면적 증감률	(기준연도건축허가면적 - 비교연도건축허가면적) / 비교연도건축허가면적 × 100	통계연보 (시도, 시군구)	'00,'05,'10	●		
	주민등록인구 전출입률	(전입인구-전출인구)/총인구수 × 100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00,'05,'10	●		
사회 문화 기반	폐기물 재활용률	(폐기물재활용량/전체폐기물발생량) × 100	통계연보 (시도, 시군구)	'00,'05,'10	●		
	1만인당 사회복지 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총인구수) × 10000	통계연보 (시도, 시군구)	'00,'05,'10	●		
	1만인당 문화체육 시설수	(문화체육시설수/총인구수) × 10000	통계연보 (시도, 시군구)	'00,'05,'10	●		
	1만인당 축제건수	(축제수/총인구수) × 10000	통계연보 (시도, 시군구)	'00,'05,'10	●		
	비영리단체수	지역내 비영리단체수	비영리단체현황 (행정자치부)	'00,'05,'10	●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분석지표

<http://www.city.go.kr/portal/notice/opensys/contents02/link.do> (2019년 3월 15일 검색)

3) 도시재생정책백서 지표

부표 6 | 도시재생선도사업 사업특성 및 실적지표 세부내용

목표	주요고려부문	사업특성 및 실적지표		
		대분류		소분류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적 재생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사업 직접적 참여로 창출된 고용 건수
			지역 경제활동 증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고용 건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지역복지 증대	사회적 재생	지역사회 복지시설 확충	지역 복지시설 조성 건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	지역 복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건수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물리·환경적 개선	물리·환경적 재생	노후 건축물 정비	빈집 정비 건수
				빈점포 정비 건수
				집수리 건수
			신축건물 정비	신규 조성 건수
			외부 환경 개선	가로 환경 개선 건수
				공공공간 환경 개선사업 및 조성 건수
				유흥도지 활용 건수
				주차시설 확충 건수
			생활안전 증진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사업 건수
				생활안전 프로그램 운영 건수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 경관회복	지역특성화	역사·문화적 재생	지역 역사가치 향상	지역 역사관련 시설 정비 및 조성 건수
				지역 역사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횟수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예술 관련 시설 정비 및 조성 건수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횟수
			지역 관광 활성화	관광 관련 시설 정비 및 조성 건수
				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횟수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역량강화	지역 공동체 재생	역량강화교육	
			주민주도 사업	
			지속성 강화 사업	

자료: 박성남 외. 2017. 도시재생 정책백서 2017 II.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1.

부표 7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행정효과지표

목표	행정효과지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미중물 사업 외 공공부문 신규 고용창출 건수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적 재생	지역 경제활동 증진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신규 영업신고 및 허가 건수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연간 폐업신고 건수 및 변화량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전체 사업체 수 및 변화량
지역복지 증대	사회적재생	지역 복지시설 확충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복지 관련 상시프로그램 개수 및 변화량
		지역 복지서비스 증진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복지 관련 상시프로그램 개수 및 변화량
물리·환경적 개선	물리·환경적재생	노후건축물 정비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빈집 총 개수 및 변화량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빈점포 총 개수 및 변화량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개수 및 변화량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리모델링 대수선 이상 신고 건수
		신축건물 정비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신규건축 허가 건수
		외부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공공공간 개수 및 변화량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유희토지 개수 및 변화량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접도조건 개선 필지 개수
지역 특성화	역사·문화적 재생	지역역사가치 향상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역사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건수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역사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총 예산
		문화·예술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예술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건수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예술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총 예산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전시 및 공연 개최 건수
		지역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 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건수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 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총 예산

자료: 박성남 외. 2017. 도시재생 정책백서 2017 II.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2-13.

부표 8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효과지표

목표	지역효과지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민간부문 신규 고용창출 건수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적 재생	지역 경제활동 증진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사업체 연간 총 매출액 변화량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상가지역 보행량 및 변화량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
지역복지 증대	사회적재생	지역 복지시설 확충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복지시설 연간 이용자 수 및 변화량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지역 복지서비스 증진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복지 상시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복지시설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물리·환경적 개선	물리·환경적재생	노후건축물 정비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마중물사업 예산 외 집수리 건수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부동산 거래 건수 및 변화량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동 단위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증가율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평균임대료 증가율
		신축건물 정비	-
		외부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주거환경 만족도
지역 특성화	역사·문화적 재생	지역역사가치 향상	도시재생사업 전·후 활성화지역 내 유흥도지 포함 민간부문 자율적 환경정비 건수
		문화·예술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활성화지역 내 범죄 불안도 감소율
		지역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전·후 생활안전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및 변화량
		지역 역사가치 향상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지역 역사관련 콘텐츠 민간유치 실적 건수
		문화·예술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전·후 지역 역사관련 시설 연간 방문자 수 및 변화량
		지역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전·후 지역 역사관련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및 변화량
		문화·예술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지역 역사관련 시설 방문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지역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시작 이후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민간유치 실적 건수
		문화·예술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전·후 문화예술 관련 시설 연간 방문자 수 및 변화량
		지역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전·후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및 변화량

자료: 박성남 외. 2017. 도시재생 정책백서 2017 II.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4~15.

2) 지자체 관리 지표

(1)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변화) 모니터링 공통지표

부표 9 |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변화) 모니터링 공통지표

구분				지표	세부항목	조사방법
공통	기본 적용 지표	함께 잘살고	우선진단지표	상권활성화정도	상권역동성(창폐업율)	통계자료
					영업기간 중위수	
				유동인구	대중교통 이용자수	통계자료
					시간대별 승하차 패턴	
				앵커시설방문객수	-	현장조사
			중장기 진단지표	인구·가구 구조	연령별 인구수	통계자료
					가구원수별 가구수	
					점유형태별 가구수	
				순인구이동률	-	통계자료
			함께 행복하고	주택거래	㎡당 주택 실거래 가격	통계자료
					주택 실거래 건수	
			우선진단지표	전축물변경(개량)사항	-	통계자료
				기초생활인프라수	주차장	현장조사
					공원	
					보육시설(어린이집)	
					공공체육시설	
					도서관(작은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역거주(생활)만족도	-	설문조사
				앵커시설조성수	-	현장조사
			중장기 진단지표	앵커시설이용도	-	설문조사
				신축 허가건축물 수	-	통계자료
		함께 만드는	우선진단지표	공동체활동참여도	주민설명회 참여자 수	현장조사
					공동체 프로그램 수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 수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자 수	
				추진조직역량	주민협의체 회원 수	현장조사
					지역 주민·상인 조직 수	
					활동가(코디네이터) 수	
				공동체활동만족도	-	설문조사
			도시재생사업참여도	주민공모사업 수	주민주의사업 수	현장조사
					소식지 등 홍보수단 확보 수	

구분			지표	세부항목	조사방법
유형별 적용 지표		중장기 진단지표	사회적경제조직수	지역축제 수	현장조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도시 경제기반형	우선진단지표	지역사회소속감	-	설문조사
			신축건물연면적	-	통계자료
		중장기 진단지표	종사자 변화율	-	통계자료
			지역 내 업종변화율	-	통계자료
		중장기 진단지표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	통계자료
		우선진단지표	3년이상 영업점포수	-	통계자료
			상공인 체감경기	-	설문조사
		중장기 진단지표	지역 내 업종변화율	-	통계자료
		우선진단지표	주민생활안전도	-	설문조사
			공용이용시설수	놀이터, 마을회관	현장조사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노인복지시설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사	
	근린재생 중심 시가지형	중장기 진단지표	노후건축물비율	-	통계자료
			주거비용체감정도	-	설문조사

자료: 서울특별시. 2016.

2) 부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성과평가 지표

부표 10 | 부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성과평가 지표

핵심목표	세부목표	성 과	핵심 성과효과	세부조사항목
도시경제 활성화	선도사업의 생산유발	사업체수 증가	생산유발효과	인근 사업체별 면적/월매출(설문)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업종별 사업체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현재시점 업종별종사자수 (전시점업종별 종사자수)
		업종별 종사자수		
		사업체당 생산액(매출액) 증가		
		신규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유발	사업체수 증가	부가가치 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산업(업종)별 부가가치계수
		사업체당 부가가치액 증가		
	소득증대	종사자수 증가	총 임금 증가	업종별 종사자수 업종별 1인당 임금액 (한국은행 지역산업연 관표의 산업별 피용자보수 이용) 개별 공시지가, 임대료
		1인당 임금액 증가		
		개별 공시지가		
		임대료		
	방문객 증가	부산역 방문객수 증가	방문객 1인당 지출액 증가	부산역 방문객수(부산역KTX 통계) 방문객 1인당 지출액:문광부 국민여행실태 조사
		부산역 방문목적 다양	다양한 방문목적	
공동체 활성화	지역애착심 소속감 증가	지역애착심 증가	지역애착심 소속감 증가	관련협의회 등 자치조직 구성/운영건수 상인/주민 축제 및 행사 개최 수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인원 참여율 70년 이전 주택비율(노후주택비율)
		지역소속감 증가		
		주거만족도 증가		
	교육 만족도	교육만족도 상승		거주지역교육여건 만족도
	지역인지도 상승	지역 인지도 상승	지역인지도 상승	부산하면 떠오르는 장소(설문)
	기업 및 상인 만족도 상승	사업체 만족도 상승	사업체 만족도 상승	기업(상인) 만족도 조사(설문)
도시환경 개선	주변지역 활성화	주변지역 활성화	주변지역 활성화	용도현황(토지이용, 건축물)
				주변 공실률(상업, 오피스, 주거 등)
				유동인구
				신규 건축물/리모델링수(건축허가수)
공공 서비스 활성화	시민과 가까운 공공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접근/환승 편리성	대중교통 접근 만족도	대중교통 접근에 만족하는 정도(설문)
			대중교통 환승 편리성	대중교통 환승에 만족하는 정도(설문)
		생활인프라 구축(서울사례)	공공서비스 만족도 증대	공공서비스 만족도(설문)
			생활 편리성 증대	버스 지하철 기차 승하차 인원 증가, 생활편리성 증가(설문)

자료: 부산광역시, 2017.

3) 수원형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지표

부표 11 | 수원형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지표

구분		지표
사회적 재생	주민참여활성화	자치조직 가입률
		상인회 회원수 및 만족도
		주민협의체 구성 여부
		주민회의 횟수 및 참여자
	역량강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 수/참여자 수
	사회적 의식 변화	범죄 건수/발생률
		쓰레기 불법투척 공무원 단속 및 주민신고건 수
	인구유입	전출입 인구 수
	주거복지 실현	기초생활수급자 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
경제적 재생	산업·경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공공기관 수/공공기관 종사자 수
		일자리 창출 현황
	상가 활성화	업종별 현황
		빈점포수(상가 공실률), 빈점포 활용 신규 창업수
		주요지점 지가 및 임대료
		주요지점 통행량
		상가신축 및 리모델링 수
	상생체계 구축	프랜차이즈 수
		사회적 기업 수(마을기업 등)
		상생협약 체결 수(소유주와 임차인 등)
문화적 재생	문화자원 활용 및 만족도	주요 시설 방문객 수
		창조사업 투자액
		지역특성 만족도
물리적 재생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보수 건수
		신규주택 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가로환경 개선	가로환경 만족도
	지속가능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친환경건축물 보급률

자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2017.

4)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성과평가 지표

부표 12 |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성과평가 지표

분야	구분	세부목표	측정지표	측정자료
경제	실적	일자리창출	사업체수	영주시 통계연보
			중사자수	신용카드매출자료
		소득증대	매출액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
	효과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	지역 브랜드 개발 건수	자체조사
			지역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
		지역경제활성화	주요지점 통행량 수	유동인구 조사 측정
			연간 창폐업신고 건수 및 변화량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
물리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실적	주거환경	건물노후도	한국감정원
		주민편의·쾌적성 증대	빈집비율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효과	-	주거환경반족도(전반, 주택)	국가통계포털
		-	주거환경반족도(전반, 주택)	설문조사/사회조사결과 과보고서
사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	인구변화	인구수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국가통계포털
		주거안정성 제고	이주이사	설문조사/ 사회조사결과보고서
		사회통합	사회적 신뢰	설문조사/ 사회조사결과보고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	설문조사/ 사회조사결과보고서
공동체 역량 (공동체의 자립적 운영과 협력)	실적	주민참여기회확대	마을기업이나 재생센터의 직업 및 교육프로그램 수/참여비율	자체조사
			정책참여(주민제안건수)	
			정기적 소모임 구성 및 운영 동네모임/ 조직참여의사	
		공동체의 조직역량강화	조직된 공동체의 수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지역사 회 기여도	자체조사
정책·제도 지원 (도시재생 자생기반 구축)	실적	민관협력 증진	민관협력 사업추진 건수	자체조사
			관련 부서 협의 및 협력 건수	
		도시재생의 자생력 강화	창업지원 컨설팅 건수	자체조사
			주민주도사업 운영건수	
			사업지속기간 사업비 대비 주민출자금 비율	

자료: 영주시. 2018. 85-86.

2. 설문조사지

1) 취업자 대상 설문조사지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취업자 설문조사

본 설문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로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성의껏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답변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및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됩니다.

2019년 10월

주관 기관	 KRIHS 국토연구원
조사 기관	 (주) GRI 리서치 GRI Research Co., Ltd. http://www.grikorea.co.kr (조사책임 : 소진원 본부장 / 02-6263-6700)

1. 고용 현황 관련 문항

【문1】 (종사상 지위) 현재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표의 (1))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종사상 지위 (1)	종사상 지위 (2)
1) 임금근로자	※ 종사상 지위 (1)에서 “1) 임금근로자”를 선택한 분들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상용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 직원 ②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③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자영업주	※ 종사상 지위 (1)에서 “2) 자영업주”를 선택한 분들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자영자 :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② 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3) 해당사항 없음 (설문 종료)	

【문2】 (종사 분야) 현재 종사하시는 분야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공공 분야	①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자 ② 시설 운영관리자 ③ 공공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이외) 고용자 ④ 활동가, 해설사, 코디네이터 등
사회적경제 분야	⑤ 사회적기업 (부처형, 지자체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⑥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⑦ 마을기업
지역산업·민간분야	⑧ 민간기업(대·중견·중소기업) ⑨ 자영업(개인·공동창업, 자영자·고용주 등) ⑩ 건설현장 고용

II. 고용 기회 관련 문항

【문4】 (고용개방성) 현재 하시고 있는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조건을 중요도별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학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직무 적합 연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전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경력(근로 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자격증 보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출신 지역 (해당지역 거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 (취약계층 고용)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채용시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가 있는 대상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본인이 해당자가 아니라도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 또는 창업하신 사업장의 일반적 조건에 해당할 경우)

- ① 청년 ② 여성 ③ 고령자 ④ 장애인 ⑤ 기타 ()

Ⅲ. 고용 형태 관련 문항

【문6】 (고용 형태) 다음은 귀하의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주된 고용 형태에 대한 비교입니다. 해당 사항에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이전 직장	현재 직장
1) (주된) 고용형태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자영업주(자영자·고용주) ⑤ 미취업 ⑥ 기타_____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자영업주(자영자·고용주) ⑤ 기타_____
	※ 고용형태 구분 ① 상용근로자: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 직원 ② 임시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③ 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④ 자영자: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⑤ 고용주: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2) (주된) 주간근무 일수	① 1~2일 ② 3~4일 ③ 5일 이상 ④ 해당 없음 (미취업일 경우) ⑤ 기타_____	① 1~2일 ② 3~4일 ③ 5일 이상 ④ 기타_____
3) (주된) 일 근무 시간	① 4시간 미만 ②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③ 8시간 이상 ④ 해당 없음 (미취업일 경우) ⑤ 기타_____	① 4시간 미만 ②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③ 8시간 이상 ④ 기타_____
4) 4대 보험가입 여부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해당 없음 (미취업일 경우) ④ 기타_____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기타_____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문7】 (근무수입) 다음은 귀하의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무 수입(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이전 직장	현재 직장
1) (주된) 임금 수급기간	① 월급 ② 주급 ③ 일급 ④ 시급 ⑤ 기타_____	① 월급 ② 주급 ③ 일급 ④ 시급 ⑤ 기타_____
2) (주된) 임금 형태 (* 복수응답 가능)	① 정기 임금 ② 배당금 ③ 지역화폐 ④ 기타_____	① 정기 임금 ② 배당금 ③ 지역화폐 ④ 기타_____

IV.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관련 문항

【문8】 현재 수입이 있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생계유지를 위해서
 ③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⑤ 저축을 위해서
 ⑦ 기타(_____)
- ②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④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⑥ 집에 있으면 무료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문9】 (일자리 만족도) 다음은 일자리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만족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 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약간 만족함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고용 기회 : 고용기회 제공, 취업(창업) 정보의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고용 형태 : 정규직/비정규직(고용안정), 계약기간, 보험 가입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근무 환경 : 작업 환경, 직장 내·외적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근무 수입 : 급여 수준, 복리 후생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개인적 성취감 : 업무를 통한 성취감, 전공·적성·장래성에 대한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직장에 대한 기대 : 직장의 성장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1~5를 합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0】 귀하는 향후 3년 이내에 이직(전직)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문10-1로 이동) ③ 생각해본 적이 없다 (문1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문11로 이동)

【문10-1】 이직(전직)을 고려하신다면, 주로 어떤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연봉 및 복리후생 수준이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 ②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 ③ 근무시간 과다 등 업무량이 많아서
- ④ 계약만료, 권고사직 때문에
- ⑤ 장기적으로 회사의 비전과 전망이 낮아서
- ⑥ 창업(자영업), 학업 등 새로운 진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 ⑦ 상사 및 동료 등 직장 내외 인간관계 때문에
- ⑧ 전공, 적성, 지식,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
- ⑨ 기타()

V.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문항

【문11】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셨는지를 표시해 주시고, 이용해보셨다면 실제 취업 및 창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제공 프로그램	【문11-1】 이용 경험 유무	【문11-2】 도움 여부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됨	보통	약간 도움이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도시재생대학 교육	① 이용 ② 미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직업 훈련 프로그램	① 이용 ② 미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취업 지원 프로그램	① 이용 ② 미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창업 지원 프로그램	① 이용 ② 미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2】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
- ②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유치기업 및 기관에 주민 우선 채용
- ③ 취약계층(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취업·창업 지원 확대
- ⑤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
- ⑥ 도시재생 관련 직업교육 훈련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 ⑦ 타 부처,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활용 및 연계체계 강화
- ⑧ 기타()

【문13】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자영업(창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창업 관련 교육
- ② 창업 및 경영 1:1 맞춤형 컨설팅
- ③ 창업 및 운영자금의 장기, 저리 지원
- ④ 온라인상거래 지원
- ⑤ (보육센터 등) 창업공간 지원
- ⑥ 청년, 노인 고용장려금 등 임금 지원
- ⑦ (세무, 회계, 법률 등) 행정서비스 지원
- ⑧ (자격증 과정 등) 직업훈련 지원
- ⑨ 벤처기업 육성 지원
- ⑩ 기타 ()

VI. 응답자 일반 현황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만()세
3. 현재 직장 근무기간 (창업기간)	()개월
3. 실제거주지	()도/시 ()시/군/구 ()읍/면/동
4. 현 거주지 거주기간	약 ()년 ()개월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본 설문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로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성의껏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답변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및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됩니다.

2019년 10월

주관 기관



KRIHS 국토연구원

조사 기관



(주) GRI 리서치
GRI Research Co., Ltd.
http://www.grikorea.co.kr

(조사책임 : 소진원 본부장 / 02-6263-6700)

본 연구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여러 정비사업 및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 공공투자를 통하여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는 크게 다음과 같이 1) 공공분야, 2) 사회적경제 분야, 3) 지역산업·민간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종사 분야 (1)	종사 분야 (2)
1) 공공 분야	①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자 ② 시설 운영관리자 ③ 공공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이외) 고용자 ④ 활동가, 해설사, 코디네이터 등 ⑤ 기타
2) 사회적경제 분야	① 사회적기업 (부처형, 지자체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②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③ 마을기업 ④ 기타
3) 지역산업·민간분야	① 민간기업(대·중견·중소기업) ② 자영업(개인·공동창업, 자영자·고용주 등) ③ 건설현장 고용 ④ 기타

본 조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사업단계별로 정책의 중요도와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문5】 다음 중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순서대로 3개 선택하여 주십시오. 다음의 도시재생사업 유형별로 각각의 지원정책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
- 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유치기업 및 기관에 주민 우선 채용
- 3) 일반 지역주민 대상 취업·창업 지원 확대
- 4) 취약계층(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취업·창업 지원 확대
- 5)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
- 6) 도시재생 관련 직업교육 훈련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 7)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
- 8)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저렴 창업공간의 효율적 조성 및 공급 강화
- 9) (사회적, 민간, 청년)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10) 기업유치, 지역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강화
- 11) 도시재생과 민관산학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재 양성
- 12) 도시재생과 타 부처,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활용 및 연계체계 강화
- 13) 안정적인 일자리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운영

【문6】 다음 중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순서대로 3개 선택하여 주십시오. 다음의 도시재생사업 유형별로 각각의 지원정책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
- 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유치기업 및 기관에 주민 우선 채용
- 3) 일반 지역주민 대상 취업·창업 지원 확대
- 4) 취약계층(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취업·창업 지원 확대
- 5)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
- 6) 도시재생 관련 직업교육 훈련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 7)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
- 8)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저렴 창업공간의 효율적 조성 및 공급 강화
- 9) (사회적, 민간, 청년)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10) 기업유치, 지역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강화
- 11) 도시재생과 민관산학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재 양성
- 12) 도시재생과 타 부처,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활용 및 연계체계 강화
- 13) 안정적인 일자리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운영

【문7】 도시재생사업 **추진단계**를 계획수립-사업추진-운영관리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을 사업단계별로 3개씩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7-1】 계획수립단계	【문7-2】 사업추진단계	【문7-3】 운영관리단계
1순위()	1순위()	1순위()
2순위()	2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	3순위()
일자리 지원 정책		
1)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 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유치기업 및 기관에 주민 우선 채용 3) 일반 지역주민 대상 취업·창업 지원 확대 4) 취약계층(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취업·창업 지원 확대 5)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 6) 도시재생 관련 직업교육 훈련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7)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 8)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저렴 창업공간의 효율적 조성 및 공급 강화 9) (사회적, 민간, 청년)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10) 기업유치, 지역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강화 11) 도시재생과 민관산학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재 양성 12) 도시재생과 타 부처,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활용 및 연계체계 강화 13) 안정적인 일자리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운영		

【문8】 도시재생사업의 **일자리 창출 분야**를 공공, 사회적경제, 지역산업·민간분야로 구분하였을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을 분야별로 3개씩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8-1】 공공분야	【문8-2】 사회적경제 분야	【문8-3】 지역산업·민간분야
1순위()	1순위()	1순위()
2순위()	2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	3순위()
일자리 지원 정책		
1) 도시재생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의 발굴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 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유치기업 및 기관에 주민 우선 채용 3) 일반 지역주민 대상 취업·창업 지원 확대 4) 취약계층(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취업·창업 지원 확대 5) 도시재생 분야 일자리의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 수준 개선 6) 도시재생 관련 직업교육 훈련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7) 도시재생 앵커시설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 8)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저렴 창업공간의 효율적 조성 및 공급 강화 9) (사회적, 민간, 청년)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10) 기업유치, 지역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강화 11) 도시재생과 민관산학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재 양성 12) 도시재생과 타 부처,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활용 및 연계체계 강화 13) 안정적인 일자리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운영		

응답자 일반 현황

【문1】귀하의 다음 중 어디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행정 ④ 시민사회단체 ⑤ 기타(_____)

【문2】귀하의 전문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도시계획 및 설계 ② 도시지역경제 ③ 교통 및 인프라
④ 주택 및 토지정책 ⑤ 환경정책 및 계획 ⑥ 기타(_____)

【문3】귀하의 근무지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서울인천경기 ② 충청남북 ③ 경상남북 ④ 전라남북 ⑤ 강원 및 제주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본 19-16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진 임상연, 이진희, 권규상, 최정윤, 손경주, 송준환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쇄 2019년 11월 27일

발행 2019년 11월 30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가격 8,000원

I S B N 979-11-5898-474-8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9,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시십시오.

임상연, 이진희, 권규상, 최정윤, 손경주, 송준환. 2019.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A Research on Encourag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Job Creation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제3장 도시재생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분석

제4장 해외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제5장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